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2. 04

KDI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자문

전홍택 | 선임연구위원

고일동 | 선임연구위원

편집주간

이 석 | 북한팀장

편집위원

김두얼 | 연구위원

김상기 | 전문위원

이재호 | 전문위원

편집간사

김은영 | 전문연구원

이원경 | 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68-4355

팩스번호 968-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3

〈좌담회〉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남북관계 전망

20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 박형중

30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미관계 전망 | 신범철

45

김정은시대 북·중관계 전망 | 신상진

연구 논문

61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지영

82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 서종원

북한경제연구협의회

105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 | 김경술

경제 자료

1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주요 내용

134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주요 내용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1일~4월 17일)

143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동향과 분석

〈좌담회〉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남북관계전망

구갑우, 김흥규, 이상현, 현성일, 이석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박형중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미관계 전망

신범철

김정은시대 북·중관계 전망

신상진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남북관계 전망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4월 18일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 이상현 외교부 정책기획관, 현성일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과 시각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등에 대해서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전문가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남북관계 전망〉

-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10:30~12:30
- 장 소: KDI 별관 4-1세미나실
- 사 회: 이석(KDI)
- 토론자: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홍규(성신여대 교수), 이상현(외교부 정책기획관), 현성일(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석: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가 는 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데다, 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29 북미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이의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서 발사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신속히 발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도 폭발이라는 실패 상황으로 종결됨으로써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대내 정세에도 상응하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다양한 ‘팩트’를 알아보고, 이것이 한반도 및 주변국에 미칠 파장을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

좌담회의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했으면 한다. 좌담회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에 전문가 분들께서 답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먼저, 북한이 무리하게 4.13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동기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한다. 올 초 2.29 북미합의로 6자회담 재개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북한이 이러한 화해무드를 깨트리면서까지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외의 상황이었다. 물론 북한이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요인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이나 4.15 강성대국 선언의 필요성, 북한 내부의 군부를 위시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과 같은 북한측 요인과 함께, 이제까지 경색되어온 남북관계 및 북미·북중관계와 같은 국제적 요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패널들께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를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번에 공개된 ‘광명성 3호’ 위성은 기능면에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정도 평가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29 북미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발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전략적·기술적 요인의 3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은 ‘체제 정비용’으로, 김정은 체제로의 이전을 하는 기간에 주민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하고, 정권의 위신을 세우고, 소위 유훈정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은 대미협상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협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기술적 요인으로, 4.13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실패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큰 손해가 아니므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북한은 동 발사의 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따른 '실용위성' 발사라고

하나, 주요국들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 Space Launch Vehicle)의 형상, 구성요소 및 적용기술이 거의 동일하므로, 동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목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로 인해 현재 북한은 2.29 북미합의에서 합의한 대북영양지원도 받기 어렵게 되었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 발사가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 이외에도, 북한의 동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설(說)들이 있다. 중국 측의 분석을 살펴봐도,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구갑우: 이상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요인을 덧붙이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술혁신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金正은 북한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됐다고 연설을 하였지만, 사실상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金正은 연설에서도 보면 강성국가 건설과 더불어 인민생활 향상이 최종적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자원, 기술이 필요한데, 150일 전투 등 대량의 노동투입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북미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량의 자원유입도 어려우므로, 북한이 기술발전에 주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이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 CNC라는 말과金正은이 현재 동의어가 될 정도로金正은은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로켓기술 같은 경우는 북한의 기술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발사에 실패는 했지만, 이상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 측면에서 북한이 얻는 것이



있다. 실험을 해봐야 실패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조선신보」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광명성 2호 발사 시 「조선신보」는 스핀 오프(spin-off, 기술 이전)를 직접 언급하여, 군수 공업의 기술을 민수 공업으로 이전하면서 경제발전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시점은 이상현 박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내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대내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발전의 한 노선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2.29 북미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이유는 북미대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먼저 북미 간에는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존재한다. 2002년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첫째날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둘째날에는 강석주 제1부상을 만나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물어봤을 때, 강석주는 “핵보다 더 한 것도 갖고 있다” 고 대답하여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 측이 “핵보다 더 한 것도 가질 권리가 있다(be entitled to)” 는 의미로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미대화에 있어서 여전히 소통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북미합의는 여태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해왔다. 즉, 해석의 여지가 많은 말들로 북미 모두 추가협상 카드를 항상 남겨두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1995년에 선군정치 실시를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제네바 합의를 틀로 북한 스스로 생각하는 안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정신에는 반하는 선군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금번 미사일 발사도 2.29합의와는 또 다른 트랙으로 새로운 협상의 카드를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현 박사님께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 북한이 2.29 북미합의 전에 미사일 발사를 통보했다는 설도 있으므로 북한이 2.29 북미합의를 파기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우리는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미사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사일’ 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의 용어 사용에 대해 좀 더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북한의 공식입장은 ‘광명성 3호’ 라는 지구 관측 위성을 ‘은하 3호’ 라는 로켓 운반체로 발사한다는 것이었다. 로켓과 미사일은 같은 운반체를 이용하여 구분이 모호하지만, 두 용어를 향후 북미협정에서도 나누어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현: 구갑우 교수님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다. 먼저, 북한의 2.29 북미합의에 대한 북한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29 북미합의를 북한이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과 과정에 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과거 합의를 보면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2.29 북미합의 이전부터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2.29 북미합의와 북미 영양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주장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에번스 리비어에 따르면, 2.29 북미합의 이전에 북한이 작년 말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2.29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미스터리이다.

두 번째로는 ‘광명성 3호’ 가 과연 ‘미사일’ 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본입장은 ‘실용위성’ 이 목적이고 운반체는 부수적인 것이다. 발사 실패 후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고 했지 로켓이 실패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과학용어로 본다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은 ‘SLV(Space Launch Vehicle, 우주발사체)’ 라고 하는데, 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원리이다. 두부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SLV)이고,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다. 따라서 두부에 무엇이 실리느냐에 상관없이 로켓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SLV와 탄도미사일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도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이 2009년도에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에 가입은 했으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발사물체를 등록을 하는 것은 각 국가가 일종의 소유권을 갖기 위함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발사물체가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는 것을 방증해준다.

이석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북한의 발사 물체가 위성이라기보다는 미사일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북한의 ‘광명성 3호’ 가 ‘미사일’ 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현성일 박사님께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이 북한 내부 및 김정은 체제의 목표 및 욕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현성일: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경축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로 광명성 3호 발사를 준비해왔고, 이는 김정일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100주년 행사 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에 앞서서 미국과 합의를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모순된 행동은 김정일 사후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와 북한 내부 권력의 알력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본다.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은 한국에서와 같이 상부에서 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김정일에게 보고하면 그 문건을 김정일이 결재한 후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같은 시안을 가지고도 각 분야마다 서로 상반되는

보고를 올려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은 보고하기 전에 하부의 정책 작성단계에서 충분히 상의 및 합의가 된 것만 보고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핵 및 미사일 등 안보관련 분야만큼은 다른 분야들과의 사전협의나 합의가 엄격히 차단되었다. '90년대 초에 북미 간 핵협상이 착수될 당시 북한은 외교, 대남, 경제 등 관련 부서들의 핵심인원을 뽑아서 '핵 상무조' 라는 TF팀을 구성했는데, 이들도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북미 합의 시 외무성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김정일의 방침대로만 협의해 온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핵이 계속 개발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가 2.29 북미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모순된 행동을 야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모순된 행동이 겉으로 볼거지지 않았는데, 이는 김정일 사망 전에는 김정일이 노동당 군수공업부, 외무성 등 각 부처의 문건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정일과 같은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진척되었으므로 미사일 발사는 기간을 조정한다는 식의 조율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김정일이 장성택 등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정책을 결정할 것인데 그들 또한 김정일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절대적 지도자로서 외무성과 군부 사이에서 정책결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의 역할을 수행 온 것처럼, 김정일의 조정능력이 없다면 장성택 등 김정일을 보좌해주는 세력들이라도 군부와 같은 강경세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 역시 조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적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 북중 관계를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현성일 박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단 북중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북한이 2.29 북미합의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자

한다. 현성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2011년 7월 제1차 북미 접촉 때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을 미국 측에 알렸고, 이후에도 수차례 그 계획을 미국 측에 알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었고, 미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제3차 북미대화에서의 2,29 북미합의 시, 이 부분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12년 2월 29일, 미국과 핵개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IAEA 사찰 수용 등의 대가로 24만 톤 분량의 '영양지원' 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 측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주장한 것이고, 반면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 글렌 데이비스는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개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핵개발 중단과 관련한 협의에서 북한은 "알았다" 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해석과 미국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상에서의 인식 차이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나뉘게 된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 대해 두 가지 입장으로 접근하였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하는 입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계획에 따르면 북한 신생정권의 정권 정당성을 공고화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려는 입장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한 절충점으로 '위성' 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피력하는 동시에 북한 측 이해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 보면 위성 발사는 미국 측도 충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고,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인식의 차이로 북한은 합의내용을 어긴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미국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예상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북한 측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북중 관계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합의를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당시 이를 북한의 평화적 권리로서 인정해 주었고, 국제사회에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단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중국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 하나는 상당히 강한 대북제재인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합의를 한 것이며, 또 하나는 역으로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다. 이번 위성(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제2차 장거리 미사일(위성) 실험이 대북 제재결의 1718호로는 제재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 어떠한 실험도 위배된다는 내용의 1874호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합의한 중국이 이번 사건을 간과한다면 추후 UN에서 중국이 합의한 어떠한 사안을 부정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한반도 안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의 신속한 유엔 성명에 대한 합의의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의 현재 대외정책을 보면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대외안정을 추구하려는 동기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돌파구는 결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주요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김정일 사후 중국 대북 정책에 대한 대북편향의 이미지, 일련의 어업분쟁 등에서 나타난 한중관계 악화추세는 중국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예: 감정악화의 완화)를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대응을 UN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식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복합적인 고려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재를 해야 하겠으나, 너무 강도 높은 제재가 곤란하고, 북한의 추후 행동에 대한 여지를 여전히 남겨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4가지 제재 조치 중 강도로 보았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비교적 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였으며, 미국도 사실상 중국과 의견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동시에 추후 개선도 하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하는 다목적적인 의장성명 정도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 논의가 자연스럽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파장 즉, 주변국들의 대응 및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한 영향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파장에 대해 토론해 보자. 논의의 순서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우선 먼저 북미 관계, 6자회담, 북중 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파장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4.13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과 이해관계는 조금 복잡할 것 같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한·미·일은 철저한 공조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부정적 입장을 이미 표명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의 대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한·미·일과 지속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따라서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주변국들이 어떤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 조금은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현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북미 관계, 6자회담 등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금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측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북미 관계나 북미대화가 크게 진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은 소강상태로 가는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현성일 박사님이 제기한 것처럼 북한 정책결정 과정이 분절화 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예를 들어, 뉴욕채널에서 이야기한 것, 북경채널에서 이야기 한 것이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해석상의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서로가 진의를 감춘 채 탐색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의 노이즈가 더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다. 즉, 6자회담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라 하더라도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더라도 북한 측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김흥규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신속한 대응은 2009년도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언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중국의 진의인지는 알 수 없다. 원론적인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과 실제로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의장성명 채택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는 “의장성명은 관련국들이 국제 사회의 기본적인 공동인식을 반영해서 논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중국 측은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논의에 참여해서

소통과 대화추진,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 이것을 대국적 견지에서 적절히 처리했다” 고 하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기해야 된다” 며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선택이다” 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도 외형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압박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100% 중국의 진의로 받아들이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부담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전인 4월 10일 중공당교 장롄꾸이(張連奎) 교수가 인민일보 자매지인 「環球時報」에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것이 중국에게 5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 라는 글을 썼다. 그 다섯 가지는 △ 북한이 대표단 참견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을 것인가 △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잘못되어 중국 국경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이 발사 후에 안보리에 회부되면, 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할 텐데 중국은 어떤 표를 던질 것인가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후속 행동을 취할 때,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한반도 정세가 위중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이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므로 앞의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뒤의 두 가지 문제는 향후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김홍규: 이상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관된 입장 속에서 이번 중국의 대응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즉 대북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중국의 북한과의 대화 및 개선은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며, 중국 제18차 당대회가 마무리 되는 금년 10월 이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개연성도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 측은 미국의 지원을 원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이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중국이 최근 상당한 정도의 석유와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보도와 추측성 주장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도된 정도의 지원량이라면 그 실체가 포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정황으로 보아 중국이 북한에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 2011년에만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커녕 오히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활용하여 북한

내정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더 나아가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식 개방 개혁을 따르라고 공개적으로 훈수를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 볼 때 고압적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이 방중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경제협력원칙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르고, 민간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므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순응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북중 간에 서로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북한에서의 위성 발사도 북한이 자주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 북중 관계는 동맹관계로서만 설명할 수 없다. 반면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았을 때, 둘은 협력을 유지해야 할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중국은 결국 포용정책을 다시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위급 인적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금년 10월 제18차 당대회 이후 자연스럽게 교류를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북중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중국으로 인한 변수이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권력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중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으로 인한 변수이다. 현재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경제개혁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이 과거 1, 2차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면 당분간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실험이라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경제개혁을 시작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구갑우: 먼저, 본 질문을 답하기 전에 현성일 박사님의 의견에 덧붙여 북한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하여 언급한 후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성일 박사님께서 김정은 체제의 정책결정 과정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김정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부재로 인해, 2.29 북미합의 이후 바로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2010년과 2012년 당대표자 회의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여주는 당 국가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 국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면, 정책결정 과정이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김정은의 수령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을 ‘김일성 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을 승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이 '김일성 주의' 를 기초로 하며 본인의 고유의 지도력을 가졌었던 것처럼, 김정은도 현재 '김정일 주의' 를 기초로 본인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노동당이 정상화 되었다는 측면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의 체제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정책결정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김정은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 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후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설이 북한 내부적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재 북한의 행보는 이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석 박사님께서 토론 주제로 제시하신 주변국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입장과 북중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양국 간 관계의 지표인데,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고위급 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중국이 좀 더 지원을 했으면 북한의 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는 북중 관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의 올해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김홍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정은의 금년 내 방중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는 김정은 권력의 내부 공고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지명을 받고 1983년에 중국을 방문했다. 정치권력과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후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북중 관계와 6자회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고, 본 회담의 의장 국가는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단순히 북중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국은 반드시 6자회담 문제를 다루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의장서명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 밖의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김홍규 교수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좀 더 덧붙이도록 하겠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로 비판을 하지만, '대국주의'란 단어를 거론하는 것은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북중 관계가 좋아진 200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에도 북한 「노동신문」은 '절름발이 경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주체 경제'를 강조하면서 남한에 빌어먹는 경제를 만드는 것은 후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북중 관계에서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또한 이번 김정은

연설에서 '지정학적 위치' 이라는 말을 쓴다. 북한 외교를 다시 돌아해보면 북한의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중소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계산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중소 갈등'에서 취했던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미중 관계'에서 일종의 값비싼 협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로 이익을 계산하여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정학적 고려를 하면서 등거리 외교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본다. 북한의 중국과 다시 협력을 하고자 하려는 것은 확실히 되지만, 2012년은 6자회담 모든 국가들의 국내정치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외교정책의 입안 및 국제적 합의가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북한의 올해 방중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현성일: 4.13 미사일 발사의 실패가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랐다. 물론 외신기자들이 평양에 많이 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외부에서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므로 인민들이 아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다.

북한에 있어서 미사일 발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축포인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권력층에게든 인민들에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큰 불안, 우려, 동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을 주장해 온 세력(군부)은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패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고 누군가 숙청을 당하겠지만, 역할을 모두 수행했음에도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숙청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숙청여부보다는 추가도발 여부를 더 주목해봐야 한다. 미사일 발사 실패가 소위 말하는 강경파를 입지를 약화시키고, 북미대화나 북중 관계를 중요시하는 온건파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결과도 불러올 수 있지만, '강경=충성'이고 '온건=불충'이라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온건파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강경파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3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더욱 강경한 자세를 고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보리 의장성명까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태도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자신들이 굴복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3차 핵실험을 고려하지 않다가도 여기서 물러나면 끝없이 물러난다고 생각해서, 안보리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겠다고 반응할 수도 있다.

이석: 그럼 다음으로 현성일 박사님이 제기해주신 문제인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국지적인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현재 국제정세가 매우 안 좋고, 북한 주민들 간에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계속 강경하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며, 그 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및 미국과의 대화 시도가 다음번 북한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처럼 북한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패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북한의 체제 존속 논리는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북한의 '스타일'이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응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언한 정치일정에 따라 추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안보리결의에 동의하였으므로 당분간 수세 국면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북한 내부의 권력승계는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므로, 추가도발을 하거나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북한 도발은 타임 프레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올해 주요국들 대선 등, 대외적으로 어수선하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유리한 금년에 할 것이고, 금년이 지나게 되면 도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 더 가할 수 있는 경제 제재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본다. 북한도 더 이상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1비서가 되리라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나로호 1차 발사 이후 10개월 정도 후에 다시 2차 발사가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고, 우주개발계획에서 플랜B, 플랜C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보면(강호제, “광명성3호는 다시 발사된다,” 『프레시안』),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공위성 재발사는 북한의 협상카드가 되었고, 핵실험까지도 북한의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먼저 제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설적으로 주변국이 북한에 핵실험 협상카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은 △ 먼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는 것과, △ 두 번째로 보편적 국제법에 기초해서 계속 발사하겠다는 것, △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9 북미합의가 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앞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 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와 핵실험을 카드로 들고 나올 것이다. 다만, 현성일 박사님이 언급하신 북한 내부의 변화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개혁을 지휘했던 인물인 박봉주가 당 부장으로서의 복귀하였는데, 이러한 내부 변화도 북한을 예측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석: 물론 현재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압박이 야기할지도 모를 북한 내부의 불안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향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틀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 패널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이상현: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단호(calm and resolute)해야 한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이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 조치는 국제사회가 대체로 북한을 비난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은 수세의 국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동시에 대화를 위한 통로는 열어놓는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multilateral engagement’ 방식으로 중국이나 미국과 함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이 대표적인 방법이나 그 가능성이 당분간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Two track’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확고한 대응을 하되, 가급적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multilateral engagement’ 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홍규 : 북한도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 ‘time is on my side’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 가지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일 것 같다. 첫째, 압력을 계속 강화해서 북한이 사고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상당부분 소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도 체면치레를 할 수 있도록 미사일은 발사하도록 하고, 대화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실험까지 가고 한바탕 갈등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대화국면으로 가는 방식이 있다.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았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세 번째 옵션과 유사한, 다시 말해 핵실험까지 간 다음 한국의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할 것이 있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도 핵실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은 안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그러나 3차 북미회담에서도 북한은 합의의 결과로 ‘당분간’ 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미국 측에서 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차기 행동은 미사일 발사가 옵션이지 않을 까라는 판단이 든다. 만약 우리가 북한하고 소통이 된다면,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권고하고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서로가 체면치레 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주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을 보면,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도록 유도하여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다.

구갑우: 돌이켜보면, 북한은 우리의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핵실험을 해왔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발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발사를 제지하는 최대한의 방법은 북한이 국제적 지지를 동원해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는 정도이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성공단 폐쇄 밖에 없는데, 개성공단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폐쇄 조치는 불가능하다.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없다. 2012년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책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금년 국내정치 일정 속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정부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나며 북한의 다양한 대응 방식을 경험해 보았고, 이명박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대북정책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현성일: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에 협상 시 남한이 북한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대응방안을 예측하는 것 같다. 북한도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정책적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하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취할 것을 고려한다고는 말하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 강경파들은 이러한 예측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가도발 및 3차 핵실험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북한의 추가도발 시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석: 금번 좌담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다. 토론자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매우 흥미로웠고,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었다고 판단한다. 장시간 말씀해 주신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과 생존전략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pblue@kinu.or.kr

1. <2012 강성대국 대문열기>의 종료와 새로운 시작

북한은 2009년 이후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준비를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 2009년은 <대문열기>와 관련한 여러 사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김정은 후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가는 작업도 시작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강성대국 대문열기> 사업과 김정은 후계 구축 사업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문열기>도 후계구축 사업도 그 마감 시한이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4월 중순의 여러 행사는 <대문열기> 사업을 마감하는 것과 함께 김정은이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것을 총화하고 경축하는 행사로 예정되었을 것이다.

원래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목표는 2007년 12월 지식인대회에서 선포되었다. 그러나 <대문열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초부터였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경색으로 정치일선에서 퇴장했다가 10월경 복귀했다. 2008년 말 그는 2009년부터 2012년 <대문열기>까지의 정국 구상을 설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 정국구상>에 따라 2009년부터 권력 구도 및 대내외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김정은 후계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2~4월에 헌법 개정과 주요 권력 개편이 있었다. 2009년 이후 대내외 정책은 현저히 강경해졌고, 김정일이 2009년부터 국영 중화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례없이 활발하게 현지지도에 나섰다. 아울러 8월부터 <대문열기>의 간판사업인 ‘평양 10만호 살림집’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 시작된 <대문열기> 및 후계구축 사업은 4월 중순에 완료 기념식을 가질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를 지나면서 북한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4월 이후 북한정권이 당면하게 될 쉽지 않은 도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또한 그 해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실에서 실천할 것이며, 그 해법은 또한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이 글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먼저 북한정권은 생존전략을 바꾸지 않은 채로, 4월 이후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주제는 대내 권력 구도이다. 4월 중순을 지나면서 김정일 사후 권력체계가 출범할 것이며, 여기서 김정은과 다른 주요 인물의 지위, 기관들 간의 관계들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주제는 향후 대내외 정책의 방향이다. 대내외 정책은 적어도 2012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2013년 이후에 대두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3년에 등장하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본격적 갈등과 협상에 진입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정권의 안정성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대내 정책에 대해서 서술한다.

2. 정권생존 전략목표의 지속성과 정책의 전술적 변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은 2005년부터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전략 목표는 동일하지만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목표 실현 정책 구상이 전술적으로 변화해 왔다. 여기서 2005년을 분기점으로 잡은 것은 이 시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때부터 2000~2004년간의 개혁정책 및 그 추진세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둘째,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를 추진한다고 2005년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정권 생존전략의 두 핵심인 <반개혁 + 핵보유> 노선이 2005년부터 공식 대두했으며, 이후 점차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노선은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퇴장했다가 재등장한 2008년 말에 보다 강경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5개 사항으로 정리되었다.

- 첫째,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확대하며,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다.
- 둘째, 핵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자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 셋째,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북한의 하위 파트너로서, 북한정권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넷째, 외화벌이를 활발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영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반(反)개혁

노선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 및 사경제의 확대를 억제한다.

다섯째, 공안기관을 강화하고 충성계층에 대한 경제적 특권을 보장함으로써, 대내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권생존 노선은 전술적으로 보다 온건하게 추진될 수도 있고 또는 보다 강경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 이 노선은 온건한 유형은 2007년에 나타났다. 북한은 2006년 9월의 1차 핵실험 이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였다. 이 합의에 따라라면 북한은 상당 기간 동안 핵 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추궁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와 10월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국의 지원성 대북경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협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대내정책적으로는 10월 장성택이 행정부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이후 시장억압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보다 강경한 유형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08년 말 김정일의 정국구상 이후 추진되었다. 북한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대남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했다. 한편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될 것임은 노골적으로 선언하면서, 6자회담 불참, 핵보유국가로 미국과 국교정상화 및 평화체제 수립 등의 현저히 강화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도 훨씬 강경한 정책이 추진되어,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및 화폐교환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추가 개혁조치 중단과 시장억압 강화와 같은 국내경제 생산성 저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물수출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수익으로 국영경제의 강화 및 정치성·사치성 지출증가를 도모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후계자로 대두하면서 정찰총국, 인민보안부와 같은 공안 공작기관의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경험에서 보면, 북한정권은 정권생존전략의 5대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실현과 관련해서 온건한 유형 또는 강경한 유형을 전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있고, 한국과 미국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게 만들 수 있을 때는 한국 및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신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한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세에 서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게 수용시킬 수 없을 때, 강경하고 도발적 대외조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그리하여 두 나라가 북한의 전략들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2012년 4월 중순을 지나면서 북한정권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 우선 앞서 언급한 5대 전략 목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전략이 추진되는 대외환경 즉,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자세가 적어도 2012년 말까지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까지는 2009년 이래 추진되어오던 강경한 대내외 정책이 지속하여 추진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환경은 2013년 한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느 정파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의 대외적 생존환경에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북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하반기에서부터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설정되든 북한은 2013년을 넘어서서도 일정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강경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 전술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 한국 또는 미국이 북한의 전략 목표(핵보유국 인정 및 원조 증대)에 대해 현저히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은 보다 유연해질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은 지속적으로 강경 돌파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대내정책 상으로 보면, 북한은 2009년 이래 견지하고 있는 <외화벌이 강화 + 국영경제 강화 + 시장 억압> 노선을 대외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어떤 이유로 외화벌이가 한계에 직면하여 이것만으로는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이다. 이 경우 북한정권은 부득이 대내개혁조치를 통해 대내경제의 생산성 증가를 통한 정권 유지자금 확보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어떤 이유로 주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에 도달 할 때이다. 기존의 외화벌이를 통해 정권 유지자금을 마련하며 국영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정권이 내부 자원을 충성층에게 편파적으로 배분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또한 시장억압은 민간부문의 고용과 소득창출 기회를 억제하는 정책에 다름없다. 정권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확고하다면 주민다수의 빈곤과 무지 상태가 영속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고 바꿀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주민의 정치적 불만이 증가하고 정권이 이에 대해 정치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정권은 부득이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 그 핵심은 일반주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늘이거나 일반주민도 생활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3. 권력구도의 재편과 중앙당 기관의 위상 증대

4월 중순 이후의 북한 정치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중앙당 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북한의 중앙당 기관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김정일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허상태로 방치되었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일에게는 당보다는 군대가 더 중요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김정일은 중앙당의 조직지도부를 발판으로 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장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1990년대 초반부터 군부를 장악하고 1995년부터 ‘선군정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요 통치도구를 당이 아니라 군대로 바꾸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2005년 이후 1995년 이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구 군부 및 연관당 세력을 점차로 퇴진시키고 대신 신 군부와 새로운 당료 세력을 대두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2009년 김정은 후계체제가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하여 2009년 초의 권력 개편을 통해 구 군부를 대신하여 신 군부가 보다 뚜렷이 대두했고, 이후 2010년 6월의 최고인민회의 및 2010년 9월의 당대표자회 개최를 통해 권력 개편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자신의 사망 이후의 북한정국에 관한 기획을 발전시키고 행마를 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정국 주도세력 개편과 함께 김정일은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과 자신의 사망 이후의 정국 안정을 위해 중앙당 기관을 다시 중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중앙당 주요 기관을 복원했다. 또한 김정일 사후 북한지도부는 1년 7개월 만에 당대표자회를 또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은 당총비서에 취임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뒷받침할 주요 권력엘리트를 중앙당 기관에 포진시킬 것이다. 둘째는 김정일이 이른바 (2011년) ‘10.8 유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북한은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기로 한 결정을 정치국 명의로 발표했는데, 그 근거는 김정일의 ‘10.8 유훈’이었다. 아울러 10월초에 김정은을 보좌하는 ‘정책 소조’가 결성되었다는 것을 보면 김정일은 2011년 10월초부터 정국 관리권을 김정은에게 이미 이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할 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후계자 지위를 물려주는 한편 중앙당 기관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지도자가가 주요 권력엘리트와 권력을 분점하도록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과 같은 당기관을 강화하고 의사형성과 인사문제 등에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면, 김정은은 과거 김정일과 같은 절대적 권력 행사를 제한 당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어차피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부하들에게 절대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 분점을 아예 제도화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심과 불만을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아울러

정치국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에 주요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상황판단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적 이익 조정을 통해 상호간의 갈등 소지를 얼마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중앙당 기구 복원을 매개로 한 이와 같은 최고지도자와 주요 엘리트간의 권력 분점 기획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상층 권력 기관과 주요 인물 사이에는 경쟁과 협력의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2005년부터 장성택과 같은 민간당료 세력을 의도적으로 키워왔고, 또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중앙당 기관 복구를 통해 민간당료 세력의 확대 정착에 도움을 주어왔다. 군부의 경우 김정일은 1995년 선군정치 시대의 주요 늑대 장령을 점차 퇴진시키는 대신 특히 2009년부터 이영호, 김영철과 같은 신 군부 세력을 대두시켰다. 김정일이 민간당료의 세력을 키웠던 것은 군부의 세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세력이 적절하게 상호적인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그 어느 한 세력도 김정일이 내정한 김정은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군부 또는 군부의 각 기관, 그리고 당 또는 당의 각 기관 사이에 김정은으로부터 권력 지분 또는 경제적 특권지분을 유리하게 배정받기 위한 상호적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에게의 충성을 수단으로 하여, 해당 기관의 세력 팽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거대한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요 기관간의 권력 및 이권 경쟁은 만약 북한경제의 파이가 증가한다면 완화될 수 있지만, 파이의 크기가 정체하거나 줄어든다면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김정일은 압도적 권위를 통해 부하들 사이, 기관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취약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 부하들 사이 및 기관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중앙당의 주요기관이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은 갈등 및 이해 조정을 제도화하여 김정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하튼 앞으로 주요 권력기관 및 주요 권력 엘리트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알력과 경쟁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좁게는 김정은의 운명, 보다 넓게는 북한 상층 권력의 안정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대내정책에서의 연속성

앞서 시사되었듯이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도 북한정권의 대내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완충기’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논리를 서술한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가치중대적이라기보다는 가치파괴적인데,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는 것은 기존 특권구조의 존속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특권구조의 존속이 야기하는 주민불만 증대 가능성은 공간기구 강화를 통해 억제되어야 한다.

〈 ‘완충기’ 도입 가능성 〉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변화로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완충기’ 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부터 2012년을 목표시한으로 하여 <강성대국 대문열기>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전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면서 <대고조>식으로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2009, 2010, 2011년 동안 높은 수준의 ‘동원형 경제정책’ 을 추진해온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자면, 이와 같은 동원형 시기 다음에는 대체로 ‘완충기’ 라는 것이 따라왔다. 동원형 시기에 추진된 무리한 경제정책이 발생시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완충기’ 동안 완화하는 정책과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금과 자재의 무리한 투입으로 인한 고갈 상태를 극복하고 재충전할 기회가 필요하며, 특정 부문에 집중하고 다른 여러 부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인원과 설비가 무리한 동원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진 것을 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충기’ 에는 대체로 온건한 정책이 추진되고 주민 생활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물론 북한당국이 실제로 4월 중순이후에 ‘완충기’ 를 채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무리한 정책이 북한경제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서, 거의 동일한 정책을 추진했었다. 대대적으로 평양건설을 했고, 순천 비날론 공장 건설과 같은 중화학공업 투자를 극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한 많은 잔치와 행사 및 외국인 초청 등에 막대한 외화를 사용했다. 그 결과 평축 준비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함경도 등지에서 식량공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으며, 평축이 완료된 직후 국가재정고갈로 계획경제의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했고, 장마당이 급속하게 확대하기 시작했다. 4월 중순 이후에도 대체로 과거 평양축전 이후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당국은 이에 대하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완충기’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그러나 '원충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또한 '원충기' 기간 동안에도 북한경제의 기본 논리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될 북한 경제정책의 논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국영경제 부문을 강화하고, 일반 주민의 국영경제에 대한 의존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주민에 대한 장악, 국가의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영경제가 살아나려면 우선 국영중화학공업을 복구해야 한다. 특히 철강, 화학, 전력과 같은 기초 중화학공업을 복구하여, 이들 공업 부분이 국영 경공업 부문이 가동할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해야 한다. 국영 경공업을 진흥하여 국영 상점망에 공산품 소비재를 공급하면, 시장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며, 아울러 중국 상품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 전략에는 큰 문제가 있다. 국영 중화학공업을 복원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어디선가 벌어들여야 한다. 요사이 북한의 경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광물 수출의 증대이다.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국영중공업을 살리며, 추가적으로 국영 경공업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2009년 이후 특히 강화되어 추진되었으며, 이례적으로 빈번한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일이 직접 추동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서 문제점은 국영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개혁)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국영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영부문은 외부 자금이 수혈되는 한에서 가동되지만,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동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손실액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소생되었지만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공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공업 부문 공장들을 만가동하자면, 이들 공장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시장을 대대적으로 억압하는 가운데 국영경공업을 살려내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이래의 막대한 자금 투자와 김정일의 정력적 관여에 힘입어 주체철, 주체비료와 비날론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일시 보여주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원 낭비에 다름없으며, 결국에 국영경제의 약화, 시장 확대 압력의 증가, 중국 상품의 점유율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다름없다.

앞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북한정권은 내부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신, 다양한 방법의 외화벌이 강화를 통해 경제 및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주요 외화벌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 수출 증대이다. 그 핵심은 석탄 수출 증대이다. 2010년 북한 총 수출액에서 석탄 수출은 46%에 달했고, 여기에 기타 광물 및 임산물과 수산물 등을 더하면, 대략 전체 수출의 70%가 원자재로 구성되었다. 결국 북한경제는 전형적

원자재 수출 경제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황금평과 나진선봉과 같은 폐쇄특구 증설 정책, 관광 진흥 정책, 노동력 수출 정책, 항구 대여 정책,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정책이 있다. 나아가 핵외교와 인도지원 외교를 통한 외부 원조 유입 증대 정책도 일종의 외화벌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외화벌이 정책을 강조할수록 또한 외화벌이가 잘 될수록 국내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경제가 황폐하고 대다수 주민이 실업과 빈곤과 건강악화 및 무지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원자재 수출 의존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경제가 황폐할수록 정권 유지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영속화하는 역설이 시현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불만 억압과公安 부문의 강화〉

앞서 서술한 경제정책은 구조적으로 주민의 빈곤과 무지, 건강악화 상태를 영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이 정권의 주류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 유지에서 핵심은 대내경제생산성 증대를 억압하는 대신에 외화벌이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경제정책은 국내경제 생산성 증가 조치를 제외하고, 외화벌이를 증가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줄기차게 노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물 수출 외화벌이는 국가 또는 권력 기관이 그 수익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권력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수출입 권한은 대내외 가격격차를 이용하여 이들이 막대한 이윤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윤은 일부 중앙에 집중되거나 일부 해당 기관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잔류하여 특권층의 사치적 소비,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소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같은 지출, 국영기업 육성 등에 사용된다. 북한 정권은 특히 민간 부문의 고용과 생산 증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대다수 주민이 실업상태에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현저히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북한정권은 민간부문 적극 억제와 국가부문 육성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고용과 생산 증대가 일반 주민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정권 대 주민의 세력관계를 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고, 그리하여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구조적으로 주민 불만 폭발의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주민 다수 집단의 빈곤을 영속화하는 가운데, 특권층의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이 장기 지속하자면, 지속적으로公安기구의 억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5. 결론

북한은 2009년부터 2012년 4월 15일을 목표로 <강성대국 대문열기> 그리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전력 투구해왔다. 북한은 4월 중순을 지나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그간의 전력 투구가 발생시킨 여러 부작용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4월 중순 이후 북한의 정권 생존 전략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일이 사망하고 보다 취약한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상층 지도부 내부의 의심과 알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체제 준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앙당의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4월 중순 이후 ‘완충기’ 경제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경제정책이 보다 온건해질 것이다.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내부경제 생산성증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광물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으로 국영경제를 진흥하고, 시장과 민간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영개선 없이 국영경제에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와 비효율성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정책은 주민의 빈곤을 영속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은 주민 불만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안기관을 강화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미관계 전망

신범철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sbc@kida.re.kr

1. 들어가는 말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13일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로켓은 발사 1분 여 만에 기술적 결함을 일으키며 공중분해 되어 버렸고, 당초 목표했던 강성대국 원년 축포로서의 의미도 사라져 버렸다. 4월 16일 UN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비난했고,¹⁾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매우 차갑다. 2009년 6월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제2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 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로켓 발사의 불법성과는 별개로 북미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갈등과 대화를 반복해왔던 양자는 로켓 발사를 전후해 더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 2월 말 2.29 북미 합의 를 통해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약 3년간 단절되었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직후 ‘장거리 로켓 발사’ 를 전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에 과연 미국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복해온 패턴을 돌이켜 본다면 향후 상당기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UN 차원에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지만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 마치 짙은 안개가 깔린 것과 같이 북미관계의 미래는 한 달 앞을

1) “북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연합뉴스』, (2012. 4. 17.)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2041623153905858> 참조

2) 안보리 결의 1874호 제 2항. “DPRK not conduct.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368/49/PDF/N0936849.pdf?OpenElement> 참조

3) 이윤수, “북한 로켓발사 실패 군사도발·3차 핵실험 가능성” (2012. 4.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4/2012041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이 글은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북미관계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기에 접어들며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과 함께 진행되어 온 북미관계의 역사적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중국 변수와 북한의 생존전략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북미관계는 양자관계에 속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국 문제를 병행해서 살펴봄으로써 북미 양자의 관점에서는 찾기 어려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고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당분간 북미간의 긴장이 예견되지만, 결국에는 '2.29 합의'와 6자회담의 경로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미국의 현실적 한계로 북미관계와 북한 핵문제는 '봉합' 수준의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II. 탈냉전 이후 북미관계의 회고

1. 북미관계의 진행 경과⁴⁾

냉전기간 동안 별다른 접촉 없이 갈등과 대결을 지속한 북미관계는 미소간의 해빙무드로 탈냉전이 도래한 이후 작은 변화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소관계와는 달리 부정적인 원인에서 출발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미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의 영변 핵시설 사진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92년 1월 22일 북미간의 첫 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미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탈냉전 후 국제사회의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 NPT 탈퇴라는 강공책을 전개한다. 동시에 북한은 같은 해 5월 29일 구소련의 스커드를 개량한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며, 일본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1994년 들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1994년 5월 중순부터 북한은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시작했고, 6월 13일에는 IAEA 탈퇴와 더불어 '안전협정(safeguard agreement)'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

400145.html 참조

4) 동 절의 북미관계 진행 경과는 다음 자료들의 내용을 재정리 하였다. 이용준, 『게임의 종말』, 한울, 2010; 이명수, "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pp.10-21; Emma Ormlett-Avery,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 Research Service, January 17, 2012, pp.4-11.

이에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함과 동시에 북한 핵시설 공격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6월 17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의 대화를 통해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여 마침내 북미 양측은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일정한 소강상태를 띠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합의문에 기초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고 경수로 제공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 같은 시기에 금창리 비밀 핵시설이 문제가 되어 미북간에는 다시 협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식량 50만톤과 씨감자 1만톤, 감자증산계획에 필요한 식량 10만톤, 식량 30만톤 등 총 91만톤의 식량을 직접 지원하며 1999년 5월 금창리 지하시설을 사찰하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미사일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는데 2000년 10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보한다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이끌어 낸 것이다. 당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사거리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10억 달러 내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추가적인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한 채, 클린턴 행정부가 종료되었다.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탄도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⁵⁾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며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강경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과 파키스탄간의 핵개발 협력 문제가 제기되고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부각되었다. 급기야 2002년 10월 17일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당시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을 다시 선언했고 한반도에는 2차 핵위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이미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몰입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는 북한의 기만적 행동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자 시도한다. 대화를 주선하고 합의 내용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중국에게 기대한 것이다. 이후

5) 조엘 워트, 대니얼 포넨만, 로버트 갈루치 『북핵위기의 전말』, 모음북스, 2004, pp.453-454.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에 중국이 등장하게 된다. 물론 중국의 관여 이후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북미간에 먼저 타결되며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국의 관여로 2003년 8월 27일 6자회담이 시작되며 북미관계 또한 다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다시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9월 19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 이 도출되게 된다.⁶⁾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희망적 내용과는 별개로 그 실현에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된다. 미국이 BDA에 있는 북한의 불법자금을 동결한 것이다. 실제로 BDA 동결은 미 재무부의 불법자금 추적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무부의 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었으나, 김정일의 통치자금과 직결된 문제로서 북한의 격양된 반응을 낳았다. 그 결과 대화는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핵실험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로 이어졌지만 북미간의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가져왔다. 북미는 다시 대화에 돌입했고, 그 결과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이루어지고 북한 핵문제는 같은 해 ‘10.3 합의’ 를 거쳐 북한의 신고단계까지 진행된다.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다시 신고와 검증 단계에서 시간을 끌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를 기다린다.⁷⁾ 하지만 당초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지향하고, 북한은 다시 2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며 대화를 단절시키는 상황에 이른다.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담았고 미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다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2010년 11월 13일 북한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완성할 경우 본격적인 핵무기 확산이 가능하기에, 미국은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택했다. 그 결과가 2012년 2월 29일 합의된 ‘2.29 북미합의’ 였다.⁸⁾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24만톤의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2.29 합의’ 는 그 이행이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던 미국은⁹⁾ 또

6)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2005." (U.S.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9, 2006.) <http://www.state.gov/p/eap/regional/c15455.htm> 참조.

7)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창해, 2009), p.646.

8) 이승현, "북미 3차 회담이후 북미관계 현황과 전망,"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3, pp.1-2.

한 번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2. 분석적 고찰

지난 20년간의 미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6번의 주요 합의가 있었다. 미북합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이었으나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된다.

표 1 미북간 주요 합의 내용

합의	목적	북한의 의무	미국/국제사회의 지원
제네바 합의 (1994.10)	비핵화	· 핵관련 시설 동결 · NPT 복귀 · IAEA 사찰 수용	· 경수로 200만kw · 매년 중유 50만톤
공동코뮤니케 (2000.10)	미사일 제한	· 미사일 발사 유보	· 정치적 관계 개선
9.19 공동성명 (2005.9)	비핵화	·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 NPT/IAEA 복귀	· 경수로 제공 논의 · 미북관계 정상화 추진
2.13 합의 (2007.2)	비핵화	· 핵시설 봉인/불능화 · IAEA 사찰 활동 ·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중유 5만톤 긴급지원 · 대화 시 95만톤 지원
10.3 합의 (2007.10)	비핵화	· 불능화 및 신고	· 테러지원국 해제 · 중유 100만톤 지원
2.29 합의 (2012.2)	비핵화 미사일 제한	· 북한 농축우라늄 중단 · 미사일 발사 중단	· 영양지원 24만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제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을 인센티브로 약 13억1,375만달러를 지원하였다.¹⁰⁾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실험 2회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4회를 실시한 상황이다. 그간의 미북합의와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물론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기를 그만큼 지연한 효과는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지연된 기간 동안 북한은 필요한 연구개발을 내부적으로 지속했을 것으로 볼 때 시간 지연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안일한 접근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결국엔 북한이 붕괴될

9) Evans I.R. Revere, *Re-Engaging North Korea After Kim Jong-il's Death: Last, Best Hope or Dialogue to Nowhere?*, Brookings, 2012, pp.17-22.

10) Mark, E. Manyin & Mary Beth Nikit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3. 20, pp. 2-3.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었는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보다는 상황을 봉합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 역시 원칙만 선언했을 뿐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합의는 실패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2.29 공동 합의 역시 본문에 로켓 '발사(launch)'라는 용어를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매번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미국의 대북협상 결과의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가장 최근의 2.29 합의만 해도 북측이 인공위성 발사의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 내용에 장거리 로켓을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곧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로 읽었어야 했다.

둘째,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북한의 버티기 전술을 당해내지 못한 현실적 한계이다. 북한은 대외정책의 핵심 축으로 대미관계를 구상해 왔고, 유리한 관계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2002년 켈리 차관보의 방북 당시와 같이 거짓말을 통해 미국을 속여 왔고, BDA 문제 이후 핵실험과 같은 버티기를 통해 미국을 공갈하고 애태워 왔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보다 대담한 대미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에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도 미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나 부시 행정부 말기,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1기 마지막 해인 금년 역시 국내정치적 필요에 의해 북한 문제에 접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¹¹⁾

셋째,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1990년대의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생존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닫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을 위기로 몰아넣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UN 안보리 결의 1874호 결의 이후 3년이 된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이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 이후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변화를 거듭했던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미국의 실패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11) 이승현 *op. cit.*, p.3.

III. 중국 변수와 북미관계 변화

중국의 부상은 탈냉전기 외교적 고립 속에서 고통 받던 북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노골적인 핵무기 개발과 대담한 대미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체제의 보호자로서 중국은 북미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1990년대의 북한에 있어 미국은 식량이나 원유 등과 같은 경제원조는 물론이고 체재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2008년 가을 테러지원국 해제를 경험하면서 적지 않은 고통을 얻어냈을 것이다. 약 3000만달러에 달하는 동결자산의 해제 외에는 북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되어버린 산업시설로는 해외로 수출할 경쟁력 있는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기대했던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등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복잡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얻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 북한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이 겪었던 재정난을 목격하며 미국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경험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북중관계 역시 많은 부침이 있었다. 혈맹으로 여기던 중국이 한국과 수교할 당시에는 중국을 배신자로 부를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또한 2000년대 초 북한이 중국 자본을 빌어 신의주를 개발하려 했을 때 이를 망친 것은 중국 정부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신의주 개발을 주도한 양민을 구속해버렸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끊임없는 성장을 했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지원을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비핵화 요구 속에서도 김정일 체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병행했다.¹²⁾ 특히 6자회담은 북중관계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고 과거의 긴밀한 관계가 복원되었다. 미국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5.24 조치'¹³⁾는 북한에게 있어 중국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5.24 조치' 발표 당시의 기대대로라면 한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12)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 리포트』, 2010.9.29, p.22-32.

13) '5.24 조치'의 내용과 경제적 파급영향은 다음을 참조. 양문수, "5.24 조치 1년과 남북경협" 『나라경제』 제 13권 5호, 한국개발연구원, 2011. 5, pp.3-22.

북한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이었어야 했다. 대외무역 결재에 필요한 경화 확보 등에 비상이 걸렸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시 한 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했다.¹⁴⁾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유대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통적 유대관계 복원 외에도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6자회담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로 인해 대미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깨달았으며, 특히 북한이 붕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중국 동북지역의 불안정과 중국내 북한 난민의 유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¹⁵⁾ 그 결과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 상무부와의 35억 달러에 달하는 나선특구 합작개발 합의, 2011년 5월 말 개시된 황금평, 위화도 개발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 했다.¹⁶⁾

물론 북중 경제협력이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수혜를 베풀고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0%에 육박하는 북한 경제의 지나친 대중 의존 문제,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유출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 김정은 또한 중국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원은 북한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표 2 북한의 연도별 주요국 교역 실적

(단위: US\$백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1,580.3	38.9	1,699.6	39.1	1,974.0	42.7	2,787.3	49.5	2,681	53	3,465	56.9
한국	1,055.8	26	1,349.7	31.1	1,797.9	38.9	1,820.3	32.3	1,679	33	1,912	31.4
태국	329.2	8.1	374.2	8.6	228.7	4.9	76.8	1.4	44	0.8	51	0.8
러시아	232.3	5.7	210.6	4.8	159.6	3.4	110.5	2.0	62	1.2	110	1.8
일본	193.6	4.8	121.6	2.8	9.3	0.2	7.7	0.1	3	0.1	0	0.0
기타	666.2	16.4	589.8	13.6	457.2	9.9	833.5	14.8	624	11.9	548	9.0
총계	4,057.4	100.0	4,345.5	100.0	4,626.7	100.0	5,636.1	100.0	5,093	100.0	6,086	100.0

자료: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2011.7)

14) 홍현익, "김정일 방중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세와 정책』, 통권 182호, 서울: 세종연구소, 2011, p. 6.

15) Adam P. Lif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China Fallacy," *PacNet* No. 67 (Pacific Forum, October 8, 2009), p.1., available at <http://www.pacificforum.org>.

16) 이희옥, 『북중 접경지역』, 푸른길 2011, pp.103, 251.

북미관계에 미친 중국의 영향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총 네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 시기를 살펴볼 경우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안정이 필요한 시기였으나,¹⁷⁾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를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활용했다.¹⁸⁾ 그런데 북중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중국은 북한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미국이 추진한 UN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중국이 막아주었기 때문이다.¹⁹⁾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시적인 위반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중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동의했으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대중 관계증진이 자리 잡고 있다.

IV. 향후 북미관계 전망

1. 북한의 편중화미 전략과 대미정책 전망

2010년부터 북한의 대외 생존전략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과거의 전략을 생존확보 차원에서 핵을 매개로 한 대미 관계개선 전략이라고 본다면, 최근의 모습은 대중 편승을 통한 생존기반 확보 후 핵을 매개로 한 대미 관계개선 전략, 즉 편중화미(便中和美)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편중화미 전략 하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정과 경제적 활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며 대미관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갖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개혁, 개방을 통한 주민생활의 획기적 향상이 아니다. 적어도 체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부분적이고 통제 가능한 개혁, 개방일

17)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의 경우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직결되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인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국방위원장’ 직을 국가정상급으로 격상시키며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2009년의 발사의 경우도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2009년부터 김정은 후계구도를 본격화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직후인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이후 가을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 한다. 2012년 4월 13일의 발사 역시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 출범을 공식화 하는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8)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제네바회담의 예 따른 경수로 건설의 지연과 금창리 핵시설 의혹으로 북미관계가 냉각기로 돌아선 상황이었다. 2006년에는 BDA 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2009년의 경우 또한 핵문제가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package)을 추진한 상황이었다. 4월 13일의 로켓 발사의 경우 불과 한 달 전 2.29 합의로 북미간의 우호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로켓발사 의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결국 미친가치의 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의도를 알고 강경대응을 했다면 2.29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2006년 장거리 로켓 발사 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나 1718호는 실질적 제재조치가 미약했고, 2009년 당시에는 ‘인공위성’으로 규정한 중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결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의장성명’에 그쳤다.

것이다. 이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경제개방이 평양과 가장 동떨어진 4개 변방지역에서 추진되어 왔음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과거 김정일은 물론이고 오늘의 김정은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협력형태라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보았자 북한이 입는 타격은 크지 않다. 중국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천안함, 연평도 공격을 통해 미국과 대척점에 설 때 대중간계에 서의 위상은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갈등을 겪었던 최근 2~3년 동안 중국과의 현안을 모두 해결했다. 안보리 결의 '1874호' 제재 속에서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지도부 상호방문을 통해 우호친선을 강화했으며,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이 개정되었다.

물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다가가는 모습은 전과 다를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이익의 상당부분이 중국을 통해 얻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핵협상이나 미사일협상에서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체제유지를 지속하려 들거나,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평화공세 속에서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들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은 향후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다.²⁰⁾ 체제생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대외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편중화미를 추지하면서도 완고한 대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본다. 사실 '2.29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논의되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미국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밝힌 것이고,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의 반대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미협상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할 경우 '2.29 합의' 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동북아 재관여와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유대를 강화하며 기존의 대북정책을 더욱 굳건히

20) 문순보,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2. 2. p.21.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도를 요구해 왔다.²¹⁾ 특히 2011년 하반기부터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보다 더 확대되고 장기적인(larger and long-term role)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히며, 아시아 중시전략을 밝혔다.²²⁾ 향후 아태지역은 미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순위(top priority)로서,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미군 주둔을 지속하고, 동남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호주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 미군의 가시성 증대(enhance presen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5일 발표한 신군사전략 또한 아시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²³⁾

미국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은 기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결국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세력 확대를 묵과할 경우 결국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 문제에 적극 관여할 것이다.

원론적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은 북한과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 외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재관여가 부각되는 시기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북미 고위급 대화가 이어졌고, 마침내 금년 2월 '2.29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그 총량이 제한된 플루토늄 방식과 달리 북한이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장 위치나 보유량이 잘 알려진 플루토늄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년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저장위치와 보유량을 알 수 없는 농축우라늄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더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이다.²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북인' '관리 및 통제' '비핵화를 위한 압력행사' '정권교체'라는 네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²⁵⁾²⁶⁾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압력행사나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동맹국인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핵화를 위한 압력행사나 관리 및 통제의 수준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도 미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며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양면적 접근(two track approach)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1) 문순보, "임기후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전망,"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1. 5, p.5.

22) 전경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 그리고 한국" 『주간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2. 1, pp.1-3.

23) U.S. Government,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2012. 1.)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참조.

24) Evans I.R. Revere, op. cit., p.17.

25) Scott, A. Snyder,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FR, 2010), pp.11-19.

26) 미국의 대북정책 수단을 강경정책과 온건정책으로 단순화 시켜 살펴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승현, "북미관계의 유형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법과 정책』 제권 1호, 국회입법조사처, 2009.12, pp.55-77.

당장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동맹국을 안심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의사라도 보일 경우 다시 대화를 재개하여 경제적 지원과 제재 해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

3. 로켓 발사 이후 북미관계 전망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협상의 교훈, 중국의 부상과 북중관계 변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역설적으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의 상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바로 3차 핵실험 가능성에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별다른 손실 없이 ‘2.29 합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금년 내내 북미간에는 긴장구도가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 향후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먼저 북한의 전통적인 위기조성외교 관행을 들 수 있다.²⁷⁾ 이미 북한의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9년에 장거리 로켓 발사 후에 핵실험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모두 ‘안보리 결의’로 이어졌지만,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다. 오히려 북한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최고지도자의 통치자금에 영향을 미칠 경우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는데, 당장 통치자금을 동결할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더욱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감도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최근 김정일은 북한의 주요 권력기구나 할 수 있는 인민무력부, 인민군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수장(首長)들을 모두 교체했다. 기존의 체제가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음에도 대대적인 인사조치와 함께 측근을 중용한 것은²⁸⁾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불안감은 당분간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체제 보위를 도모하려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을 선택하는 데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실험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도발이익 측면에서 핵실험은 북한에게 꾸준히 이익을

27) 이상숙, “북미관계의 구조와 북한 핵문제,” 『북한학연구』 제5권 1호, 2009, pp.44-45.

28) “북한 장성택 라인 약진 군위로 2선 후퇴” 『연합뉴스』, 2012. 4. 1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M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5%9c%eb%a3%a1%ed%95%b4&contents_id=AKR20120412075800014 참조.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도발은 크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 무력도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지적 무력도발의 경우 작전 실패의 부담이 있고 도발이익도 적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얻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특히 한국군의 강화된 대비태세로 인해 작전 실패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다. 군사지도자로서 김정인의 위상이 실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핵실험의 경우 당장 제재는 받았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중국의 입장이다. 편중화미의 대외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비호가 절대적 요인이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개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체제의 고립'을 경고한다면 김정은이 갖고 있던 기존의 도발 손익계산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단절될 경우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북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물론이고, 권력 엘리트 내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며 김정은에 대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김정은이 긴장조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발을 선택할 경우, 차라리 작전실패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대남 군사도발을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선택이 되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매개로 대미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구할 경우 미국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봉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29 합의 복귀가 가능하며, 6자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 또한 아직 살아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미관계는 상당기간 냉각이 불가피하다. 아마도 오바마 정부의 1기 임기가 끝나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닫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3년과 같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돌아가고 6자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대외전략 하에서 북한은 핵무기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또한 북한을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²⁹⁾ 결국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관리 및 통제' 나 '비핵화를 위한 압력행사' 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시간을 벌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완전한 개혁 개방을 택하거나 아니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쉽지 않다. 경제적 개혁, 개방 자체가 김정은 체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⁰⁾ 6자회담을 통해서 북미 외교관계 개선과 경제지원에 상응하는 핵개발 동결이나 불능화, 핵물질 신고 및 검증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핵물질의 폐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부분적 관계 개선과 부분적 관계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V. 맺음말

탈냉전기 북미관계를 돌이켜 볼 때 북한의 지도부는 이익을 극대화 해왔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왔다. '2.29 합의' 직후 발사된 장거리 로켓은 비록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오늘날 북미관계가 처한 현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2.29 합의' 를 하고 말았다. 현재 북한은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를 날씨에 비유해보면 매우 흐린 상황이다. 김정은과 그 주변의 권력엘리트들은 주민들의 생활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할 것이고, 북한은 당분간 폐쇄적인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별다른 강압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진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할 수는 더더욱 없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관리 및 통제나 비핵화를 위한 압력행사 사이에서 고민하며 대응할 것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향후 상당기간 북미관계에서 맑은 날씨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미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날씨는 더욱 흐린 상황이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차기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려 들 것이며, 핵문제와 관련된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들 것이다.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 긴장조성을 통한 내부 통제의 목적에서 대남 국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연초부터 감행해온 다양한

29) Richard N. Haas,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CFR, August 2005, www.foreignaffairs.com/print/60823 참조.

30) Bradley O. Babson, "Transformation and Modernization of North Korea: Implication for Future Engagement" (project paper, National Committee for North Korea, October 1, 2009), http://www.ncnk.org/resource/publications/Transformation_and_Modernization_of_North%20Korea.pdf 참조.

방식의 대남심리전은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 북미관계 재개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한미간에 북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더욱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북미관계가 급진전 되었을 경우 혹시 있었을지 모를 한미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북미관계의 변화 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대북협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시대 북·중관계 전망

신상진 |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 sjshin@kw.ac.kr

1. 서론

17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북한을 통치해 온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어 북한을 이끌고 있다. 김정은은 29살에 불과하고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정된지 겨우 2년밖에 안되었지만, 외견상으로 볼 때에는 3대 세습체제를 큰 무리없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권력승계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북한에게는 엄청난 위기였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로 인한 고립과 심각한 대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유고사태는 북한 내부 정치·사회적 혼란과 한·미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민의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군부 구테타 등 권력투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미도 북한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큰 동요 없이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후견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에 기인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향후 김정은 정권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자세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과 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목표와 정책기조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북·중관계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북·중관계 변화·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북한의 대중국 정책목표와 정책기조

북한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국제고립 국면 속에서 대내 단속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순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북한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악화된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야 하며 대외 고립을 타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주장해 온 ‘강성대국의 문’ 에도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대중국 정책목표와 정책기조를 이러한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대중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게 될 것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는 후견국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김일성과 닮은 외모를 무기로 삼아 권력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습하여 주체노선을 견지할 것이나, 자신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국이 한·미의 대북 정치·군사적 압박을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적어도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중국과 긴밀한 정치·외교적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012년 3월 17일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중국에 파견하여 우디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만난 목적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¹⁾

사실 북한의 이러한 대중 접근 강화 및 우호정책 방침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로 권력을 이양해 주기로 결정한 2009년 이후부터 이미 분명하게 표출되어 왔다. 북한이 두 번째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9년 5월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하여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로 했다는 내부 방침을 통보하고 중국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로써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고, 북한은 중국과 중대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중대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조” 라는 표현에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협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 8월 그리고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때에는 북한이 더욱 명확하게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1)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미동맹 강화,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강화 명분 제공, 역내 군비경쟁 심화 및 한·중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행동은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에 기반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각측이 냉정하고 자제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戴秉國「維護朝鮮半島穩定」” <http://china.dwnews.com/news/2012-03-22/5966807.html>(검색일: 2012.3.22); 楊綱 “中國在半島問題上是負責任的” <http://www.huanqiu.com/roll/2012-03/2566444.html> (검색일: 2012.3.29).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구했다.²⁾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금기시해 왔던 내정불간섭원칙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사항을 요구했던 이유는 권력승계문제가 몹시 다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국 중시정책은 김정일의 유훈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김정일 사망 이전에 북한이 보여 주었던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강화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金正일은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를 처리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집권 말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북한이 추진해 온 압록강 유역에 대한 협력 개발과 나선 경제무역지대 개발 사업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 해 왔다. 막혀 있는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서방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金正일은 집권초기 북한은 김정일 말기의 대중 경제협력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식량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금년 2월 29일에 발표된 북·미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파기되게 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4만 톤의 영양식 지원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내부통제 강화와 정권 안정을 위해 대외 강경행동을 보이는 한편, 대외 경제개방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변화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하고 나아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³⁾ 북한은 김정일 사망 직전인 2011년 12월 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과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경제특구 개발은 이미 김정일이 지시하여 추진해 왔고 중국정부와도 합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하려 할 것이다.

2) 특히 2010년 8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을 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북지역의 항일연군 기념관 등을 방문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간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시에는 “조종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역설함으로써 김정일이 권력을 손조롭게 구축해 나가는데 중국의 협조를 직설적으로 요청했다. 『민주조선』, 2011.5.28.

3) 정명배, 周之然, “朝鮮經濟之變自然進行.” <http://opinion.huanqiu.com/roll/2012-03/2536870.html> (검색일 2012.3.19). 사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도 유훈통치 기간을 넘긴 뒤 대내 경제개혁 조차와 함께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및 동남아와 남한에 대해 관계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3. 중국의 대북한 정책목표와 정책기조

김정일 사후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여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여 대외 군사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독자적 생존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⁴⁾

당분간 중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최소한도의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 안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둘 것이다. 중국은 이미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뒤부터 북한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행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뒤에도 중국최고지도부가 북한을 배려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했던 것도 북한에서 위기국면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무기 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제멋대로’ (悖然)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비난하지도 않았다. 사회주의 이념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지지하고 지원한 것도 북한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강역’ (戰略的疆域)이 혼란에 빠지고 적대진영에 편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⁵⁾

김정일 사망이라는 북한 돌발사태(급변사태)에 직면해서도 중국은 매우 신속하게 북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 국무원, 전인대 명의로 김정일 사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북한이 김정은 영도 하에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또한 한, 미, 일, 러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김정일 사후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하였으며, 장즈쥘(張志軍)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 미, 일 대사를 불러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중국은 김정은체제 조기 구축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유관국들에 대해서는 북한사태에 개입하여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사태가 중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미의 개입 소지를 차단하려 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 고유의 정치적 특성에 기인하지만, 상당부분은

4) 金敬濤 「東北亞強權局與後金正日時代的朝鮮半島」, 『現代國際關係』, 2012年 第1期 pp. 3-5.

5) 2009년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 북극정책을 전개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전개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구분하기까지 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대외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불안정을 조성하고 한·중 및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금년 중국은 1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해로써 주변환경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김정일에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미국과 대화하도록 설득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것이다.⁶⁾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국의 중요한 대북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게 수십만 톤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변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북한 정권에게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독자적 생존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지원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強) 지도부가 북한 김정은에게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주문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4. 북·중관계 전망

가. 전통우호관계 지속

김정은의 북한은 당분간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과 대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군부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며, 남북한 간 갈등국면을 지속하고 미국과의 대립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 권력을 공고히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6) “訪朝平壤島局勢再次逆轉令人惋惜” <http://opinion.huanqiu.com/roll/2012-03/2570301.html> (검색일 2012.3.30).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양받았기 때문에 김정일 노선을 충실하게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핵무기를 포기하는 정책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미·대남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북한이 한·미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지속·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대외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일수록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가질 것이다.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미·일의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안정유지 지원과 대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과 내년이 지도부 권력교체기라는 점에서 북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북극정책과 중국견제 강화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도록 할 것이다.⁷⁾ 따라서 북·중관계는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실무차원의 지도부간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국제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중·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안보 접촉·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이미 김정일의 방중을 초청했고 금년 10월 중국에서 공산당 신지도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연내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들과 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7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기념일,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과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등을 계기로 양국은 우호친선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역시 북한 지도부와 유대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주체노선을 강조해 온 나라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과도하게 중국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며, 2012년 3월 31일 베를린 미·북 접촉에서 미국측이 북한 이근 외무성 미주국장에게 중국이 북한 대신 인공위성을 발사해주는 방안을 제의했을 때에도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金正은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대미 외교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으려 하고 있다.⁸⁾

7) 북한이 중국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 북한 핵·미사일문제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4월 중순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를 약속한 ‘2.29 북·미 합의’와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최첨단 레이더를 이동 배치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게 될 것이다. 북한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눈감아 주게 되면 중국의 국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북 비난과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게 되면 북·중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져오게 될 또 다른 문제는 동북아에서 군사력 강화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의 가입을 공식화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군사도발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안보환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더욱 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직면하여 미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따라서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직간접적으로 북한에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표출된 바 있다. 중국측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를 역전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관련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8)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143조’의 효과를 노린 행동이었다. 첫째로는 부친의 선군정치 노선을 계승함으로써 김정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둘째로는 대미 북핵 협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셋째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林泉忠, “金正恩去中國國際化,” <http://opinion.dwnews.com/news/2012-04-02/58686581.html> (검색일: 2012.4.2).

안정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⁹⁾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보다는 민생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설득해 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한국측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국내정치 목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선불리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 포기를 강요했다가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북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만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를 적극 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한·미·일의 대북 군사 압박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¹⁰⁾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한반도 안보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북한이 붕괴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한·미가 강경하게 대응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처럼 북한에 대해 식량과 원유지원 카드를 활용하여 북한에게 핵무기 실험과 같은 더 위험한 군사도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설득외교에 나설 것이다. 또한 한·미·일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조치 보다는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즉, 북한문제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은

‘2.29 북·미합의’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도록 하고 북핵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9) “台席請會見李明博稱不希望半島緩和勢頭逆轉” <http://world.huanqiu.com/roll/2012-03/25566690.html> (검색날 2012.3.26).

10) “北批評半島局勢再次逆轉令人遺憾”

다. 동맹조약 유지

북한의 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수록 북·중 간 군사교류·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장례식 하루 전인 2011년 12월 27일 쉬차이허우(徐才厚)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조문 차 방문하는 자리에서 군사적 우호협력관계 발전·공고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 지도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여 북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중·러와의 군사안보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제재·압박정책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남북한 간 갈등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중국과 군사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첨단 공격무기를 제공하거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과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호전적이고 불안정적인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위험성이 있고 중국의 평화발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사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러는 이미 4월 22일부터 서해상에서 해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급변사태 시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국 단독으로 대응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본다. 북한이 한·미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는 북·중 간 동맹관계의 효력을 강조함으로써 한·미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저지하려 한다. 반면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조성될 때에는 북·중관계가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여 발생하는 무력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¹¹⁾

11)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직후 중국외교부는 북·중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규정했으나,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이 전개되는 상황과 김정일이 사망하여 북한이 불안정한 국면 시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시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요컨대,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편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정권이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무시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탈북자문제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불법적으로 중국 영내에 진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식량을 구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적지 않은 북한인들은 북한으로 귀국하는 대신 중국내에 계속 남았다. 중국에 남은 탈북자의 일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탈출했다. 2012년 현재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는 이미 2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미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도 있다.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에서 식량난이 악화되는 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된다면 대량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위기가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적극 차단하려 할 것이지만, 1,300킬로미터나 되는 국경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1월 2월 멩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중요한 이유도 중국내 탈북자문제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출입국관리문제를 집중 논의하려는 데에 있었다. 북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탈북자의 중국진입문제에 대한 협의도 김정은 집권초기 북·중 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중국이 일차적으로 취하게 될 조치는 북한에게 식량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 국경지역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경지역 경비병력을 증원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 영내에까지 중국 국경수비대와 공안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사태가 중국 동북지역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량 탈북자 발생으로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국이 고려하게 될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국경선이 탈북자 유출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통일된 직접적 원인의 하나가 헝가리-동독 국경선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입한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붙잡히게 되면 중국 국내법과 북·중 합의(1986년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부 간의 불법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조치를 취할 것이다.

금년 2월 초 중국공안이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하는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중국내 탈북자문제가 한·중 및 미·중간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한국정부와 미국의회는 중국에게 탈북자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 다뤄주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까지 제기하였으나, 탈북자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 받은지 얼마 되지 않고 북한정권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탈북자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¹²⁾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북한의 안정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마. 경제교류 · 협력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개발·보유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대미 및 대남한 정책에 당분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의 경제원조에 기대야 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 제공 규모를 확대하여 북한이 안정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직전인 2월 20일 중국정부는 푸잉(傅瑩) 중국외교부 부부장 일행을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에게 6억 인민폐에 달하는 대규모 무상 식량원조 제공 계획을 전달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가로 북한에게 24만 톤의 영양식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맞아, 중국도 20만 톤이 넘는 쌀과 옥수수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중국이 북한에

12) 2012년 3월 말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진 후진타오-이명박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내 탈북자문제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이후 장기간 베이징 주재 영사관에 체류하고 있었던 4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북한으로 송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했던 양(당시 10만 톤)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식량원조 약속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해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북한에게 중국의 식량원조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식량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과 중국 간에 합의된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위화도·황금평 경제지대 협력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될 것인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대내적으로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김정은이 주체성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북한의 투자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기업의 북한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한·미·일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황금평지구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손실에 대해 80%를 중국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투자 메리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리스크가 크고 투자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에게 충분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선 경제무역지대 사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5. 결론 및 고려사항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북한 권력이양이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는 큰 변화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전략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불신과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권력교체기의 과도기를 맞아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¹³⁾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도와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북한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¹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이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3) 중·미 간 전략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권위 있는 논의를 Kenneth G. Lieberthal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http://www.brookings.edu/papers/2012/0330_us_china_lieberthal.aspx (검색일 2012.4.4)을 참고.

14)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2012년 1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북한에 대해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국제사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제언했다. "2012년1월17日外交部发言人刘为民例行例行记者会," <http://www.mfa.gov.cn/chn/gx/yby/lyrb/zhs/1886731.htm> (검색일 2012.1.17).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서로 현격하게 다른 국가조건을 가지고 있고 국가이익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국제고립 속에서 국가생존 자체까지도 위협을 받는 나라다. 중·북관계는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이면서도 서로 독자성을 강하게 가진 사이이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문제국가’이기도 하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5조에서도 합의한 내정불간섭원칙을 금과옥조처럼 견지하고 있다. 2010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에게 내정과 외교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의했는데, 이는 중·북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전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고 북한 내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말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과도하게 중국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을 확대하고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발언권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채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실타래를 주변 강대국을 활용하여 풀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다. 주변국을 통해 우회하는 것보다 북한과 직접 통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¹⁵⁾

15) 중국과 대만은 1960년대 말 중국의 대대만 포격이 진정되었던 기간 중에도 비밀리에 제3차 국공합작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양안관계에 대해 실용적인 입장을 보여 온 중·대만은 현재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경제통합 실현을 향해 나가고 있고, 상무부총리와 부총통 당선자 간 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魏丕林, 『1949-1979: 國共關係秘錄』,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6, pp. 107-121.

연구 논문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지영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서종원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지영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chojiy@bok.or.kr

I. 서론

이 논문은 7.1 조치이후 시장확산이 북한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실험하고자 한다.

CGE 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북한 경제 분석은 통일 또는 이행이후 북한 경제가 시장 경제로 전환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된 북한 경제를 모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중경제 모형을 통해 7.1 조치이후 시장확산의 결과를 모의실험함으로써 시장활성화 기간(2002~2006)동안 나타난 북한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시장확산이란 가계의 소비에서 시장소비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의미이며 시장활성화 기간 북한 경제의 변화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수입 증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계정행렬에 대한 추정에서부터 CGE 모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수들의 추정에 이르기 까지 북한 경제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의적인 가정이 개입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가정은 주로 북한 경제를 CGE 모형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중국의 과거 자료 등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II. 7.1 조치이후의 북한 경제

1. 시장확산

7.1 조치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시장을 사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2007년 이전까지¹⁾ 이루어진 후속조치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2년에는 생산재 거래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원자재의 거래에 대해서 기업간 직거래도 허용했다. 또한 2005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생산재 거래 시장으로 수입물자교류시장을 개설했다. 소비재 부문에서는 2003년 3월부터 농산물 거래만 허용하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확대하여 공산물의 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을 도입했다. 기존의 소비재 유통은 국영상점이 중심이 되고 농민시장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나 종합시장을 도입하면서 유통망은 시장 거래와 국영상점, 일반 상점으로 다양화되었다. 또한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은 다른 기관·기업소에 운영권을 이관함으로써 시장의 참여가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기업소로 확대되었는데(김영운·최수영(2005))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상점을 임대 받지는 못하지만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방식이 증가하여 서비스 업종이 크게 증가했다.(양문수(2010))

2. 시장가격의 변동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관찰되는 북한 경제의 특징은 인플레이션과 수출입 증가이다. 인플레이션은 7.1 조치 직후 발생했다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안정화되었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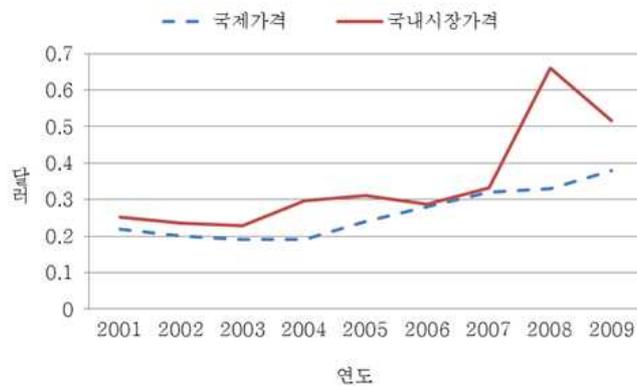
7.1 조치 직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화폐발행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수영(2007)은 통화량 증가의 원인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평균 18배 인상된 임금을 기업이 은행대출로 충당했을 가능성과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기업간 현금거래가 허용되면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1)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 정부는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7.1조치 이후의 시장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양문수(2010)는 2002년~2006년을 시장화 촉진기, 2007년~현재까지를 시장화 억제기로 구분하고 있다.

7.1 조치 직후 물가 상승이 과도한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면 2007년을 기점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한 것은 국제 쌀 가격의 상승 및 대북 쌀 지원 중단에 여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7.1 조치 이후 2007년 2사분기까지 북한원화의 평가절하로 물가는 급등하였지만 달러로 표시한 쌀의 시장가격은 7.1 조치 당시의 1.2배에서 1.3배 정도로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달러 표시 쌀의 시장가격도 함께 급등하고 있다.

그림 1 쌀의 가격 변화 추이



자료: 국내시장가격은 한기협(2010),
 국제가격은 대중수입단기(한국무역협회)임

3. 수출입의 변화

7.1 조치 이후 수출입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폭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7.9 억 달러 수준이던 무역수지 적자는 2005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중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적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대중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5억 달러내외에서 변동하는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4년 26~7%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82.2%가 대중무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최근 대중수입의 급증은 북한의 시장확산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수입은 2002년~2009년간 연평균 23%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양문수(2006)에 따르면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 7.1 조치 이후 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종합시장의 소비재 유통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원자재의 경우 응답자의 50%이상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원자재의 중국산 비중이 80%이상이라고 대답하였고 종합시장에 유통되는 소비재의 경우도 80%이상이 중국산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표 1 2000년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적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6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무역수지적자	857	970	790	837	817	1,005	1,102	1,104	1,556	1,288
대중무역수지적자	414 (48.3)	404 (41.6)	259 (32.8)	232 (27.7)	214 (26.2)	582 (57.9)	764 (69.3)	811 (73.5)	1,279 (82.2)	1,096 (85.1)
수출	556	650	735	777	1,020	998	947	918	1,130	1,063
수입	1,413	1,620	1,525	1,614	1,837	2,003	2,049	2,022	2,686	2,351

자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조

주: 남북교역은 제외. 괄호는 전체 무역수지적자에 대한 비중.

7.1 조치 이후의 시장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시장 거래의 비중이 늘었지만 국내공급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수입이 용이하고 비교적 북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수입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7.1 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를 CGE 모형을 통해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중경제를 반영하는 CGE 모형을 통해 시장이 확산될 때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하겠다.

III. 북한의 이중경제 모형화

1. 북한의 사회계정행렬

1) 선행연구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게 된다. 이처럼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부문 모형 분석(multisectoral model analysis)의 일종인 CGE 모형에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업연관표를 발표하지 않으므로 북한 경제를 분석한 기존의 CGE 분석들은 북한 경제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용가능한 부분적인 정보들과 다른 유사국가의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자료들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발표된 과거의 투입산출표들이다. 개혁개방이전의 중국 산업구조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중국의 투입산출표를 사용한 연구로는 1979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신동천·이영선(1997)과 1981년 투입산출표를 사용한 Kuribayashi(2005)가 있다. 동독과 소련의 자료도 이용되는데 신동천(2004)의 경우 CGE 모형을 이용하여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1987년 동독의 산업연관표와 1970년 남한의 민간소비비율을 사용하였고 이영훈(2000)은 소련의 1966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투입산출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투입산출관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자료이다.

2) 북한의 사회계정행렬 추정

가) 분석방법 및 자료구성

이 논문은 Noland et al.(2001)이 추정한 1996년 북한 사회계정행렬을 사전적 정보로 하여 교차 엔트로피 극소화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2002년 사회계정행렬을 도출하였다.

Noland et al.(2001)는 거시부분은 발표된 북한 자료와 유사국가의 자료들을, 미시부분은 중국의 개혁이전 자료와 남한 자료를 적용하여 북한의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했다고 밝히고 있다.²⁾

교차 엔트로피 방법은 추정 이전에 사회계정행렬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든 사용 가능한 사전적 정보를 결합한 뒤 행의 합계와 열의 합계가 같아지는 제약을 만족하면서, 사전적 정보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새로운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는 것이다. 교차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한 투입산출계수 추정은 신동천(1999)을 토대로 하였고 북한 GDP의 총량은 UN의 추정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은행의 GDP 추정자료는 북한의 부문별 생산량 추정치에 남한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환율을 적용한 수출액, 수입액과 함께 사회계정행렬로 나타낼 경우 자료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³⁾ 단,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은행 자료를⁴⁾ 적용하였는데, 산업부문을 농업, 광업·경공업·시설업, 중공업, 건설, 기타부문의 5개로 분류하고 있는 UN의 부문별 부가가치 추정치보다 산업분류가 더 자세하기 때문이다.⁵⁾ 북한 무역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였는데 북한 무역자료는 무역상대국을 통해 집계되므로 비교적 정확하다. 우선, 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북한의 2002년 산업연관표를 교차 엔트로피 적정화 방법으로 추정하였다.⁶⁾

나) 이중경제의 투입산출표 추정

Noland et al.(2001)의 모형은 이중경제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입산출표는 북한 산출물을 하나의 가격으로 평가한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행국가들도 이러한 전통적 투입산출표(traditional I-O coefficients)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경제가 존재하는 이행과정의 경우 부문별로 계획과 시장의 비중이 다르고 하나의 산출물이 2개의 가격을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투입산출표를 사용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Xu et al.(1992)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이중경제에 적합한 투입산출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한 투입산출표를 토대로 Xu(1993)는 중국의 이중경제를 CGE 모형으로 구성하여 계획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의 부문별 암묵가격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된 부문별 암묵가격과 1983년 부문별 시장가격의 격차를 비교함으로써 부문별 가격 왜곡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Xu et al.(1992)와 Xu(1993)의 이중경제 모형을 북한 경제의 현실에 맞게 변형한 후 가계소비 가운데 계획부문의 비중을 축소시킬 때 도출되는 부문별 시장가격과 수입의

2) Noland et al.(2001)이 추정된 투입산출표 역시 자료상의 제약을 극복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96년을 대상으로 추정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북한 산업구조를 추정한 점과 노동과 토지 부문의 생산요소 구분과 최종수요 구성이 다른 산업연관표 추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한 점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위 투입산출표를 사전적 정보로 사용하였다.

3) 북한의 산출물에 남한 가격을 적용시킬 경우 생활수준이 과대평가된다는 문제점 또한 있다. 한국은행의 1인당 북한 GDP는 2002년 762달러로 UN 추정치의 468달러보다 약 1.6배가량 높다.

4) 농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 전기·가스·수도업,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의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5) Noland et al.(2001)은 산업을 11개로 구분(쌀, 옥수수, 기타농업, 광업, 경공업, 산업중간재, 자본재, 건설, 공공행정, 군사, 서비스)했다. 이 논문에서는 쌀, 옥수수, 기타 농업을 농림어업으로, 자본재를 중공업으로, 산업중간재를 SOC로, 공공행정, 군사, 서비스를 서비스·기타 부문으로 분류했다.

6) <부록 2> 참조

추이를 추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1983년 이중경제 모형을 2002년 북한 경제에 맞게 변형했다.

먼저 Xu et al.(1992)를 토대로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투입산출표를 추정해보자. Xu et al.(1992)는 가계, 투자, 정부지출은 시장과 계획경로를 모두 이용하여 이루어지지만 수출입은 시장 부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수출입이 모두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의 경우 지원성 차관의 형태로 전량 중국에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부문을 통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입의 일부는 계획부문을 통해 공급되고 수입량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다. 즉 수입은 계획과 시장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는데 중공업과 광업 부문은 전량 계획부문을 통해 수입되고 농업, 경공업, 서비스기타 부문은 전체 수입의 일정부분이 계획을 통해 수입된다.⁷⁾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만 시장과 계획경로를 모두 이용한다고 가정하였고 투자와 정부지출은 계획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2002년 7.1 조치 이후 생산재의 구입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비중을 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가계는 계획경로를 통해 배급이 결정되면 전체 소득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시장을 통해 소비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부문별 계획가격을 pxp_i , 시장가격을 pxm_i , 중간소비 Z_{ij} 를 라고 하자. 최종수요는 소비지출(C_i), 투자지출(I_i), 정부지출(G_i), 순수출($E_i - M_i$)로 구성되고 소비는 다시 시장소비(CM_i)와 계획소비(CP_i), 수입은 계획부문의 수입(MP_i)과 시장부문의 수입(MM_i)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중경제의 중간수요와 시장총신출 및 계획총신출은 다음 식(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_{ij} = pxp_i b_{ij} (XP_j + MP_j) + pxm_i b_{ij} (XM_j + MM_j) \dots (1) \text{ 중간수요}$$

$$pxm_i (XM_j + MM_j) = \sum_j^n [pxm_i b_{ij} (XM_j + MM_j)] + CM_i \dots (2) \text{ 시장총신출액}$$

$$pxp_i (XP_j + MP_j) = \sum_j^n [pxp_i b_{ij} (XP_j + MP_j)] + CP_i + G_i + I_i \dots (3) \text{ 계획총신출액}$$

방정식의 개수는 $n^2 + 2n$ 개이다. (1)의 우변에서 앞 항은 계획중간수요이고 뒤 항은 시장중간수요이다. (2)와 (3)의 우변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는 좌변의 총신출과 같다. 미지수는 이중가격을

7) 경공업과 서비스기타 부문은 전체 수입의 10%, 농업부문은 2002년 곡물수입량에 상응하는 36%가 계획부문의 수입이라고 가정했다.

적용한 투입산출표의 새로운 투입산출계수(b_{ij})와 계획총산출(XP_i), 시장총산출(XM_i)이고 미지수의 개수는 $n^2 + 2n$ 개이다. 가계의 시장소비와 계획소비, 시장부문의 수입과 계획부문의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앞에서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로부터 얻을 수 있고 가계소비에 대한 계획소비 비중과 전체수입 중 계획수입의 비중을 임의로 가정하면, (1)~(3)식은 미지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으므로 XM_i, XP_i 와 b_{ij} 의 해를 구할 수 있다.

Noland et al.(2001)의 산업연관표에서는 가계소비를 시장소비와 계획소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정한 가계소비 가운데 시장소비의 비중을 임의로 가정해야 한다. 북한은 1961년까지 소매상품 유통액 중 개인시장과 농민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했을 뿐 이후로는 사적 부문에 대한 통계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새터민의 증언이나 거시관련 통계(전기소비량, 수송용 석유소비량) 등을 이용하고 있다.

암시장 이용 경험은 새터민의 탈북 시기나 지역, 직업 등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체로 식료품 등 소비재의 경우 60~70% 정도를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가계는 건설과 SOC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을 소비하고 농림어업과 경공업 부문의 60%, 광업과 중공업, 서비스·기타 부문의 10%를 시장을 통해 소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북한의 2002년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면 가계소비의 38.4%가 시장을 통해 조달되고 이것은 2002년 GDP의 14.8%를 차지한다.

또한 부문별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비율 역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Xu et al.(1992)이 사용한 1983년 중국의 부문별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표 2>와 같이 가정한다. 시장가격을 1이라 했을 때 시장가격에 대한 계획가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문별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비율

	농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	SOC	서비스기타
계획가격	0.80	0.61	0.96	0.94	1.00	1.00	0.92
시장가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중국은 전 부문에서 이중경제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경우 건설과 SOC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이 같다. 2002년 7.1 조치를 통해 현실화한 북한의 이중가격 구조도 <표 2>와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7.1 조치를 통해 현실화된 쌀 가격은 44원(1kg)인데, 한기범(2009)에 따르면 2002년 2사분기 쌀 1kg의 시장가격은 60원으로 계획가격은 시장가격의 약 73% 수준이어서 1983년 농림어업부문의 계획가격이

시장가격의 80%인 중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농림어업, 광업부와 같은 기초산업 부문의 계획가격은 낮지만,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기타 부문의 계획가격은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 사회주의 가격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시장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 7.1 조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경제 초기의 중국의 가격구조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식 (1)~(3)의 외생변수들이 결정되면 미지수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중가격을 적용하여 도출한 새로운 투입산출표와 부문별 계획총산출, 시장총산출 금액은 <표 3>과 같고, 이 절에서 추정된 결과가 7.1 조치 직후 북한의 이중경제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표 3 2002년 북한의 투입계수와 계획 시장의 총산출 추정값

(총산출 단위 억 달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	SOC	서비스기타
농림어업	0.1494	0.0041	0.2152	0.0000	0.0629	0.0142	0.0374
광업	0.0034	0.0307	0.0771	0.0144	0.0136	0.4045	0.0290
경공업	0.0259	0.0124	0.2214	0.0147	0.0510	0.0299	0.0449
중공업	0.0123	0.0088	0.0115	0.1520	0.1560	0.0139	0.0433
건설	0.0050	0.0080	0.0000	0.0096	0.1029	0.0045	0.2501
SOC	0.0259	0.0202	0.0413	0.0678	0.1846	0.2006	0.0160
서비스기타	0.0155	0.0109	0.0637	0.0486	0.0583	0.0580	0.0016
계획총산출	396.6	93.4	142.9	149.1	257.8	125.2	548.1
시장총산출	107.3	14.1	40.6	6.1	4.3	10.4	0.5

2. 이중경제의 CGE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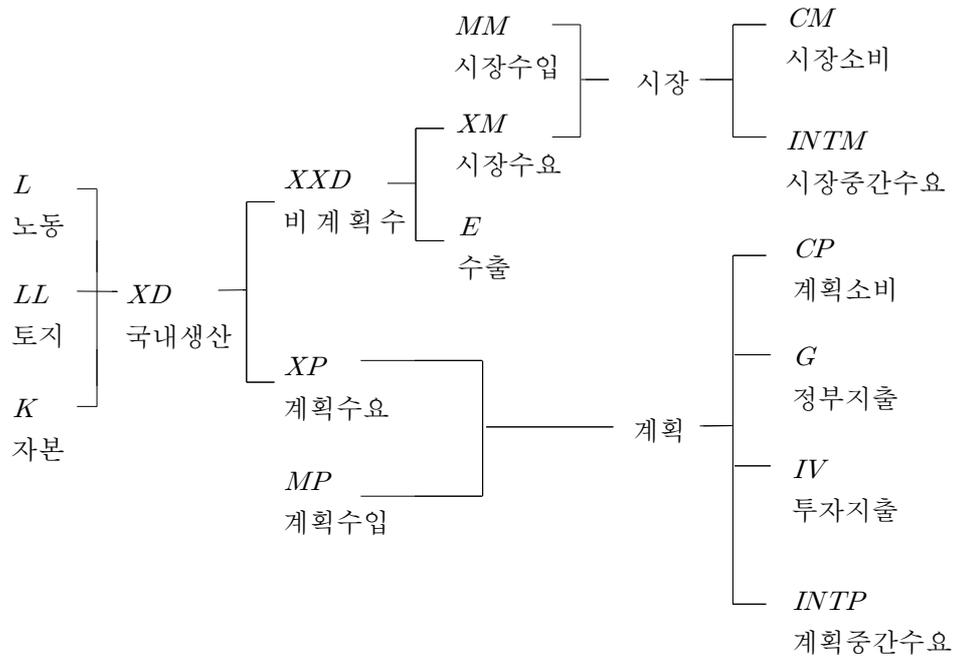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이중경제 투입산출표를 토대로 이중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CGE 모형을 만들고, 모의실험을 통해 가계소비에서 시장비중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시장가격과 수출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7.1 조치 이후 소비재와 생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장이 확산되었다면 북한 경제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추정결과가 실제 관찰되는 경제현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중경제 CGE 모형은 Xu(1993)를 참고하여 북한 경제 구조에 맞게 변형하였다.

생산요소는 노동(L) 토지(LL), 자본(K)으로 구성되며 국내생산(XD)은 시장과 계획을 통해

소비되는데 계획수요는 가계의 계획소비, 정부의 투자지출과 정부지출, 계획중간재수요로 구성되고 비계획수요(XXD)는 국내시장수요(XM)와 해외시장수요(E)로 나뉜다. 계획을 통해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이 모두 이루어지지만 시장을 통해서 소비지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개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투자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생산요소시장의 소득은 임금이 가계로, 이윤과 지대가 정부로 배분된다. 가계소득은 임금과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Fsub$)으로 구성되는데 가계는 소득을 모두 지출하고 저축은 하지 않는다. 가계수입에서 배급을 통한 계획소비의 비중(mr)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면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 소비한다. 정부수입은 이윤, 지대, 간접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부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고 정부지출과 가계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지출한다. 정부저축은 해외저축과 함께 총투자를 결정한다. 이때 투자지출과 정부지출의 부문별 비중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즉, 계획에 따라 주어진 금액만큼을 각 부문에서 소비한다. 이중경제의 모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이중경제 모형의 구조



IV. 모의실험

이 장에서는 시장활성화 정책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계소비에서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우의 효과를 모의실험한다.

초기조건은 2002년의 북한 경제를 반영한다. 추정한 2002년 북한의 산업연관표로부터 가계소득에서 계획부문이 차지하는 비중(mr)은 0.62이다. 즉, 가계는 임금과 정부보조로 구성된 가계소득에서 62% 가량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는 계획소비를 하고 나머지 38%를 시장에서 소비한다.

초기조건에서 계획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면 가계의 시장소비(CM_i)가 증가한다. 시장부문의 총공급(X_i)은 국내시장총산출(XM_i)과 시장부문에서의 수입(MM_i)으로 구성되고 시장부문의 총수요는 가계의 시장소비(CM_i)와 시장중간수요($INTM_i$)로 구성된다. 가계의 시장소비 증가에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국내시장총산출의 가격(pxm_i)과 수입재의 국내가격(pm_i)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er)은 수입재의 국제가격(pwm_i)이 주어져있으므로 수입재의 국내가격(pm_i)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비계획수요(XXD_i)는 국내시장수요(XM_i)와 해외수요(E_i)로 구성되는데 해외수요는 수출수요함수로부터 수출재의 국제가격(pwe_i)이 주어져 있으면 변화가 없다. 반면, 국내시장수요는 증가하므로 비계획수요 전체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XD_i)은 노동, 토지, 자본의 함수이다. 토지, 자본이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부문별 노동공급이 주어진 상태에서 부문별 노동의 시장수요와 계획수요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국내총생산은 또한 비계획수요(XXD_i)와 계획수요(XP_i)의 합과 같은데 비계획수요 증가에 따라 계획부문 총산출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계획부문의 가격(pxp_i)은 주어져 있고, 초기조건인 시장가격이 전 부문에서 1이라고 했을 때 전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계획부문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부문별 시장가격, 수입, 무역수지적자와 환율의 변화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시장비중 증가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

		$mr=0.62$	$mr=0.5$	$mr=0.4$	$mr=0.3$	$mr=0.2$
시장 가격	농림어업	1.00	1.60	1.76	1.58	1.64
	광업	1.00	1.69	2.11	1.66	1.67
	경공업	1.00	1.64	1.87	1.57	1.59
	중공업	1.00	2.00	2.30	2.04	2.07
	서비스기타	1.00	1.63	1.83	1.58	1.61
수입	농림어업	3.32	2.90	2.45	3.40	4.03
	광업	2.41	2.41	2.41	2.41	2.41
	경공업	3.73	3.49	3.21	3.78	4.11
	중공업	6.77	6.77	6.77	6.77	6.77
	서비스기타	2.52	2.36	2.18	2.56	2.78
	합계	18.76	17.94	17.03	18.93	20.11
무역수지 적자		8.70	5.82	3.25	7.66	9.54
환율		1.00	1.67	1.93	1.57	1.56

시장가격은 전 부문에서 상승한다. 가격의 계획소비 비중이 30%까지 감소했을 때 농림어업부문의 시장가격은 1.58배, 중공업 부문의 시장가격은 2.04배까지 증가한다. 국내재의 시장가격과 함께 수입재의 국내가격도 상승하고 수입재의 국제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환율이 함께 상승한다.

경제 전체의 수입(M_i)은 계획부문의 수입(MP_i)과 시장부문의 수입(MM_i)으로 구성된다. 계획소비 비중이 감소한 경우, 계획부문의 수입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으므로 100% 계획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는 광업 부문과 중공업 부문의 수입은 변화가 없다. 시장부문의 수입은 국내재의 시장가격과 수입재의 국내가격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재의 시장가격이 수입재의 국내가격보다 높다면 수입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한다.

아래 모의실험의 추정결과를 참조하면 계획비중이 40%로 감소할 경우 수입은 감소하다가 계획비중이 20%까지 더 줄어들면 수입이 증가한다.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국내재의 시장가격은 환율보다 낮은 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재의 시장가격은 환율보다 높다. 환율이 더 높은 경우 국내재의 시장가격은 수입재의 국내가격보다 낮아 시장에서는 수입수요를 국내시장총 산출로 대체한다.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량에 변화가 없으므로 수입량과 환율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이 1.93배까지 급등하면서 수입은 소폭 하락했다가 계획 비중이 20%까지 축소되면 환율이 다시 1.56배까지 낮아지면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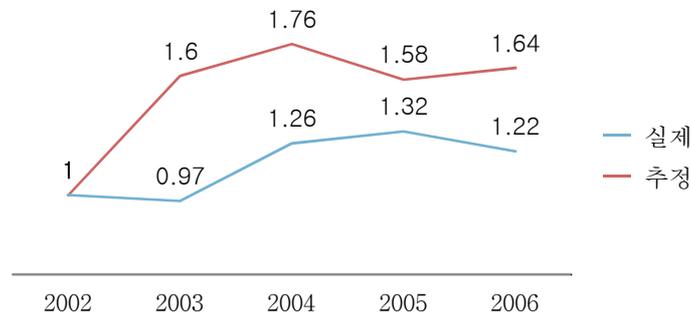
모의실험 결과를 2002년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비교해보자.⁸⁾ <그림3>은 2002년 쌀

8) 그림 3과 그림 4는 연도별 실제 지표와 모의실험의 추정 결과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연도와 각각의 계획 비중(mr)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1kg의 시장가격⁹⁾을 1이라고 했을 때 시장가격의 변화(실제)와 가계소비에서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감소시켰을 때 농림어업 부문의 시장가격(추정)을 나타낸 것이다.¹⁰⁾ 농림어업 부문의 실제 시장가격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쌀 가격으로 변화 추이와 농림어업 부문의 시장가격(추정)을 비교하겠다.

7.1 조치 이후 2006년까지 시장활성화기의 쌀 1kg 시장가격은 1.32배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1.22배 정도로 안정화된다. 그리고 CGE 모형을 이용한 경우 가계소비에서 계획비중을 20%까지 감소시켰을 때 농림어업 부문의 시장가격은 실제 쌀의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데 계획 부문의 비중을 40%까지 줄였을 때 1.76배 증가하다가 20%까지 축소시키면 1.6배 안팎에서 변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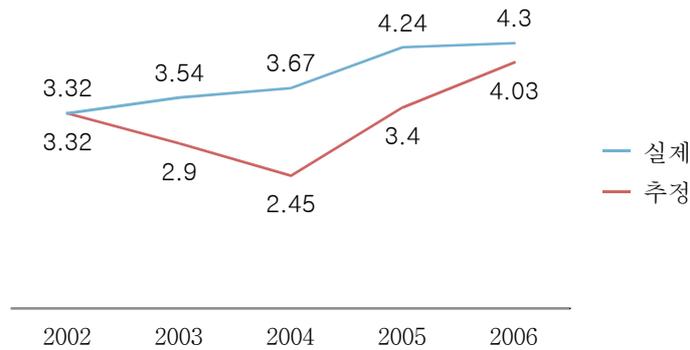
그림 3 시장가격의 변화(농림어업)



7.1 조치 직후 달러표시 시장가격이 비교적 빨리 안정화되는 것은 수입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부문의 수입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 3.32 억 달러에서 2006년 4.3 억 달러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모의실험에서는 수입이 약간 하락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계획비중이 20%까지 감소했을 때 수입은 약 4.03억 달러로 초기에 비해 0.71 억 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에서 수입이 감소할수록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이 증가할수록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림 4 수입의 변화(농림어업)

9) 한기범(2010)의 분기별 쌀 1kg의 달러표시 시장가격을 평균한 수치이다.
 10) 실제가격의 변화는 연도 변화에 따른 것이고 추정가격의 변화는 계획비중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북한재 추정가격은 모형의 px_i , 즉 국내재 시장가격(pxm_i)과 수입재의 국내가격(pm_i)의 평균가격이다.



모의실험에서 계획비중을 40%까지 축소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가계의 시장수요 증가로 국내재의 시장가격과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입재의 국내가격의 변화가 국내재의 시장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모의실험에서 계획비중이 40%까지 축소될 때 <표 4>에서 환율은 1.93배까지 상승한다. 반면, 계획비중이 20%까지 더 축소되면 환율이 점차 하락하여 수입재의 국내가격의 변화가 국내재의 시장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수입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모의실험에서는 실제 지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것은 경제 전체의 수입을 계획부문의 수입과 시장부문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계획부문의 수입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최종수요 중 가계 부문에서만 시장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는데 실제 기업소의 원자재 수입도 7.1 조치 이후 시장활성화 기간 동안 수입재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결과에 비해 수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이 논문은 7.1 조치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가계의 시장소비 비중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나왔다고 가정하고 이중경제하에서 시장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하였다.

북한과 같이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가계의 시장소비 증가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또한 수입재의 국내가격 상승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재와 수입재의 상대가격 변화가 수입의 증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장확산에 따라 국내재의 시장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이 확대될수록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 조치 직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시장의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장가격이 1.2-1.3배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시장가격의 증감과 수입의 증감은 상반되게 움직인다. 산업부문별 변화에 있어서도 수입이 고정된 광업 부문과 중공업 부문의 시장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문헌

-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 2009.
- 김영윤·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동향」, 『통일정세분석』제 2호, 통일연구원, 200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1999.
- 신동천,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 『응용경제』, 제 6권 제 1호, 2004.
- 신동천·이영선, 「대북투자과 북한경제」, 『경제학연구』, 제 45집 제 2호, 1997.
-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제 12호, 2006.
- _____,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통일연구원, 2010.
-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정철, 「북한의 화폐개혁, 반시장주의라는 오해와 쌀 값 현실화라는 진실」, 『현안진단』 제 155호, 코리아연구원, 2009.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4.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Chang, Sukin,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Ko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p.116-117.
- Kuribayashi(2005), *Industrial Structure In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KIEP, 1996.
- Noland, M., Robinson, S., Wang, T.,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DevelopmentandCulturalChange*, Vol.49Issue4, 2001.
- Xu, D., "Price distortion in transition process: A CGE analysis of China's case", *EconomicsofPlanning*, Vol.26, No.2. 1993.
- Xu, D., Deng, S., Gruver, G., "the application of Leontief Input-Output Matrix in the transition process",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4.,No.1. 1992.

〈부록 1〉 모형의 방정식

- 1) $pm_i = pwm_i(1 + tr_i)er$
- 2) $pe_i = pwe_i er$
- 3) $pvam_i = (1 - itax_i)pxm_i - \sum_{j=1}^7 IO_{ij}pxm_j$
- 4) $pvap_i = (1 - itax_i)pxp_i - \sum_{j=1}^7 IO_{ij}pxp_j$
- 5) $XD_i = XXD_i + XP_i$
- 6) $pxd_iXD_i = pxxd_iXXD_i + pxp_iXP_i$
- 7) $pxxd_iXXD_i = pxm_iXM_i + pe_iE_i$
- 8) $px_iX_i = pxm_iXM_i + pm_iMM_i$
- 9) $XD_i = AD_i \prod_{lc=1}^2 L_{i,lc}^b LL_{i,llc}^c K_i^{(1-b-c)}$
- 10) $TL_i = \prod_{lc=1}^2 L_{i,lc}$
- 11) $XXD_i = AT_i [q_i E_i^{\gamma_i} + (1 - q_i) XM_i^{\gamma_i}]^{\frac{1}{\gamma_i}}$
- 12) $X_i = AC_i [\delta_i MM_i^{-\alpha_i} + (1 - \delta_i) XM_i^{-\alpha_i}]^{-\frac{1}{\alpha_i}}$
- 13) $AOUT_i = pxm_iXM_i + pxp_iXP_i + pe_iE_i$
- 14) $ASU_i = AOUT_i - pe_iE_i + pm_iMM_i + pxp_iMP_i$
- 15) $w_{i,lc}L_{i,lc} = XD_i pvam_i b_{i,lc}, lc = hosm$
- 16) $\frac{E_i}{XM_i} = \left[\frac{pe_i}{pxm_i} \frac{1 - q_i}{q_i} \right]^{\frac{1}{\gamma_i - 1}}$
- 17) $\frac{E_i}{E_i^0} = \left[\frac{pwe_i^0}{pwe_i} \right]^{\gamma_i}$
- 18) $\frac{MM_i}{XM_i} = \left[\frac{pxm_i}{pm_i} \frac{\delta_i}{1 - \delta_i} \right]^{\frac{1}{\alpha_i - 1}}$
- 19) $INTM_i = \sum_{j=1}^7 IO_{ij} (XM_j + MM_j)$
- 20) $INTP_i = \sum_{j=1}^7 IO_{ij} (XP_j + MP_j)$
- 21) $VM_i = \sum_{j=1}^7 px_i IO_{ij} (XM_j + MM_j)$

- 22) $VP_i = \sum_{j=1}^7 p_x p_i IO_{ij} (XP_j + MP_j)$
- 23) $YG = IND TAX + \sum_{i=1}^7 t_{iLL} L_i + \sum_{i=1}^7 r_i K_i$
- 24) $IND TAX = + \sum_{i=1}^7 itax_i (p_x m_i XM_i + p_x p_i XP_i + p_e E_i)$
- 25) $GS = mps YG$
- 26) $TGC = YG - GS - FSUB$
- 27) $FSUB = fsubrt YG$
- 28) $p_x p_i G_i = gles_i TGC$
- 29) $YH = \sum_{i=1}^7 \sum_{lc=1}^2 w_{i,lc} L_{i,lc} + Fsub$
- 30) $p_x CM_i = clesm (1 - mr) YH$
- 31) $p_x p_i CP_i = clesp mr YH$
- 32) $YVA = \sum_{i=1}^7 (1 - ax_i) (Aout_i - VM_i - VP_i)$
- 33) $INVEST = GS + FS$
- 34) $p_x p_i IV_i = ivles_i INVEST$
- 35) $FS = \sum_{i=1}^7 pm_i MM_i + \sum_{i=1}^7 p_x p_i MP_i - \sum_{i=1}^7 p_e E_i$
- 36) $XP_i + MP_i = CP_i + IV_i + G_i + INT P_i$
- 37) $XM_i + MM_i = CM_i + INT M_i$
- 38) $\Omega = \prod_{i=1}^7 clesm_i CM_i$

방정식: 206(28n+10, n=7)개

내생변수

(가격변수)

pm_i : 수입재의 국내가격, pe_i : 수출재의 국내가격, pxd_i : 국내가격

pxd_i : 평균산출물가격 pxm_i : 국내시장가격, px_i : 복합재 가격

$pvam_i$: 부가가치 시장가격 $pvap_i$: 부가가치 계획가격

$w_{i,lc}$: 임금률($lc = hosm$) er :환율

(수량변수)

MM_i : 시장부문 수입, E_i : 수출, XD_i : 국내산출량, XP_i : 계획산출량, XXD_i : 비계획산출량

XM_i : 시장산출량, X_i : 복합재 공급량, $INTM_i$: 시장중간수요

$INTP_i$:계획중간수요, VM_i :시장중간수요액, VP_i :계획중간수요액

$L_{i,lc}$: 노동수요, $AOUT_i$: 총산출액, ASU_i : 총공급액

CM_i : 가계시장 소비지출, CP_i : 가계계획 소비지출, G_i : 정부지출, IV_i : 투자지출

$INDTAX$: 간접세, FS :무역수지 적자, YVA : 총부가가치, GS : 정부저축

YG :정부수입 YH :가계수입 TGC :총정부지출

$FSUB$: 정부의 가계보조 Ω :가계의 효용

내생변수의 개수: $206(28n+10, n=7)$ 개

외생변수

pxp_i :계획가격, pwe_i : 수출재의 국제가격, pwm_i : 수입재의 국제가격

r_i :이윤율, t_i : 지대율, MP_i : 계획부문 수입, $w_{i,lc}$: 임금률($lc = hosp$)

LL_i : 부문별 토지 공급량, TL_i : 부문별 노동공급량

모수(parameter)

mr : 가계의 계획소비 비중, τ : 간접세율, IO_{ij} :투입산출계수

$ivles_i$: 부문별 투자비중, $gles_i$: 부문별 정부지출비중, $clesm_i$: 부문별 시장소비비중, $clesp_i$:
부문별 계획소비비중, $fsubrt$:정부수입중 가계보조 비중

γ_i : CET 함수의 지수, α_i : CES함수의 지수

AD_i : 생산함수의 shift parameter, AT_i : CET함수의 shift parameter, AC_i : CES함수의
shift parameter

〈부록 2〉 2002년 북한의 사회계정행렬

(단위: 억 달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건설	SOC	서비스	자본	토지	가계시장	가계계획	정부	투자	수출	합계
농림어업	6.36	0.05	3.93	0.00	0.62	0.30	2.34	0.00	0.00	9.11	6.12	9.86	7.10	3.88	49.67
광업	0.09	0.27	1.08	0.17	0.13	4.62	0.70	0.00	0.00	0.21	1.87	0.20	0.19	0.78	10.29
경공업	1.28	0.17	4.60	0.30	0.69	0.66	2.51	0.00	0.00	5.29	3.55	0.32	2.24	2.23	23.83
중공업	0.58	0.12	0.23	2.97	1.80	0.34	2.33	0.00	0.00	0.08	0.74	0.64	11.50	2.31	23.62
건설	0.10	0.10	0.00	0.13	0.68	0.11	3.08	0.00	0.00	0.00	0.00	0.07	10.16	0.00	14.42
SOC	3.84	0.39	1.54	3.22	4.89	6.45	2.32	0.00	0.00	0.00	0.90	0.26	0.84	0.00	24.66
서비스	0.73	0.14	1.26	0.92	0.70	1.26	1.75	0.00	0.00	1.43	12.93	28.76	3.11	0.86	53.85
자본	8.65	2.22	2.36	3.82	1.04	4.85	17.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0.62
토지	7.7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70
가계시장	5.00	0.00	0.29	0.00	0.00	0.00	10.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11
가계계획	6.33	1.22	2.18	2.27	0.86	1.88	4.78	0.00	0.00	0.00	0.00	6.59	0.00	0.00	26.11
정부	5.69	3.20	2.62	3.05	3.02	4.19	3.03	40.62	7.70	0.00	0.00	0.00	0.00	0.00	73.12
저축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6.44	0.00	8.70	35.14
수입	3.32	2.41	3.74	6.77	0.00	0.00	2.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76
합계	49.67	10.29	23.83	23.62	14.42	24.66	53.85	40.62	7.70	16.11	26.11	73.12	35.14	18.76	

북한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서종원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sjw@koti.re.kr

1. 머리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직전까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국가 개발 사업 중 하나는 ‘라선자유 경제무역지대’ 개발일 것이다. 김정일은 1991년 경제특구 지정으로 대외개방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지역을 다시 주목하고 사망 전까지 사업추진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계획, 사업진행과정 등에서 과거처럼 북한 혼자만이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이를 더욱 추동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이 역인 것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2차 핵실험, 광명성 2호 미사일 등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까지 연이은 중국 방문으로 여전히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혈맹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과시했으며, 중국의 경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무역확대 등에 관심을 갖고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진흥계획 등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개발계획’ 이 북한의 라선지역 개발과 연계되면서, 라선지역에 다시 한번 동력이 전달되어 동북아 경제협력과 교통물류분야 중심지로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라선지역 개발에 따른 동해 출해 통로 확보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다렌항과 단둥항을 대체하고, 장기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라선항 개발이 절대적 과제로 평가되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투자재원 확보와 라선 개발을 통한 꾸준한 외자유치 계획이 맞아떨어지면서 라선지역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역시 극동연해주 개발을 위해 북한,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과정속에서 북한은 지난 2010년 1월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1월 27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5차 개정¹⁾에 이어, 최근 2011년 12월 3일 6차 개정²⁾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와 행정체계의 정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체계적이고도 발 빠른 움직임인 것만은 분명하다. 2008년 이후 개성공단 사업의 담보상태,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2002년 이후부터 꾸준히 유입되던 외화의 차단,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라선지역은 대외시장 확보의 교두보, 안정된 외화유입 창구 역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다시 라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북한 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이 지역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라선개발 사업은 북한 내부 통치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훈통치 측면에서도 라선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는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한편 라선시 개발의 성공이 미치는 영향은 북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 교통물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라선지역 개발 현황과 특징, 라선특별시를 포함하고 중국, 러시아와 연계되는 교통물류망 현황을 진단하고, 라선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라선·선봉 개발 현황 및 특징

1. 라선·선봉개발 개발현황

□ 최초의 경제특구로서의 라선·선봉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기간 중인 1991년 12월에 ‘정무원 결정 75호’를 통해 라선-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라진을 동북아 화물중계지, 수출 가공기지, 관광

1) 2011년 12월 3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대해 6차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이전 법령보다 구체화, 세분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자격 및 기준의 확대, 투자자 제도보장 및 편의확대, 기업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편의조항 확대, 중앙관리기관을 라선경제무역지대지도기관에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다.

및 금융 중심지 등을 골자로 한 국토 총건설계획을 제정하면서 사업추진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 개발로 정치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초기 라진·선봉 경제특구 개발계획

구분	1993년 발표안			1995년 수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시기	1993~1995	1996~2000	2001~2010	1995~2000	2001~2010
주요 내용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항만, 철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 완비	국제화물중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수출주도형 제조업 외 국인 투자 본격유치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 도시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항만 등 경제하부구조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 - 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 건설 - 항만처리능력 3,000만 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부응하는 종합적·현대적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성장 -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 서비스, 관광 등 종합적 기능의 특구 - 항만처리능력 역 톤 이상

자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구역지대 투자환경』, 1995.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도시개발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이 지역을 국제화물기지 기능 수행을 위해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개발하며, 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²⁾ 이후 라진·선봉 특구(라선시)는 개발초기에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1995년 1, 2단계를 통합하여 총 2단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수정된 바 있다.

그러나 라진·선봉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적 관심 부족과 그에 따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객관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계획만 거창했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과 제도의 미비와 미숙한 행정처리, 국제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현지 투자절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중추였던 기반시설의 부족 등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여건의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외에도 현실에 맞는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하지 않고 중공업, 경공업, 관광업, 중계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의 강행으로 부진한 성과를 노정하였다. 북한은 라진·선봉 특구가 애초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특구의 지위조정, 개혁조치의 후퇴, 남한기업의 진출봉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외국자본의 관심 부족으로 사실상 북·중간의 변경무역지대로 전락하게 되었다³⁾.

2) 김산철 「라선특설시 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 『2010동북아·북한 교통·동향과 분석』,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2011, p.206.

3) 원동욱, 안병민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2008, p.28.

□ 변화된 지정·지경학적 환경과 라선시 개발 재추진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라선지역 개발의 첫 삽을 뜬지 18년 만에 라선시를 현지도 하였다. 북한 당국의 라선지역 개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라선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라선은) 중요한 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운영하고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라선 개발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어, 2010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라선지역을 라선특별시로 지정하였고,⁴⁾ 곧 바로 관련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정비에 나섰으며, 얼마 전 2011년 12월에는 이 법을 더욱 유연하면서도 구체화시켜 수정·보충한 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있던 기존 계획을 벗어나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이러한 의지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함께,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배경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대외무역수지 적자와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화폐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정부의 준비 부족, 제한된 재화공급능력 등으로 인한 물가 및 환율폭, 물자부족 심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면서 실패로 끝났다⁵⁾. 또한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외화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는 경제재건책의 일환으로 라선지역 개발을 재추진하여 경제난과 대북제재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적 배경으로는 김일성의 유훈적 성격이 강한 라선시 개발을 재추진함으로써 후계자로서 치적을 쌓고 후계구도를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지역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그동안 실패작으로 치부되었던 라선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김일성 유훈사업 추진과 김정은 치적 쌓기,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⁶⁾. 셋째, 라선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1991년 처음 추진할 당시 유엔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편승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중국의 투자유치 부진 및 관련정책의 부재, 체제전환 후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여력 부족, 한국과 일본의 소극적 참여와 국제사회의 불신 등의 원인으로 실패로 돌아갔다⁷⁾.

4) 라선시와 선봉군은 1991년 ‘라선·선봉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후, 2001년 라선과 선봉을 통합하여 라선특별시로 되었다가 2010년에 특별시로 승격되었음.

5) 이숙자,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라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 『POCFI 경영경제연구』, 제10권 제12호, 2010.12, p.211.

6) 유병규, 최성근, 「북한 라선특별시 개발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권 386호, 2010. 2, p.2.

7) 김범승, 「청지투 선도구와 라선특구 개발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권 55호, 2011. 2, p.12.

그러나 현재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나,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자국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개발계획⁸⁾과의 횡적 연계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해로의 출해구가 없는 중국으로서는 창지투 지역 인근의 라진항, 선봉항을 갖춘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중국의 투자하에 라진항과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면 라진·선봉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주요 도시와 더욱 밀접한 연계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항만적체 해소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거점 확보를 위한 라진항 개발 및 라진-하산 간 철도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가스관 사업 등으로 라선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라진항 개발권을 활용하여 중국과는 도로연결을, 러시아와는 철도연결을 지원받아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물류중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⁹⁾

표 2 라선특별시 주요 개발 일지¹⁰⁾

일시	내용
1991.12	- 라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국토총간설계획 제정
1993.3	- 라선 국토총간설계획 수립(3단계)
1993.9	- 라진·선봉 직할시로 개편
1995	- 라선 국토총간설계획 수정(3단계-2단계) - 법적·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세관규정 건물양도, 저장규정 등)
1997.6	- 투자실적 부진으로 투자환경조성 위한 제도 개선 · 변동환율제 실시 외화바꾼돈표 유통폐지 · 특구내 개인영업 허용, 원장리국제무역시장 개장, 국영기업독립채산제 실시
1998.9	- 헌법 개정 이후, 지대통제 강화정책 실시 - 원정 국제자유시장 출입통제 강화 - 남한기업 지대방문 중단
2000.8	- 라선직할시를 라선시로 개편
2004.1	- 라선시를 라선특급시로 개편
2005.7.27	- 라진항 개발 합의(북중)
2008.3~4	- 라진~하산 철도 현대화 및 라진항 개보수 합의 - 라진항 3호 부두 사용권 러시아에 제공

8)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투먼성(圖們江)지역합작개발계획 강요-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는 청춘·지린·투먼을 축으로 2020년까지 GDP 1.9조 위안 도시화를 70% 달성으로 동북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으로 '동북3성 진흥계획'의 한 축인 대상지역은 청춘시 및 지린시의 일부지역,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대상으로 훈춘을 창구로, 연지·중징·투먼(연몽투)를 최전방으로, 청춘, 지린을 안진으로 역 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다른 2개의 동북지방진흥계획인 '랴오닝연해경제발전계획'이나 '허더차(하얼빈-다칭-차허할)공업화합지대'와는 달리 변경경제개발구로서의 성격이 강해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계획이다.

9) 최하원 이판용, 「북중 경협과 시사점-중국 창지투 개발과 북한 라진·선봉 개발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NHER 리포트』 제41호, 2011. 5. p.13.

10) 김선철, 「라선특별시 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 『2010동북아·북한 교통-동향과 분석』,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2011, pp.205~206.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2008.7	- 중국 대련청립경제무역유한공사-라진강성무역회사, 라진항 1호 부두 현대화 사업 합영계약 체결
2008.10.8	- 라진~횡산 철도 개보수 착공식
2009.12	- 김정일 위원장 라진시 현지지도
2010.1.4	- 라진시 라선특별시로 승격
2010.1.27	- 라선경제무역역지대법 5차 개정
2010.3.15	- 원장~수이펀허 국경대교 보수공사 착공식(5월 말 완료)
2011.6.9	- 라선특별시 경제협력 착공식 ¹⁾ - 원장라~라진간 도로 보수공사 착공
2011.10.13	- 라진~횡산 철도 시범열차 운행
2011.12.3	- 라선경제무역역지대법 6차 개정

한편, 201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라진시 도시개발 계획안에는 라선특별시를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무역과 국제 금융 중심지로의 개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계획안은 라선특별시를 중심구역과 창평지구 등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라진·선봉지대의 특징

라선경제특구는 북한이 추진하는 다른 특구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빨리 지정되었고, 타 특구계획에 비해 가장 큰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리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특구계획이 단일국가와의 협력사업임에 반해 라선경제특구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현재의 북한 입장에서 라진·선봉 개발은 김일성 유훈사업 추진과 김정은 치적 쌓기,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정치적 목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경제특구 계획이며¹²⁾, 성공가능성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편이다. 즉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동북지방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동북3성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¹³⁾가 가능한 편이다. 또한, 라진항 개발이 주변의

11) 당시 착공식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과 중국 상무부장 천더밍이 참석하였으며, 훈춘 취연허 통상구로부터 라진시까지의 2급도로 개보수, 라진항 화물운송, 중국인들의 라선관광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2) 최하원, 이판용, 「북중 경협 동향과 시사점-중국 칭저투 개발과 북한 라진·선봉 개발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NERI 리포트」 제41호, 2011. 5. p.22.

13) 황진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과 강원도 라진항 개발과 동북아 물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 p.10: 동북 3성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물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00만 TEU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1,370만TEU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라진항 유치 가능한 컨테이너 물량은 2020년에 228만 TEU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TSR 연계 컨테이너 물동량, 동북 3성의 일반화물 등이 라진항에 서 유치가 가능한 물량으로 라진항의 성장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매우 높다.

선봉항, 청진항 개발로 확대되고, 이러한 주변지역 개발이 관광사업 등으로 연계되면 라진항으로 인한 투자 유인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기존 북한 4대 경제특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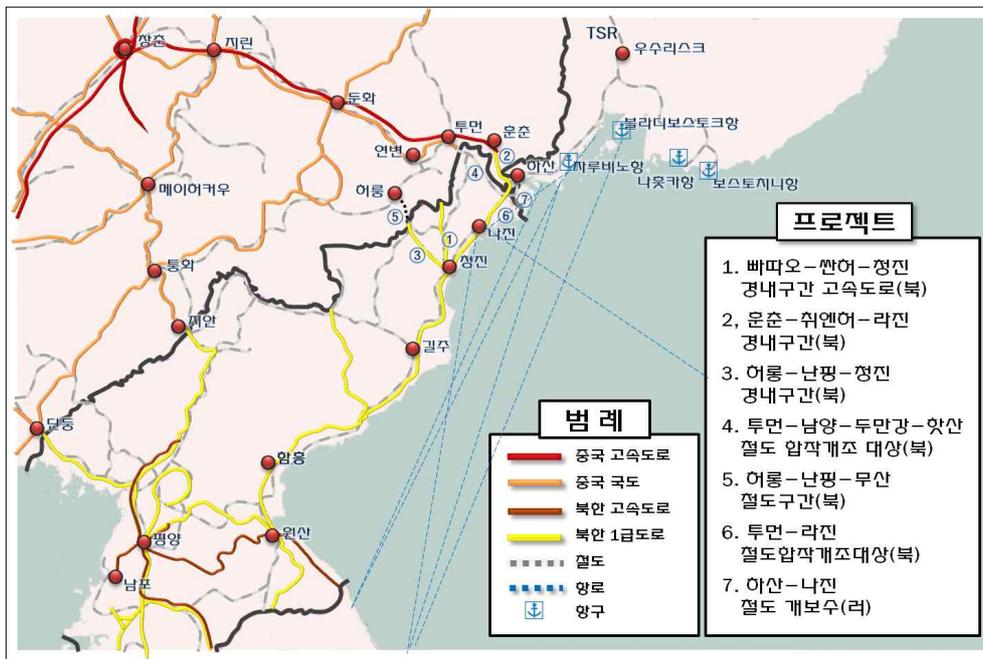
구분	라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위치	함북	평북	황남	강원
면적	746km ²	132km ²	66km ²	약100km ²
특구지정일	1991.12	2002.9	2002.11	2002.11
특구유형	경제무역지대	항공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특구설립목적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기공, 금융, 서비스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국제관광지
토지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개발주체	지대당국	행정구	개발업자(현대그룹)
	임차기간	-	50년	50년
현재 상태	2010년 라선특별시 승격과 함께 재추진	2011년 황금평우회도 경제지대로 축소하여 추진	2008년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 후 중단
개방대상	모든 국가	중국	한국	한국 (현재 중국 포함 타국과 협상)

자료: 원동욱, 안병민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2008, 재정리.

III. 라진·선봉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라선시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북동부 최단지역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훈춘, 극동 러시아 지역과 인접해 있어, 북한의 타 지역에 비해 육상과 해상 교통망, 국제 운송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단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 기능 발휘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두만강지역 교통체계와 북중러 국제운송 프로젝트



1. 철도망

라선지역과 연결되는 철도망은 크게 라선특별시 내부의 철도와 중국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부지구 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부지구 철도망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두만강과 해안선을 따라 총 405km의 평라선(평양-라진)¹⁴⁾과 함북선으로 순환망을 구성하고

14) 평라선은 평양과 동해안의 라진을 잇는 총연장 819.0km의 대표적인 동서연결철도이다. 평라선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간선철도망으로는 평의선, 만포선, 평덕선, 강원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이 있다. 동 노선은 북한의 '67년 인민경제계획기간에 전구간이 전철화되었으며, 청진-라진구간의

있다. 해당 지구 내에는 평라선(평양-라진)이 11.7km, 평라선의 지선으로 라진항선 2.3km, 송학선 1.3km가 통과하고 있다. 이 노선에 위치한 주요 역은 라진역과 두만강역이 있으며, 두만강역에서 라진역까지는 혼합선(표준궤와 광궤)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철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¹⁵⁾이므로,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항만과의 연계교통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도로망

이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보면, 라선특별시에는 원산-라진 간 1급도로¹⁶⁾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철도, 항만 등과 연계되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등지로 화물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함경북도 북부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로는 청진-무산, 청진-회령, 청진-라진, 무산-라진 간을 연결하는 2~3급도로가 있다. 이들 도로는 청진-회령-온성-새별-선봉-라진-청진을 연결하는 순환망(약 385km)으로 되어 있다¹⁷⁾. 청진-라진 간 도로구간은 100km이며¹⁸⁾, 이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고 청진항과 라진항을 육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라진-선봉-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라진·선봉 경제특구 내부 도로(약 43km)로서 러시아의 하산과도 연결된다. 선봉지역으로부터 웅상, 굴포리를 거쳐 우암지역까지 해안도로(29.5km)가 연결되어 있으며, 우암지역에서 토리, 두만강, 홍의, 적지, 사회를 지나 청학까지 두만강기슭을 따라 도로(37.6km)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선봉지역에서 백학리, 철주리를 거쳐 은덕군의 녹아리로 연결되는 도로와 굴포리 해안에서 두만강노동자지구로 이어지는 16km구간의 직선도로가 있으며, 두만강 유역을 따라 선봉-새별 간 55km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은덕군에 위치한 원정리에는 중국의 정신(敬信)지구와 연결되는 원정교가 있으며, 원정교는 지난 해 5월 착공한 바 있다. 새별군에서는 중국의 훈춘지역과 연결되는 류다교가 있어 이를 통해 북·중 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호체계는 반자동화가 실현되었다. 평라선 전구간이 중량 레일로 교체되었으나, 낮은 침목의 콘크리트침목 교체작업은 미진한 상태이다(전구간의 30% 수준). 동 노선은 지형이 험한 낭림산맥을 횡단하기 때문에 철교는 475개(총연장 22km), 타널은 146개(총연장 62km)로 타널의 경우 평라선 전체 연장의 8%에 해당한다.

15) 해당 지구의 교통인프라 실태는 2000년대 초반에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현지조사자료, 2007년 남측에서 진행한 평라선의 일부구간(금골선·하천선)과 경의선(평양-신의주) 현지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북한에는 도로장비 및 관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1급도로는 주로 중앙과 도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해당 도로는 원산에서 라진을 잇는 1급도로의 일부구간에 해당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1차) 연구(남북한 도로 및 항공 운송 관련 연구)」, 2007

17)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간일성중합대학출판사, 1995

18) 이 중 포장구간이 29km이고 나머지 구간은 약 6.5m 폭의 토사(土砂) 도로이다. 이 구간의 교량은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지형적으로 구간 중 7% 이상의 곡선구간이 3km나 있다.

한편, 새별-온성 도로를¹⁹⁾ 통해서 중국 훈춘지역과 연결되는 혼용다리가 있으며 온성에서 각각 2km, 15km 떨어진 지점에 중국의 투먼, 훈춘과 연결되는 남양교가 있다. 남양교는 북한과 중국의 투먼, 옌지(延吉)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수송루트로서, 이를 통해 북부지역에서 양국 간 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회령 간 도로 약 90km 가운데 55km 구간은 도로 폭이 7m 가량이며, 이 구간에 있는 회령다리는 중국의 삽합을 통해 룡징, 옌지를 연결하는 주요한 육상통로로서 양국 간 인원왕래와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⁰⁾

이 지역에서 북·중간 교역과 인원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은 라진-원정-훈춘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두만강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국 지린성의 훈춘-옌지-창춘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축과 라진항간의 도로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 원정세관과 중국 취옌허(圈河)세관은 교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 지린성과 북한 간 육로를 통한 세관 중 여객 및 차량, 화물량이 가장 많은 통로이다.

3. 항만

라선지역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사업은 효과적인 라진항 개발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선지역을 동북아 가공무역과 물류체계 개선의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성공여부는 라진항의 현대화를 통한 원활한 물동량 수송, 항만 하역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함경북도 라진시 창평동에 위치한 라진항은 1974년에 무역항으로 개항된 항만으로 북한의 개방을 상징하는 대표항만이다. 라진항은 라진만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안쪽으로 라진반도(안주로)로 둘러싸여 있고, 라진만 입구는 대초도와 소초도로 막혀 있다(수심 9~10m). 구소련 붕괴 이전에 소련 극동함대의 임시정박항구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러시아와 연결 가능한 광궤 레일이 부두 내에 부설되어 있다.

라진항에는 3개의 돌출부로 된 10개의 안벽이 있으며, 부두 안벽의 총 길이는 2,515m이며 호안의 길이는 640m이다²¹⁾. 안벽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접안능력은 23선석(7천 톤 × 8선석, 1만 톤 × 15선석), 하역능력은 300만 톤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진항의 총부지면적은 38만²km²이며 보관시설 면적은 총 203,000m²이다. 라진항의 항만 내 철도인입선은 16km이

19) 총 연장 36km이며 평균 도로폭이 5~6m이다.

20) 『로동신문』 2007.10.8.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회령시는 서쪽으로 무산군, 남쪽은 부령군, 청진시, 청암구역, 동쪽은 은덕군, 새별군, 온성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삽합과 육로를 연결되어 있다. 회령과 삽합간에는 매년 약 15만 톤의 화물과 15만 명의 인원이 왕래하고 있다.

21)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며, 이중 광궤노선 연장은 11.7km이다²²⁾.

표 4 북한의 라진항 시설별 투자계획

구분	개발계획
기존시설 개선	- 2호 부두(5, 7호) 정비 : 컨베이어, 하역설비 - 3호 부두를 석탄전용부두화 - 여객선 계류안벽 정비 : 124m 수리 - 선박수리 도크 확충 : 2만 톤급-5만 톤급
신부두 건설	- 4호부두 : 컨테이너 전용(80만TEU), 통과능력 620만 톤/년 - 5호 부두 : 통과능력을 400만 톤/년 - 여객부두 : 여객 110만 명 통과(왕복)

자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투자대상종합목록」, 1996.

그러나 현재 라진항은 1970년대 이후로 개발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라진항을 연간 5천 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할 추진계획을 3단계로 구성하여 세웠지만²³⁾, 이 계획은 북한의 내부경제 악화와 라선시 경제무역지대개발 사업의 추진력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라진항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중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⁴⁾

한편 라선지역 인근에는 승리화학공장, 라진조선소 등이 있으며 청진지역에 대규모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라진항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은 시멘트, 비료, 원목, 면화, 파철, 코크스 등이다.

표 5 라진항의 시설 능력

부두별	안벽 길이(m)	접안능력		화물취급능력 (만톤)
		7천톤급	1만톤급	
1호부두	970	2척	3척	50
2호부두	965	2척	3척	150
3호부두	580		3척	100
계	2,515	4척	9척	30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내부자료.

22) 라진항내 인입선은 대차로제 없이 화차가 안벽선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광궤철도 11.7km와 표준궤 16km가 부설되어 있다.

23) 북한은 라진항 개발계획을 대외경제위원회 경제개발총국에 일임하고, 해운부 항만총국에 실질적 건설을 맡겨왔다.

24) 「연합뉴스」, 北, 라선특구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중에 넘겨, 2012.2.15.

그리고 라선지역에는 라진항 외에도 자유무역항으로 라선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선봉항이 있다. 선봉항은 1921년에 개항한 웅기항의 새 이름으로 웅기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20만㎡이다. 선봉항은 원유를 가공·정제하여 내보내는 유류전용 항만으로 연간 취급능력은 300만 톤에 달한다. 항만 인근에 입지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연간 약 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북한 유일의 석유화력발전소(35만kw급)가 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선봉항은 근해에서 회유하는 명태·청어·대구 등의 어로 기지로 수산물·공업제품·목재·지하자원 따위의 집산지로 유명하다²⁵⁾. 한편 선봉항은 5,000톤급 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하며 공장으로부터 유조선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직접 압송할 수 있다.

4. 라선지역 연계 국제육상수송로: 중국, 러시아

□ 중국 연계 수송로

현재 라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라선지역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은 중국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선도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라선 개발과 밀접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해 출해항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최적지로 검토되고 있는 항만이 바로 라진항과 청진항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당국도 라진항과 청진항으로의 접근로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지투 선도구 계획에서는 100개의 중점 프로젝트²⁶⁾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중 대외운송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12개 프로젝트에 총 173.5억 위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 북한과 관련해서는 7개, 154억 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파악 된다.

중국의 경우 현재 훈춘에서 취엔허 세관까지 39.1km의 구간은 이미 중국 기준으로 2급도로(왕복 2차선)가 개통되어 있으며, 연지에서 투먼까지의 고속도로가 이미 2001년 말에 준공되어 개통되었다. 북한의 경우 라진에서 원정까지는 라진-비슬령-원정 간 산길 도로와 라진-사회-원정 간 연해도로 2개의 도로가 있으며, 청학에서 2개의 도로가 만나서 원정까지 이어져 있다.

라진-비슬령-원정 간의 산길 도로는 총 54km로, 현재 라진-원정 간 교통운송의 주요 통로

25) 황진희 「북한 주요항만의 개발 동향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2010, 겨울호, p.48.

26) 창지투 선도구계획에서 대외운송로를 포함한 발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기반조성작업을 하며, 2단계인 2012년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인프라 건설 및 중동 대통로를 건설하는 등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세웠다.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도로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도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의 적설량이 많은 관계로 교통이 두절되는 등 부득이 라진-사회-원정 간의 연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라진-사회-원정 간의 연해도로는 총 74.9km로서 산길도로와 비교해서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도로상태가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이다²⁷⁾. 이에 따라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53km의 도로 보수 공사²⁸⁾가 2011년 6월 9일 착공하였다. 한편 원정-취엔허간 교량²⁹⁾은 2010년 3월 15일, 훈춘시에서 북중간 주요 운송로인 두만강 국경대교 보수작업을 시작하여 그해 5월 30일 완료하였다.

표 6 「창자투개발개방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북한관련 대외통로부문

프로젝트명	연장/투자비	건설 기한
빠따오-싼허-청진 경내구간 고속도로	47km/ 총 28억 위안	2015
훈춘-취엔허-라진 경내구간	39km/ 총 23억 위안	2015
허룡-난핑-청진 경내구간	50km/ 총 30억 위안	2015
투먼-남양-두만강-햇산 철도합작 개조대상	126km/ 총 24억 3천만 위안	2020
투먼-청진 철도합작 개조대상	171.1km/ 총 20억 위안	2020
허룡-난핑-무산 철도구간	53.5km/ 총 16억 위안	2015
투먼-라진 철도합작 개조대상	158.8km/ 총 12억 7천만 위안	2020

자료: 길림성 홈페이지

□ 러시아 연계 수송로

2010년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극동지역 발전전략인 『2025년 극동, 자바이칼 사회경제 발전요강』을 반포하였고 극동지역의 향만(자루비노항, 나호드카, 보스토니치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 크라스키노 국경지역 터미널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8~2012년간 블라디보스토크시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에만 총 55억 달러가 책정되어 현재 이 지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시설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매장된 자원수출을 위해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라선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한다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³⁰⁾. 따라서 북한 라선특별시 특히 라진항과 연결은 러시아 극동지역

27) 吉林省工程勘测设计研究院, 『羅津-元汀公路可行性研究報告』, 2006.1.

28) 이 도로의 건설비용, 건설주체가 모두 중국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중국이 동해로의 출해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 단계 조치로 보이며, 도로 보수와 함께 중국의 라진항 개발, 라진항을 통한 대규모 석탄 수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9) 원정-취엔허간 교량은 1936년에 건설된 노후 교량으로, 폭이 좁아 차량의 교차 운행 불가능, 연간 통과능력 최대 60만톤에 불과하고 수송효율이 낮음에 따라 중국측이 300여만위안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다.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 7 라진-햇산 철도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구분	주요내용
주요 경과	- 2008년 라진-햇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협정서 체결 - 2008년 '라선컨트란스' 합작회사 설립 - 2008년 10월 라진-햇산 철도 개보수 착공식 - 2011년 10월 13일 라진-햇산 철도 시범열차 운행
계획	- 2012년 라진-햇산 구간 터널 완공 - 2012년 교량 완공 - 2012년 라진항 화물 터미널 완공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내부자료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라진-햇산 철도노선³¹⁾이 개설되어 있으나, 시설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노선에 대한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물적 수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라선특별시와 햇산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10월 13일 시범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이다³²⁾. 또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북한의 평라선과 함북선은 각각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만주횡단철도(TMR) 등 대륙철도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 남북한 및 대륙간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IV. 동북아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라선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시설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선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의 목표는 지리적 특성인 대륙과 해양의 결절점으로서의 '동북아 국가의 물류수송 거점화'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중계수송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물류수송거점화와 중계수송은 제일 먼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과 물류체계의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주변국가들 모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이들 모두의 편익이 고려된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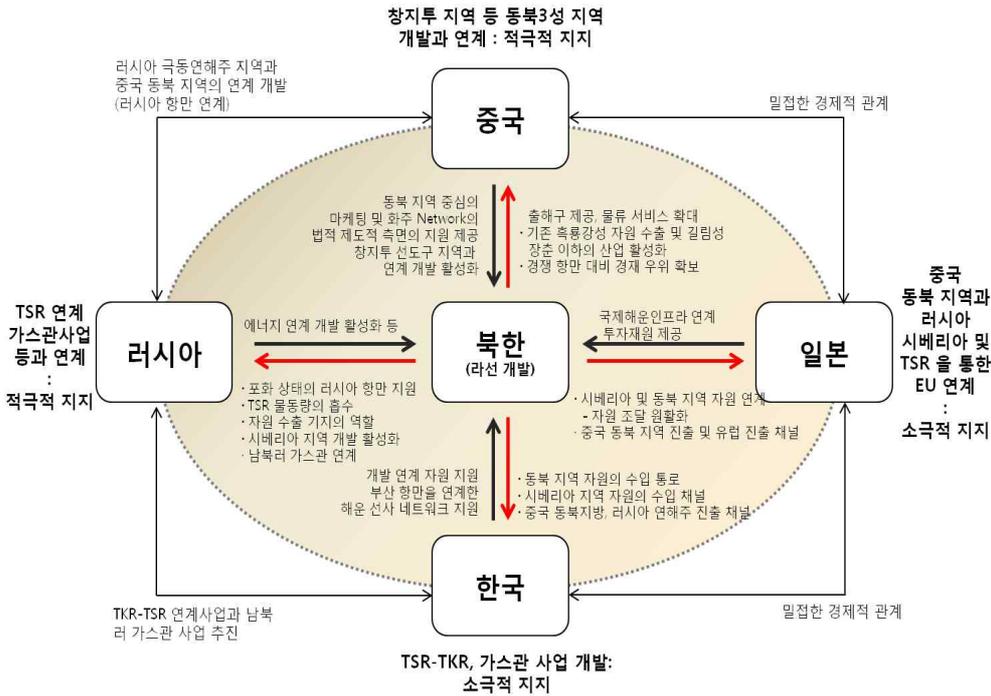
30) 림금숙,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라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통일연구원 2011, p.11~12.

31) 라진-햇산 간의 철도(총 55km)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운송로로서 TKR과 TSR의 연계를 통한 대륙교의 완성 지점이다.

32) 「연합뉴스」, 「라진-햇산 철도 13일 시범운행」, 2011.10.11.

33) 러시아는 라진-햇산 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하여 TKR-TSR 연결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활성화에 관건이라고 보고, 남북철도 연결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러시아 역내의 철도역 및 선로 개선에 4억 루블 투자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 연구」, 2004, p.40.

그림 2 라선 개발 관련 주변국과의 이해관계³⁴⁾



라선지역은 두만강 하류지역의 북중러 3국간 자유무역구의 하나로서 과거와 달리 현 단계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항지투 개발계획 및 극동러시아 개발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연계 교통인프라의 건설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물류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라선지역 개발의 성공은 항지투 계획, 극동연해주 계획의 동반 성공을 의미하며, 라선시 개발의 실패는 그 반대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라선시 개발이 교통물류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34) Northeast Asia Development Project, UNI Consulting 발표자료 수정함.

1. 육상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라선지역 개발의 핵심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결절점으로서의 중계수송 역할에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인프라 정비와 확충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중 간 도로 건설사업과 철도 연결사업, 그리고 북러 간 라진-하산 철도연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해 10월 시범운행을 마친 라진-하산 개보수 구간은 곧바로 이 지역 물자 수송에 이용될 전망이다. 라진-하산 철도는 운행 첫 단계에서 러시아의 수출용 석탄을 주로 수송할 계획이며, 연간 석탄 500만 톤까지 수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는 라진-하산 철도와 연계되는 하산-바라놉스키 철도 구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1,700만 톤의 화물을 처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개발은 라진-하산 철도와 연계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 간 철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한반도중단철도(TKR)와 TSR과의 연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처리되는 북한의 물동량이 확대되면 해상수송보다는 철도를 통한 육상 수송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며, 이는 동해선 연결구간과 연결된 북한의 금강산선과 평라선 등의 현대화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수송체계 통합에 기반한 남북 경협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의 경우 가장 크게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992년 마련한 종합적인 아시아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TID) 사업의 구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를 경유하는 AH1, AH6, AH32 등 세 개 노선 중 AH6노선과 AH32노선이 라선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라선지역은 이 두 노선이 분기하는 요충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단동 등 AH1구간과 AH1과 AH6의 결합 형태인 부산-서울-평양-원산-라진-원정-훈춘 구간으로 거론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연계된 도로교통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은 속성상 200km 이내의 거리에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200km 이내에 위치하는 중국 연변자치주 주요도시들과의 도로망의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100km 이내에 위치하는 훈춘, 투먼, 룡징 등 두만강 유역의 중국 변경도시들과 라선시 사이의 도로교통이 단기간 내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라진항 개발은 주변 공업단지, 광산 도시 등과 라선시 간의 도로망 현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북중러 3국간 라선시를 포함한 관광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여객관광 교통수요의 증가로 3국간 접경지역의 도로망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해상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라선 지역은 두만강 유역 북중러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고, 동해항로로 쉽게 연결될 수 있기에 중국 동북지방의 관문과 대륙과의 경제성 있는 접근을 원하는 일본의 대륙진출 거점으로, 또 광궈가 연결된 러시아의 부동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상교통부문에서는 라선지역과 관련하여 대륙철도나 아시아고속도로와 같은 국제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환동해권 수송로에서 중국 동북지방 화물이 차지하는 위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라진항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라진항과 연계하여 창지투 지역 개발 초기에는 중국 동북지방의 지하자원과 식량을 중국 남방으로의 수송, 남쪽의 공산품을 동북지방으로 보내는 중국의 국내물동량 수송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점진적으로 중국 동북지방 개발과 함께 라진항의 현대화도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국제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창지투 선도구계획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라진항과 청진항을 경유하여, 미주 또는 유럽으로 향하는 환적물동량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³⁵⁾

한편, 라진항에 들어와 부설되어 있는 혼합궤도를 이용하면, 러시아의 TSR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에 TSR 이용에 따른 한국과 일본 물류의 기종점 항만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라선시 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자체 물동량 수송 수요를 수급하기 위해서도 라진항 이용은 필수가 될 것이다.

한편 화물 외에 라진항이 동북아의 중심항이 되면서 동북아 국가 간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객수요의 급증으로 여객 노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라선지역 개발은 동북아 해상교통 체계상에서 동북아 중추항만으로서 라진항 위상 재정립과 라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해상 노선의 신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5) 안병민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에 있어서의 북중간 교통망 현대화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2010. 가을호, p.16.

3. 기타 국제협력사업에 미치는 영향

라선지역 개발은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계된 개발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및 교통물류 인프라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선지역 개발에 따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로 이어지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⁶⁾.

□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 견인

2011년 11월 2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경유 PNG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2013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사에 착수,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³⁷⁾. 이 계획이 라진·선봉 개발과 교통물류축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스관 노선이 한반도의 동해선을 이용하던 경원선을 이용하던 라선특별시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히 가스관 노선은 철도노선을 따라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북한 해당 철도 노선의 현대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 한반도 중단철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라선특별시에 가스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 라진항을 통해 해운으로 러시아 가스를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단기간에 남북러간 가스관 사업의 진행이 어렵더라도 라선특별시 자유무역지대의 장점을 살려 북러간 가스관 연결과 라진항을 통한 가스수출이 선행된다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 한중일 FTA 체제에서의 라선지역 변화

금년 1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정상회의에서 한중FTA 협상 공식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중간 본격적인 FTA 협상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FTA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간 FTA의 체결은 역내 노동력 교류와 물동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각각 북한지역에서 북한의 저렴하고 질이 높은 노동력을 활용한

36) 림금숙, 『창지투 선도와 북한 라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51.

37) 이윤식,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장점, 과제』, 통일연구원, 2011, p.3. 이러한 3국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협력은 19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통해 시작된 본 사업은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한은 개성공단에서의 남한기업 상품, 황금평 지역에서의 중국 상품 또는 라선특별시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또는 중국 상품에 대해 역외가공을 상호 인정한다면, 라진·선봉지역 개발은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일부 지역과 한국, 중국 간의 삼각 자유무역이 이뤄지게 된다³⁸⁾. 만약 역외가공이 인정된다면 라진항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물동량이 3국간을 이동하게 될 것이며, 향후 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와 FTA에서도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라진항은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라선 개발은 동아시아의 FTA를 거쳐서 유럽연합과 같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단초가 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V. 결론

라선지역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국제규준에 부합되는 법제도 정비와 합리적인 투자와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체계 정비 등 투자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연계되고, 개발사업의 규모와 인프라 구축, 투자비용과 투자우선 순위 등이 망라된 보다 구체적인 총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에 기반한 단계적 마스터플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라선시를 방문했던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마스터플랜 미비 등 라선시 개발 부진에 대해 상당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³⁹⁾. 이를 계기로 북한은 사실상의 사업실패로 한동안 손을 놓고 있던 라선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및 창지투 선도구 계획 추진,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정책 등에 북중러 간 경제협력 확대로 라선지역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던 라선지역 개발 사업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라선지역 개발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으며, 이 지역이 중국 창지투 사업과 연계되어 중국 자본의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이 지역 개발사업의 큰 장애중의 하나였던, 교통, 전력, 에너지 등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을 중국 자본 유입으로 일정 정도 해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38) 『조선일보』, “韓·中 FTA에 라진 선봉·황금평 포함 검토”, 2012. 2. 3.

39) 김정일의 라선시 방문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 가라”고,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회물수송을 완만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및 해상운수부문에서 운반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요한 대외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황성 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 및 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라선시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개발 착수 이후 처음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과 이후 이뤄진 라선시의 특별시 승격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부분을 참작하여 보다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은 북한 당국의 라선개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정된 개발 관련법과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개발추진전략에 따른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정치적 적대국가의 관계자들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상태와 6자회담의 정체, 북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 경색된 북미관계 등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자국정책과 3국간 협력이 상호 이익인 현 상황과 함께 이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 당국의 의지가 강력한 상태에서 라선지역 개발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지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동북아 교통물류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관련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라선지역 개발의 성공은 1990년대 UN이 추진하였던 ‘두만강유역개발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두만강유역의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북부지역 간에 국제적인 산업단지의 구축이 되면서 교통물류체계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 특성상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기존 인프라 구축계획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며, 중국 중심의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될 것이다. 또한 라진항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방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라진항 개발이 앞당겨질 것이고, 이 경우 라진항은 우리나라의 부산항에는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동북아 지역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이 라선지역의 개발에 따라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교통물류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중국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에너지 시장 거래의 촉진 등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라선시 개발을 주로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라선시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주도권을 상실을 의미하며, 향후 이 지역 개발협력에서 소외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 연구협의회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

김경술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

KDI 북한경제팀은 2012년 3월 27일 KDI 3세미나실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상황,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남북 에너지협력 현황을 북핵 6자회담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남북경협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정책적·인도적 에너지지원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논의구조를 분석하면서 향후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방향을 전망하였다. 본문에서는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한다.

일 시

2012년 3월 27일(화) 10:00~12:00

장 소

KDI 3세미나실

발 표

김경술,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전망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skim@keei.re.kr

북한 에너지경제의 실태와 남북 에너지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에너지경제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석탄·전력 등 산업별 상황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남북에너지협력의 전개 유형을 ‘북핵 6자회담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남북경협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정책적·인도적 에너지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에너지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1. 북한의 에너지 수급

북한의 에너지 공급 실태를 검토해 보면, 현재 북한의 에너지는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2.1%씩 감소하였다. 2010년 북한의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는 0.65TOE로, 20년 전 1인당 에너지 소비의 절반 수준이며, 우리나라 1972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은 2010년 기준 석탄 66.1%, 수력 21.4%, 석유 4.5%, 기타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별 수급구조는 거의 불변이다. 주종(主宗)에너지인 석탄의 공급은 1990년 수준의 60%선에 머물러 있고, 석유공급도 1990년 대비 27.9% 수준으로 연평균 6.2%씩 감소하고 있다. 전력은 2010년 237억 kwh를 발전하여 같은 해 남한 발전량의 1/20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한의 1990년 발전량의 85.6% 수준이다. 2000년 들어 발전 설비는 감소했으나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1990년대의 힘들었던 상황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한의 일차에너지 공급통계는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010년 북한 1인당에너지 0.65TOE은 non-OECD Africa, Asia 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Pakistan, Philippine, India 보다는 큰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북한 1인당 전력소비비는 971.6kWh인데, 이는 non-OECD Africa, Asia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며 Pakistan, Philippine, India 보다도 큰 것이다.

II. 북한의 에너지 산업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산업, 석유산업, 전력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북한의 주 에너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산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석탄자원은 북한 국토 전역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무연탄 45억톤, 유연탄(갈탄) 160억톤 등 205억톤의 유무연탄이 부존해 있다. 이것은 약 2,663조원의 잠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초무연탄 20억톤, 니탄 2억톤도 존재하고 있어 북한의 석탄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화로 인해 채탄여건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본 및 기술, 장비가 낙후되어 있으며, 1995년, 1996년의 대홍수로 인해 갱구 토사유입 등 피해 복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게다가 전력 부족은 갱내 침수 심화, 광산기계 및 운반설비 가동 저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및 인프라 부실로 인한 동반 부실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열량탄은 산업용 원료나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저열량탄은 발전용이나 민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석탄은 광물자원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1년 약 1,000만톤으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석탄산업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력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석탄광 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와 동시에 현대화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개별적인 협력으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음으로 석유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원유 전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도입량은 1990년 수입량의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석유 인프라는 1976년 1월에 완공된 '조중우호송유관' 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 1973년에 1기, 1977년에 2기를 완공한 '승리화학공장', 그리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1979년에 완공한 '봉화화학공장' 이 있다. 북한은 동서 양안 대륙붕 지역과 일부 육상 지역의 석유개발에 전략을 다하고 있는데, 30여년에 걸친 지질조사와 시추조사 결과 8군데의 석유매장 후보지를 확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주요 지역으로는 안주분지, 서한만분지, 동한만분지, 함북 나진지역 등이 있다. 서방의 중소규모 석유개발회사들을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력사업은 수력설비 56.8%, 화력설비 43.2%로 구성되어 있다. 화력발전소는 총

8개소로 대부분 러시아식 열병합발전소이며, 부품은 주로 구소련 기술에 의존하였다. 순천발전소의 경우는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다. 북한 자체적인 화력설비 건설경험이 전무한 상태이고, 기술과 부품부족 등으로 적정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탄, 중유 등 발전연료 공급도 원활치 못해 가동률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수력발전소는 1만 kW 이상 기준, 약 487만 kW(27개소)의 수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30여개소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소형 7천여개소를 건설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수력발전 부문도 설비 노후화, 잦은 홍수로 인한 수자원 활용여건 악화 등으로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자본/기술 도입을 통한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III. 남북 에너지협력 현황

남북에너지 협력 현황을 ‘북핵 6자회담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남북경협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 ‘정책적·인도적 에너지지원’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먼저 ‘북핵 6자회담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합의한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으로는 대북 경수로 지원방안, 대북 200만kW 전력지원 방안,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방안이 있다. 경수로 지원의 경우는 2005년 9.19공동합의문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었으며, 북한이 2.13합의 3단계(폐기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북 200만kW 전력지원방안은 핵폐기 합의를 조건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2005년 8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됨으로써 다자합의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관련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프로젝트는 3단계 핵폐기과정을 합의한 2007년 2.13합의에 따른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형태로 이행되었다.

‘남북경협사업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로는 개성공단 에너지 공급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 에너지 공급사업, 단천지역 자원 공동개발사업이 있다. 개성공단 에너지 공급사업은 2004년 시범지구, 2007년 1단계 준공 등 사업전개에 요구되는 석유류와 전기를 남한으로부터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154kV 송전선로 2회선과 옥외변전소가 건설되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는 현대아산의 장전발전소(9천kW)와 비상발전기 등 보조전원(6,135kW)으로 현지에서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 바 있다. 단천지역

자원공동개발사업은 남북이 경공업 원자재 지원의 대가로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룡양, 대홍) 공동개발에 합의(2007.5, 남북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지원 공동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함에 따라 그를 위한 에너지공급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3차례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사업평 평가도 완료한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5.24조치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정책적·인도적 에너지 지원사업’ 중 정부의 정책에 의해 시행된 대북 에너지지원 실적은 2002년 10월 남북 철도연결사업용 유류를 지원하는 것부터 2005년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개성주민 난방, 취사용으로 연탄 5.5만톤 지원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민간단체 주도로는 겨울철 난방 및 취사연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연탄과 연탄보일러 지원 등이 그 예이다. 2004년부터는 남북합작 형태로 북한산 무연탄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수입물량도 점차 확대되고 국내 무연탄 수급에도 기여하는 등 안정화되는 중이었으나 이 역시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IV. 전망 및 결론

향후의 남북에너지협력 논의는 ① 다자합의 (북핵 관련 6자회담 등) ② 동북아 국가간 합의 (남·북·러 천연가스·전력·석탄교역 협력 등) ③ 남북간 합의(남북 당국간회담 합의 협력사업, 남북 민간단체 및 기업 간 협력사업, 남북 에너지자원 교역사업 등) 등의 유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 에너지협력은 남북경협 확대를 지원/선도하는 사업으로 남북경협의 전개와 같은 궤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1세대 경협(접경지역 경협)에서 2세대 경협(비접경 특구경협, 나선특구, 황금평 등), 3세대 경협(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협)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며,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사업도 그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확장되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에너지 공급설비 및 인프라 확충, 에너지원의 다원화 등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며 남북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적 표준 및 사양의 통일성 확보 등과 같은 한반도 통합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고려도 요구된다. 남북의 조율된 협력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선결요건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면 언젠가는 남북문제는 더 이상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걸림돌이 아닌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주요 내용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주요 내용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제5차 회의 주요 내용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이다. 북한 헌법 87조는 최고인민회의를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공화국의 창건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해 창설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며, 권한은 △헌법과 법령의 제정, 수정 △휴회 중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주석, 부주석,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와 부총리 및 내각 인사, 중앙재판소·검찰소장의 선거 및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심의, 승인 △국가 예산 심의, 승인 △필요시 내각, 중앙기관의 업무 대책 수립, △조약의 비준과 폐기 결정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제5차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최고인민회의의 의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에 대하여 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0(2011)년 사업정형과 주체101(2012)년 과업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등이었다.

첫 번째 의제인 사회주의헌법 수정에서는 헌법서문에 김정일의 국가건설업적을 불멸의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김정일을 유일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대의원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두번째 의제도

통과되었다.

내각총리인 최영림 대의원은 의정 보고에서 2011년에는 공업총생산액이 전해에 비하여 102%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정상 최광진 대의원은 2011년 국가예산수입은 101.1% 수행되었고, 국가예산지출은 99.8% 집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은 작년 대비 국가예산수입계획을 108.7%, 국가예산지출계획은 110.1%로 증액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어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예산 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을 밝히지 않고 각 항목별 비중만 일부 발표하였다.

마지막 의제인 조직문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서의 권력엘리트들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변영립 대신 태형철 대의원이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국방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변화된 점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장성택, 오극렬 △위원 박도춘, 김정각, 주규창, 백세봉,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상임위원회 서기장 태형철 △내각 부총리 리승호,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 김인식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 전경남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금번 최고인민회의의 의제, 2000년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보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예산, 결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 김은영 전문연구원(key@kdi.re.kr)

박조아 연구원(joah@kdi.re.kr)

1. 주요 의제 및 내용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의 주요의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에 대하여 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0(2011)년 사업정형과 주체101(2012)년 과업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었음.

<표 1>은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2기 제5차 회의까지의 의제를 정리하여 비교한 것임.

2000년 제10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까지의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내용은 부록에서 제공

표 1 역대 최고인민회의 의제 (1998.9~2012.4)

일 지	회 의	의 제
1998.9	제10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사회주의 헌법」 개정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선거
1999.4	제10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예산집행 결산과 1999년 국가예산 승인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2000.4	제10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0년 국가예산 승인 「교육법」, 「대외경제증자법」, 「민용항공법」 채택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변경 북러간 조약 비준
2001.4	제10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 승인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발표 「가공무역법」, 「감문법」, 「저작권법」 채택
2002.3	제10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2년 국가예산 승인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 발표 「국토계획법」 채택
2003.3	제10기 제6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 승인 군사복무법,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 채택 승인
2003.9	제11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 승인
2004.3	제11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각의 2003년 사업정형과 2004년 과업 발표 2003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4년 국가예산 승인

2005.4	제1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4년 사업정형과 2005년 과업 발표 • 2004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5년 국가예산 승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보선
2006.4	제1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5년 사업정형과 2006년 과업 발표 •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국가예산 승인 •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 주동 보고
2007.4	제1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발표 • 2006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7년 국가예산 승인 •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 김영춘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2008.4	제1기 제6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발표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09.4	제2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10.4	제2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9년 사업정형과 2010년 과업 발표 • 200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0년 예산 승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채택
2010.6	제2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총리 소환과 교체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 내각 구성원 교체
2011.4	제2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발표 • 201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1년 예산 승인 • 내각 부총리 해임,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 임명,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보선
2012. 4	제2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 김정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추대 • 내각의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발표 • 2011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예산 승인

2.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내용

가. 헌법서문에서 김정일의 국가건설업적을 법화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품모를 집약적으로 명문화함.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나.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함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함이 김정일과만 결부되게 하여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고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가기 위함임. 이로부터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함.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최고영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구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때문에 수정보충안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내오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의 최고령도자로서 대내외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전반사업을 총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정보충안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새로 규정하는데 맞게 헌법 제6장 제2절 제목과 제91조, 95조, 100조부터 105조, 107조, 109조, 116조, 147조, 156조들을 정리함.

3. 2011년 예산집행 결산 및 2012년 예산계획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2011년 국가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국가예산」을 심의·채택하였음. 북한은 2003년 제10기 6차회의 이후 계속 전년도 예산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에 대해 밝히지 않음. 다만, 각 비목별 비중만 발표하였음. 재정상 최광진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2011년의 예산집행과 2012년의 예산계획을 보고함.

가. 2011년 예산집행 및 주요내용

- 국가예산규모: 총 수입·지출액에 대한 발표 없이 수입·지출 규모가 각각 계획대비 101.1%, 99.8% 수행·집행되었다고 발표함. 국가예산총지출액 가운데 국방비가 15.8% 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음.

표 2 연도별 북한 예산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수입 증가율	3.1	3.2	25	13.6	5.7	15.1	7.1	5.9	4.0	5.2	6.3	7.5	8.7
계획대비 실적	102.4	100.3	100.5	100.9	-	100.8	97.5	100.2	101.6	101.7	101.3	101.1	-
예산지출 증가율	1.9	2.9	2.3	14.4	8.6	11.4	3.5	3.3	2.5	7.0	8.3	8.9	10.1
계획대비 실적	102.7	100.5	99.8	98.2	99.3	104.4	99.9	101.7	99.9	99.8	99.9	99.8	-

- 국가예산수입: 계획대비 101.1% 수행
 - 지방예산 수입은 112.8%로 수행

- 국가예산지출: 계획대비 99.8% 집행
 - 국가예산지출총액의 약 15.8%를 국방비로 지출
 - 금년도 국가예산지출 중 비목별 지출액은 미발표
 -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며 김일성 탄생 100돌 기념비창건에 지출함.
 - 인민적 시책과 사회문화시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여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정휴양과 같은 사회적시책의 실시와 선군시대 체육,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함.

나. 2012년 예산책정 및 주요내용

- 국가예산규모: 총 예산액에 대한 발표 없이 수입·지출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각각 8.7%, 10.1%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음.
 - 재정상인 최광진 대의원은 2012년 국가예산지출계획이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의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 하였다고 발표
- 국가예산수입계획: 전년 대비 8.7% 증가
 - 최광진 대의원은 전년대비 거래수입금은 7.5%, 국가기업이득금은 10.7%, 협동단체이득금

은 5.3%로 장성시키고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2.3%, 부동산사용료수입은 1.9%, 사회보험료 수입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 국가예산지출계획: 전년 대비 10.1% 증가
 - 국방비를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편성한다는 것 외에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관리비에 대한 발표 없이 각 부문 비목의 전년대비 증가분만 발표
 - 경공업과 농업부문은 9.4%,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은 12.1%, 기본건설부문은 12.2%, 과학기술발전에는 10.9%, 교육부문은 9.2%, 보건부문은 8.9%,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부문은 7.0%, 체육부문은 6.9%, 문화부문은 6.8%로 증액 할 것이라고 밝힘.
- 다음 <표 3>는 2011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고, <표 4>는 연도별 예산수입 증가율, <표 5>은 연도별 예산지출 증가율, <표 6>은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을 표시한 것임.

표 3 2012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항 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총예산수입	8.7% 증가
	거래수입금 수입	7.5% 증가
	국가기업이득금 수입	10.7% 증가
	협동단체이득금 수입	5.3% 증가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수입	2.3% 증가
	부동산사용료 수입	1.9% 증가
	사회보험료 수입	1.7% 증가
지출	총예산지출	10.1% 증가
	경공업 농업	9.4% 증가
	전력·석탄·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	12.1% 증가
	기본건설지출	12.2% 증가
	과학기술발전	10.9% 증가
	교육	9.2% 증가
	보건	8.9% 증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7.0% 증가
	체육	6.9% 증가
	문화	6.8% 증가

표 4 연도별 예산수입 증기율

(단위: %)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예산수입	15.1	7.1	5.9	4.0	5.2	6.3	7.5	8.7
국가기업이득금 수입	13.5	7.2	6.4	4.7	5.8	7.7	NA	10.7
협동단체이득금 수입	8.4	23.2	4.5	0.4	3.1	4.2	3.8	5.3
고정재산감가상각금 수입	NA	1.8	9.6	2.6	6.1	2.5	1.4	2.3
부동산사용료 수입	NA	12	5.4	3.1	3.6	2.0	0.7	1.9
사회보험료 수입	3	141	15.1	1.1	1.6	1.9	0.4	1.7
재산 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	NA	1.7	NA	NA	NA	NA	NA	NA
기타 수입	NA	0.9	NA	NA	NA	NA	NA	NA

주: 증기율은 전년 대비 증기율임

표 5 연도별 예산지출 증기율

(단위: %)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예산지출	11.4	3.5	3.3	2.5	7.0	8.3	8.9	10.1
농업	29.1	12.2	8.5	5.5	6.9	9.4	9	9.4
경공업	NA	NA	16.8	NA	5.6	10.1	12.9	
선행부문	NA	9.6	11.9	49.8	8.7	7.3	13.5	12.1
과학기술발전	14.7	3.1	60.3	6.1	8.0	8.5	10.1	10.9
사회적 정책	NA	3	NA	NA	NA	6.2	NA	NA
(교육사업비)	NA	NA	7	4.2	8.2	NA	NA	9.2
(보건사업비)	NA	NA	9.8	5.9	8.0	NA	NA	8.9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	NA	NA	9.4	NA	NA	NA	NA	7.0
체육부문	NA	6.9						
문화부문	NA	6.8						

주: 증기율은 전년 대비 증기율임

표 6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

(단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편성	15.5	15.9	15.9	15.8	15.8	15.8	15.8	15.8	15.8
집행	15.6	15.9	16.0	15.7	15.8	15.8	15.8	15.8	-

[부록] 최고인민회의 발표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2000~2012년)

〈전 력〉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태천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건설을 추진 • 중소형발전소 건설
	200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발전소 조업정상화 태천 2호, 3호, 5호 발전소건설과 안변청년발전소 2단계 건설 • 중소형발전소 건설 지방에서 필요한 전기는 자체해결
2001년	200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만kw 발전능력 새로 조성 • 대규모 수력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 제2단계공사, 송원 태천 안제 확장공사, 태천 5호발전소 등) 건설 완공 • 대흥단 3호, 4호 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 • 화력발전소들의 설비 정비, 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 • 수력발전소들에서 물의 효과적 이용 대책 마련
	200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대비 1.1배로 전력생산 늘임 • 어랑천, 화천, 영원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 • 새기술(순환비등중보일러, 기류식분쇄기, 새형의 고효수차 등) 도입과 전력생산의 기술경제적 지표들의 갱신, 전력소비에 대한 감축수요사업을 강화
2002년	200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정비·보수 및 건설로 발전 능력 향상 • 발전소 정비·보수사업의 성공적 진행 • 내평, 림진강발전소 등이 새로 조성되어 조업 시작 • 성찬강 계단식발전소 등 98개 중소형 발전소 완공
	200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대비 1.2배로 전력생산 늘임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발전소의 개·보수와 기존 발전설비를 만가동 시킬 것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
2003년	200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투자로 발전능력 향상
	200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발전설비의 보수·정비와 기술개선을 통한 전력생산 증대 • 안변청년발전소 등의 발전소 건설과 중소형발전소 완공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변청년발전소, 심지연지구 수력발전소 등 중소규모 발전소 신설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 설비 대보수 • 수력발전소 효율제고대책 수립 • 냉암발전소, 아랑천발전소, 레성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흥주청년호발전소, 태천4호발전소 등 대규모수력발전소 및 중소수력발전소 발전능력 확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수력발전소 구조물보수정비, 발전소 신설 • 2002년 대비 전력생산 1.5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발전소 개간보수 • 불합리한 전력계통 개조 • 새로운 계량계측수단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평2호군민발전소,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 등 20여개 발전소 준공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정비 • 수력발전소 발전설비기술개조와 수력구조물보수사업 • 삼수발전소, 어랑천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레성강호발전소 발전능력 향상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수발전소, 어릉천1호발전소, 태천4호청년발전소, 흥주청년2호발전소 등 대규모 및 중소형 수력발전소 완공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력발전소의 타빈개조, 수력구조물보수,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보수와 기술개간에 힘을 집중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수력발전소 조업을 앞당기고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 화력발전소 설비보수와 석탄보장 사업 완수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발전설비 만기등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력발전소들의 완공 화력발전소건설의 빠른 진척으로, 2012년까지 완공 가능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설비들의 만기등과 만부하 보장 송변전체계의 합리적 구성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 사용 화력발전소건설의 집중적 추진 및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의 급진적 추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력발전소의 준공 여러 대상의 발전소들의 완공
	2012년 중점사업	-

〈채취공업〉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생산의 토대미관: 28직동청년탄광, 천상청년탄광에 새 갱, 새 채탄장 건설, 용등탄광 대형장거리 벨트콘베어 수송선 건설 추진
	200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 북부지구 탄광에서 확보탄량과 채탄장을 증대 기술장비 수준 높임
2001년	200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 북창, 덕천지구 탄광들에서 탄량 증대 용등탄광의 대형장거리 벨트콘베어 수송선 완공 전체 1만4천여대 막장설비들과 운반설비 원상복구 및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수량이 보충
	200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채탄장 및 채굴구역 개발, 안전 채탄방법 수용으로 지난해 대비 1.3배의 석탄 증산
2002년	200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사와 굴진에 주력하여 확보탄량 증대
	200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덕, 해산지구의 광산들과 제련소, 마그네사이트광공장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연 아연, 동 등의 유색금속과 마그네사이트광 생산 확대 도모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 등 중요광산들에 대한 개건·확장 추진 광산후보지들에 대한 탐사사업 강화, 희유금속과 비금속광물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을 위한 사업 전개 굴진과 갱간설을 확대하여 채탄장수를 늘리고, 새로운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운탄문제를 해결하여 석탄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1.1배 늘릴 것을 목표
2003년	200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석탄생산량 증가
	200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창, 북창, 덕천 개천, 구장지구 탄광들의 생산 정상화 전반적인 탄광들에서 확보탄량 증대 기술장비수준의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증대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생산정상화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탄장 수 증가 연 아연 정광생산 증산 귀금속과 희유금속광산 개발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 대비 철광석 생산 88% 증가, 마그네사이트광 생산 86% 증가, 연 및 아연 생산 14% 증가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남지구와 북부지구탄광에 투자 확대 전기아연생산 1.4배 증가 룡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 마그네사이트광산 생산 정상화 국내탄에 의한 마그네사이트광생산 4.2배 장성 경소마그네사이트, 전기용융마그네사이트 등 생산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광산 개건확장 공사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광산, 해산지구 광산 등 광산개건 현대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파광산의 채광 및 선광능력 제고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탄장 수 확대, 석탄생산 증대 채탄장 확대, 필수자재와 막장장비, 탄부들의 로동보호물자 확보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진을 선행시켜 기본굴진에 의한 탄량을 철저히 확보 • 채탄장 수 증가 • 선진적인 채탄방법 수용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생산능력의 증가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생산 증대 •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탄광들의 장비보강
	2012년 중점사업	-

〈철도운수〉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100대의 전기기관차가 생산 수리
	200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차, 화차, 기관차의 수리준비사업 계속추진 기본간선들의 철재강도 높임 강계-남림사이 철도전기회공사추진 동력과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
2001년	200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계-남림을 비롯한 200여리의 철도전기회 공사 완공 평양-신의주간 철도 전기 단독선 공사 진행 130여대 전기기관차와 1만6,500여량의 객화차 수리장비
	200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화물수송량 1.2배로 장성목표 기관차, 화차 수리로 가동률 증대 화차의 배어링화차로의 개조 사업 적극 추진 주요간선의 철길강도를 높이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 자동차 수송과 배 수송도 적극 늘림
2002년	200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 수송 능력 향상 기관차·객화차 생산 및 수리까지 장비 림석라-삼충광산 이천-세포 등 여러구간의 새 철길 조성 철도전기 단독선공사의 성과적 진행
	200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에 전력 주요간선의 철길강도를 높이고 인민생활물자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 전년대비 화물수송량 1.4배로 장성목표
2003년	200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백량의 객차생산과 철도의 기술장비 수준 향상
	200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운수부문에 대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현대적인 객차와 화차생산에 주력 기관차와 객·화차 수리장비사업 및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기관차, 화차 생산 및 수리 철길 기술상태 개선 대책 수립 철도화물수송 전년대비 20% 증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길구조물 기술상태 개선 9월10일배수리공장과 남포항 등 중요구역항의 능력확장공사 수행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차와 화차 수리 및 생산 철도화물수송량을 전년대비 20%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콩크리트침목, 철길부속품생산기지 등 신설 및 개선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길강도 높이고 전기기관차와 화차의 생산 수리 정상화 기동대수 증가 및 수송조직, 지휘 강화로 철도화물수송량 증가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운수와 육해운부문의 수송능력 확대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철길 조성사업 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 강화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체계 강화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및 기관차, 화차생산 기지 정비 보강
	2008년 중점사업	•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 강화하여 운영대수 증가 •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 지휘체계 확립 • 철도화물 수송량 정상화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철도화물수송량을 늘이는 한편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함

〈금속공업〉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다그치고 철강재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킴
	2000년 중점사업	• 금속공장 주요 생산공정들의 기술개선 • 철강재 생산증대
2001년	2000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산에서 (철광석) 생산 정상화의 담보 마련 • 감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제강소 정비 보강 • 12월 5일 청년광산 준공과 새로운 생산공정 꾸러 기초화학공업 토대 마련
	2001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철광산들에 만부하 가동 • 감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제강소들의 생산 정상화 투쟁으로 철강재 수요의 원만한 생산을 보장
2002년	2001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 룡양광산 등 중요광산들의 채굴설비들을 정비·보강, 채탄량 증대 토대 마련
	2002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의 철광산에 대한 설비보수정비와 박토 차리 확대를 통해 철광석 생산을 정상화 • 감책제철연합기업소 등의 제철·제강소를 정비 보강하여 생산 증대
2003년	2002년 사업실적	• 금속공장의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 강화
	2003년 중점사업	• 내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제철 제강기술 확보 •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전선에서 요구되는 철강재 생산에 주력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연 아연 생산 전년대비 76% 증가 • 철광석 생산 전년대비 46% 증가
	2004년 중점사업	• 감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미제강연합기업소 설비개선 대보수 • 선철생산은 2.5배, 압연강재생산은 5배 증산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정광생산은 1.9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철광석 생산 증가 및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 확대 • 천리미제강연합기업소, 감책제철연합기업소 개편현대화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초고잔력전자로 조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라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평향주철작장,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개편현대화 • 철생산공정과 마그네시움카복산공정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금속공업과 내화학공업 분야에서 공업의 자립성 강화
	2006년 중점사업	• 주체적인 철생산 기지들의 생산 정상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문경제련소와 단천마그네시움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 마련
	2007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률광산 등 철광산들의 채굴, 운반, 선광설비를 갱신 • 철생산기지 정비, 보강 • 감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활성화 •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철강재 수요 보장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감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미제강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 기술개선
	2008년 중점사업	•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 완성 • 설비 정비, 보강하여 생산 정상화 • 금속공장의 물동수송 문제 해결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 철생산의 비폭스화를 실현하는데 중점 •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적극 추진 •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금속공장들의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 새로운 합금강생산기지 조성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인 철생산 체계와 방법의 개선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철생산체계가 보다 완성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기술개건 • 화학정밀기계공장의 연료뿔프분공장 초첨단수준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 기계 전자공업부문 중요공장들의 현대화
	201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건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 • 화학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생산보장 • 화학섬유와 합성수지생산을 늘여 경공업원료의 국산화 비중 높임 • 단천지구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

〈농·수·축산업〉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농사혁명 감자농사의 중요기자인 대홍단군종합농장을 기계화분보기공장으로 지정, 현 대적 닭공장 소목장 건설, 대대적인 양어사업 전개 • 종자혁명, 두벌농사 투쟁
	200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짓기 위한 투쟁강화 • 감자농사에서 혁신(양강도, 함경북도) • 닭공장, 오리공장 장비개량, 사료공급체계 정립, 풀먹는 집짐승 위주로 사육, 양어장 건설 •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추진
2001년	200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정리사업: 평안북도(5만여정보) 완료, 황해남도 사업추진 • 5,100여대의 트랙터 및 농기계 정비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방침으로 2~3년내로 모든 협동농장들에 새품종을 받을 준비가 마련됨 • 대홍단군 종합농장의 감자 정보당수확고 증가 • 전국 많은 협동농장의 두벌농사 경험이 창조됨 • 황주닭공장 112호 닭공장, 타조목장 등 기금업 현대화 • 현대적 메기공장 건설, 운영정상화로 양어장 총면적 6,500여정보 증대
	200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방침 • 질 좋은 저급비료 생산으로 논밭정보당 20톤 이상, 정리된 토지는 40톤 이상 사비하고 미생 물비료, 생물농약의 생산 사비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완료 • 고와 알, 남새와 과일 공예작물 생산 증대 • 건설된 닭공장을 잘 운영하고 기존 닭오라돼지공장을 장비개건, 집짐승 먹이문제 해소,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운동 추진 • 건설중인 메기공장의 완공, 도처에 양어장 건설, 바다물고기 잡이 및 바닷가 양식 활성화
2002년	200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1년반만에 기본적으로 완료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완료(10만여정보) • 다수확품종들을 육종, 두벌농사경험을 비롯한 선진농사경험들이 다수 창조 • 현대적 닭공장, 양어기자들이 새롭게 꾸려져 인민생활 향상의 전황을 열어 놓음
	200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추진하고 두벌농사면적의 확대 •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도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는 토지정리사업 실시 • 각 지방의 현대화된 닭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염소, 토끼 등 풀 먹는 집짐승의 가족수를 늘리며 남새, 과일, 공예작물 생산을 확대 • 잉어, 메기 등의 민물고기 생산을 늘이며 바다물고기잡이와 바다양식물생산을 활발히 전개
2003년	200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정리 및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성과적인 진행 •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와 기금업과 양어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200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곡생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 • 기금류의 수를 늘이고 현대화된 닭공장의 생산 정상화 추진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종자, 대홍단식감자농사방법, 두벌농사방법 등 선진농법방법 도입 • 농업구조개선과 영농공정과학화 •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신원군 기념목장, 원산시염소목장 등 건설 • 흥주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개건 확장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관철 • 영농물자보장사업과 농촌경리관리운영방법 개선 • 콩, 감자, 고구마 생산성 향상 대책 강구 • 트랙터, 감자수확기, 콩탈곡기 등 새로운 농기계 도입 • 만바다어업, 세쇼어업, 양어 적극 발전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벌농사, 감자농사 수행 • 백마-철산물길공사와 금성간식차내부망공사 진행 • 전년대비 콩생산량 3배 증가 • 감자, 고구마 가공기지 건설 • 동해지구 수산기지에 인공배양장 건설, 자원증식장 확장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작자적작원칙,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관철 • 알곡피중면적 확대, 휴보산비료와 퇴비 생산 증가 • 단위당 알곡수확고 증대 • 선진영농방법, 새로 개발된 농기계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마-철산 물길 완성 • 광포오리공장 개건현대화 • 홍주닭공장, 북창오리공장 등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작자적작원칙, 두벌농사 관철 • 감자농사, 콩농사, 기름작물과 목화 재배 • 우량품종교체로 과수생산 증대 • 산진뽕나무 재배방법 도입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확품종의 새 종자 보급 • 선진영농방법과 새 농기계 도입 • 원산목장 원공 • 구상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기공작장 개건확장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작자적작원칙 관철 • 기름작물을 최대한 동원하여 질 좋은 퇴비와 휴보산 비료를 생산 사비 • 부침팡 면적 확대 : 대계도 간식지를 비롯한 간식지의 제방보강과 내부망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새창창고를 적극 실시 • 물길공사와 토지장리 추진 •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비롯한 축산기지의 실속있는 운영 보장 • 카낮은사과나무 발면적 확장 • 뽕나무밀식재배면적 확대하고 뽕발베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누에고치 생산 증가 • 어로방법, 고기배, 어구를 갱신, 바다나무양식과 재배어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 증대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확 품종 널리 도입 • 미루벌 물길공사 활발히 진행 • 평북도 돼지공장을 비롯하여 시리원, 강계, 함주 등지에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 다수확 품종들을 작자적작의 원칙 관철 •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널리 보급, 일반화 •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돼지공장들, 경공업공장들에 민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전선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 •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 것 • 수매량정부문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상업부문에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곡생산목표 달성 •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 확립 • 현대적 축산과 과일생산지들의 생산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과일, 알곡생산 증대 • 과수업발전에서의 변혁 • 원양어업, 세소어업, 바다기양식의 대대적인 도입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 식료공장 기술개선
	201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과 함께 농업부문에 력량을 총집중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임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세워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과일생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

〈과학기술〉

2000년	1999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전자공학부문에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 정밀전자 실용기구 연구개발: 새 재료 개발과 생물공학, 고밀도의 기공분야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 · 대용량 순환기능성 보이라 연구도입 · 발명건수 전년대비 1.3배
	200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첨대과학과 기초과학 발전에 주력 · 공업의 주체성강화, 인민경제 기술개건 실현, 인민생활과 직결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2001년	200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사업은 현 경제사업의 중심고리 · 경제구조와 부문별 특성에 맞게 기술개건사업을 추진 · 전기를 많이 쓰고 뒤떨어진 공정들과 살리가 나지 않는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투자효과성이 높은 대상부터 최선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개건 · 구성공작기계공장을 자동화보조기공장으로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 · 최첨단 전자기술로 장비된 현대적 기계설비 제작 및 기술개건에 필요한 장비의 완전한 보장 · 당의 과학기술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의 국가투자를 결정적으로 확대 ·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 보장 ·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과 과학기술정보사업 개선 강화
	200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 시행 · 바나나 생산 정상화를 위한 연구사업 완성 등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가치있는 과학 기술 성과 이룩 · 중요 생산공장의 현대화 실현, 라남의 봉화 창조 · 새로운 컴퓨터조립라인과 집적회로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컴퓨터 지역망, 부문망을 형성하여 정보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
2002년	200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하고 질실한 부문과 대상들 적은 지금으로 빨리 은을 낼수 있는 대상부터 최첨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현대화를 추진하고, 단계별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야 함 · 전자공학, 기계공학, 생물공학 등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국가적 투자를 확대 ·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계속 갱신하여야 함 · 과학기술부문 인재 양성에 주력
	200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이 성공적으로 종료 · 정보과학기술, 생물공학, 신소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의 기초 마련
2003년	200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는 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발전에 주력 ·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원칙하에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 주력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과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에 컴퓨터조종반생산공정 신설 ·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 수행 · 신형 트랙터 개발
2004년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 역할 강화 ·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사업 강화 · 선진과학기술 도입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과학기술발전계획과제 수행
2005년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국가중점대상과제수행에 역량 집중 · "2월7일과학자, 기술지몰격대" 활동 강화 · 과학기술행정사업과 규격화, 표준화 사업, 품질감독사업 강화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과제 수행
2006년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 수많은 발명과 과학연구성과들이 인민경제의 기술개간에 기여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과학기술발전과제들을 완수 핵심기술, 첨단과학기술 개발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제품들을 적극 개발, 보급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 수행 주요 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간에 이바지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착수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토대 구축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 정보화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를 높일 응대한 설계도 라고 평가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 생산과 기술을 밀착시켜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 향상 최첨단 돌파전을 과감히 진행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의 CNC화 핵융합의 성공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생물공학발전에서의 큰 진전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정보기술, 생물공학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 발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주요 내용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이다. 로동당 규약에서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당 대표자대회는 2012년 4월 11일까지 총 4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 당 대표자회는 1958년, 제2차 당 대표자회는 1966년, 그 후 44년만인 2010년에 제3차 당 대표자회, 그리고 올해 들어 제4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는 2010년 9월 28일에 개최되어 김정일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재추대, 김정은에게는 대장 칭호를 부여하였고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김정은, 리영호를 선임하였다.

이번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권력 재편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금번에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로, 김정은을 당 ‘제1비서’ 로 추대하여 김정은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도 추대되어 실질적인 권력 기반도 확보하였다.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룡해, 김원홍의 부상,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역이었던 박봉주, 함남의 불길을 선도했던 곽병기 등 경제계 인사들의 진입 등도 눈에 띈다.

「로동신문」에서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다음 네가지 의정을 토의하였다고 밝혔다. 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②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③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④ 조직문제였다. 본 자료는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금번 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의원과 약력 등을 정리하였다.

정리: 김은영 전문연구원(key@kdi.re.kr)

1. 주요 의제 및 내용

금번 제4차 당 대표자회의 주요의제는 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②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③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④ “조직문제” 였음.

가. 김정일을 총비서 추대하는 결정서 낭독

「로동신문」에서는 금번 당 대표자회 첫 번째 의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갈데 대한 결정서” 낭독하여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였다고 밝힘

나. 조선로동당규약 개정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됨에 따라 당의 수반으로서 조선로동당을 이끌 새로운 직위가 필요하게 되어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이 불가피해짐. 이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제1비서는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 나간다고 규정. 또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비서로 추대하였다고 다시 한번 밝힘.

조선로동당이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아 김정은의 영도 하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힘.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안이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높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데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

다.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제 1 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 낭독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라는 제하의 결정서를 낭독하여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에 올랐음을 확인. 또한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 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고 선포

라. 조직문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보선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소환 보선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한철해, 김원홍, 리명수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곽범기, 오극렬,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당중앙위원회 비서 소환 보선	
▪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희, 곽범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위원 소환 보선	
▪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한철해, 리명수, 김락겸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소환 보선	
▪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영춘, 곽범기, 박봉주

2. 신입 위원의 약력

「로동신문」에서는 신입 위원들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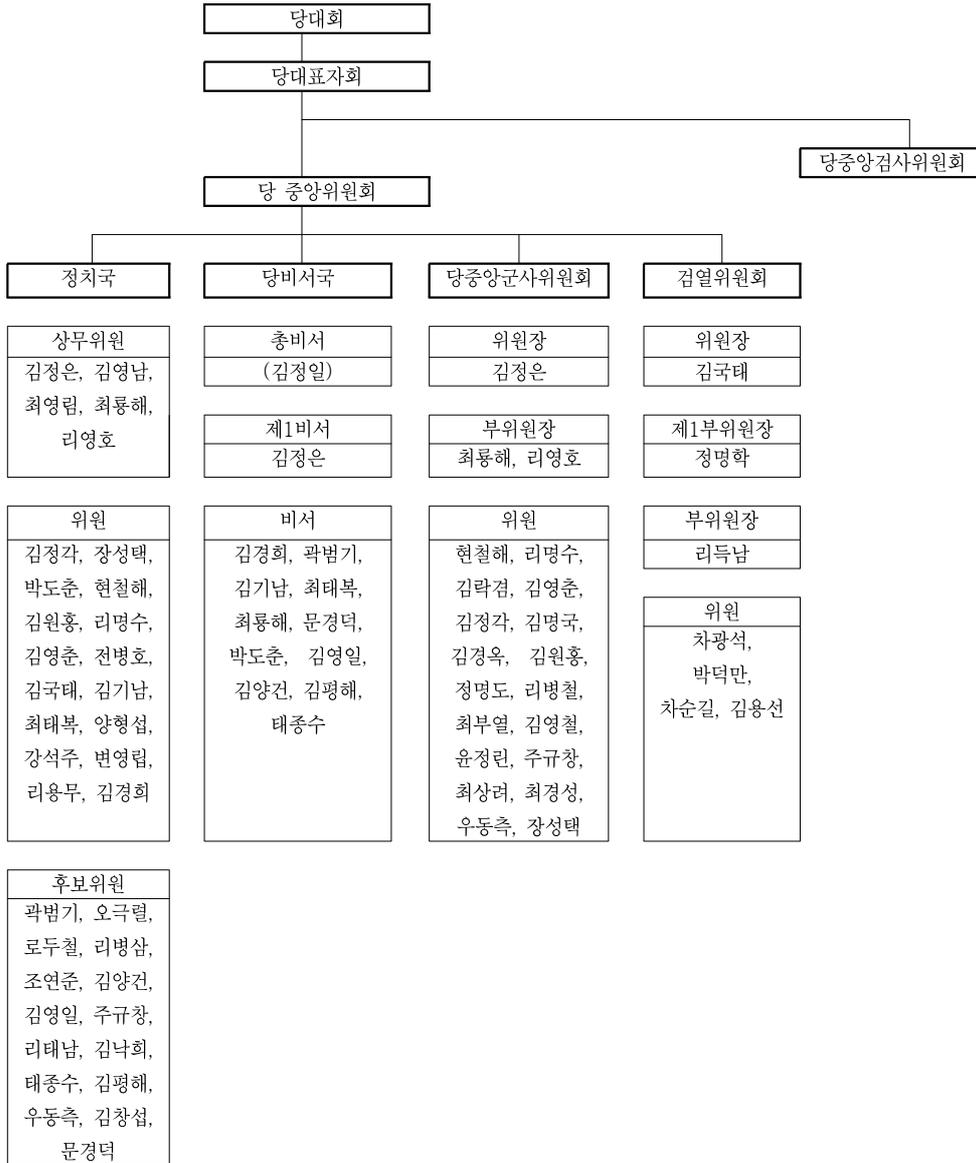
표 1 제4차 당대표자회 신입위원 약력

성명	조선로동당 직위	출생	군 입대	약력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1950.1.15 황해남도 신천군	196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후 정치경제학전문가 자격 받음. 사로청 중앙위원회 부부장, 부장, 부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황북도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2012년 4월부터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각	정치국 위원	1941.7.20 평안남도 증산군	195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대대장, 군단부사령관, 훈련소참모장, 소장 인민무력부 부부장 총정치국 제1부국장 2012년 4월부터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정치국 위원	1946.1.22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평양시당 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장 2012년 6월부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성명	조선로동당 직위	출생	군 입대	약력
박도춘	정치국 위원	1944.3.9 자강도 량림군	196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고급당학교 졸업 광산당비서,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도당비서 겸 부장 자강도당 책임비서 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현철해	정치국 위원	1934.8.13 함경북도 경성군	19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졸업 후 선박기사 자격 받음. 인민군총정치국 담당지도원 조직부장, 군단정치부장, 후 방총국장, 총정치국 부국장, 국방위원회 정치부장 겸 총무국장 2012년 4월부터 인민무력부 제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김원홍	정치국 위원	1945.7.17 황해북도 승호군	196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고급당학교 졸업 인민군총정치국 지도원 과장, 부부장, 군단정치위원, 사령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2012년 4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정치국 위원	1934.2.20 함경북도 명천군	19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군단정치부장, 참모장, 사령관 총참모부 제부총참모장 겸 직전국장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2011년 4월부터 인민보안부장
곽범기	정치국 위원	1939.11.20 함경남도 리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후 계획경제사 자격 받음. 혁신공작기계공장 분공장 지배인 기계공업부 제부부장, 부장 내각부총리 함남도당 책임비서 2012년 4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오극렬	정치국 후보위원	1930.1.7 함경북도 온성군	19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군대학 졸업 공군사령부 부사령관 공군대학 학장 공군사령관 총참모장 당중앙위원회 부장 2009년 2월부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정치국 후보위원	1950.10.2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책공업대학 졸업 후 류체기계기사 자격 받음. 국가계획위원회 지도원, 부국장, 국장, 부위원장 내각부총리 2009년 4월부터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리병삼	정치국 후보위원	1935.7.1 평안남도 문덕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군단정치부 지도원, 부부장, 정치부장, 정치위원 총정치국 부국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2009년 5월부터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겸 당책임비서
조연준	정치국 후보위원	1937.9.28 함경남도 고원군	195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후 정치경제학전문가 자격 받음. 김일성종합대학 상급교원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과장, 과장 함남도당 조직비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2012년 1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부부장

3. 조선로동당 조직도

제4차 당대표자회 이후 선임된 위원들을 반영한 조선로동당 조직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¹⁾



1) 기존의 위원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의 권력구조-조선로동당(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5)에서 참고하였고, 제4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위원들을 추가하여 조직도를 작성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1일~4월 17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1일~4월 17일

대내경제 143

- 북한 산림, 매년 평양 면적만큼 감소 | 143
 - 북 시장 외화 통제 풀려 - 물가 완만한 상승세 | 143
 - 북 '장군님 100일 애도' 25일 종료 | 144
 - 북 평양시에도 하루 2시간만 전기 공급 | 144
 - 북, 작년 지하자원 수출 2배 급증 | 144
 - 북 시·도 당대표회 행사 마무리 | 145
 - 북 강성국가 상징 자강도 희천발전소 완공 | 145
 - 유엔 '북 인구, 2050년까지 8% 증가' | 146
 - 김정은, 제비서·당군사위원장·정치국상무위원 추대 | 146
 - 안보리 북 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 147
 - 북, 개성-신의주 새 고속도로 건설계획 | 148
-

농업 및 식량 149

- 북, 지난 해 4분기 곡물 수입 이례적 급증 | 149
- 미 대북지원 절반이상 식량, 약 8억달러 | 149
- 북,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 | 150
- 폴란드, 북한에 설탕 166톤 지원 | 150

대외경제 152

- 1월 미국 대북 수출 486만달러 | 152
- 중, 북에 1000억원대 무상원조 | 152
- 북한 지난 해 대EU 교역 최대 흑자 | 152
- 북, 대중국 식용유 수입 전년대비 4배 | 153
- 북중교역 사상 최대, 전년 대비 62.4% 증가 | 153
- 북러 상호 투자 증가, 경험은 성과 없어 | 154
- 중, 나진항 부두 건설 투자자 모집중 | 155

남북경협 156

- 북 투자 위해 남북경협보험모델 도입 | 156
- 1·2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36% 증가 | 156
- 현대아산 금강산호텔 중국이 사용 | 157
- 귀환 국군포로 정착 위한 지원센터 출범 | 157

대내경제

북한 산림, 매년 평양 면적만큼 감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1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림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힘. 2010년 현재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의 47%인 5백66만6천 ha로, 이는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 8백20만1천ha와 비교할 때, 30.9%인 2백53만5천ha나 줄어든 것임. 지난 20년 동안 매년 12만7천ha의 산림이 없어진 것으로, 해마다 평양 면적(11만2천 3백ha)만큼의 산림이 사라진 셈임. 북한에서 베어진 나무는 대부분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료용 생산이 5백91만1천m³ 로 가장 많았고, 산업용 목재 생산량은 1백50만m³ , 일반목재 생산량은 28만m³ 에 그쳤음. 산림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1990년 2억3천9백만톤에서 2010년에는 1억7천1백만톤으로, 20년 사이에 30% 감소. **Voice of America**, 3.13
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3.14

북 시장 외화 통제 풀려 - 물가 완만한 상승세

북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가 다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일 사후 ‘외화사용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최근 들어 단속이 유야무야 되면서 이전 거래량을 회복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DailyNK」가 전함. 소식통은 “거의 모든 물건이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조선쌀은 1kg에 5위안, 중국쌀은 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함. 이어 “장미당에서 위안화와 달러 거래가 허용되고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안화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전장사꾼들도 위안화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임. 이 소식통에 따르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주 1위안에 635원하던 환율은 670원대로 올랐다고 함. 환율과 더불어 식량가격도 오름세를 보임. 지난주 청진시장에서 kg당 3000원 하던 쌀값이 17일에는 3800원을 기록함.

DailyNK, 3.19

북 '장군님 100일 애도' 25일 종료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100일 간의 공식 애도를 오는 25일로 마무리함.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월 25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아버지(김정일)를 잃은 100일이 되는 날” 이라고 밝힘.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100일 추모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날짜까지 특정하며 애도기간이 100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적은 처음임.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애도 기간을 마무리한 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초점을 맞춰 사회분위기를 전환해 잔치분위기에서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3.21

북 평양시에도 하루 2시간만 전기 공급

북한이 올해 들어 평양시에 전기를 하루 평균 2시간 인팍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전함. ‘오늘의 북한소식(447호)’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오후 6시~10시 하루 평균 4시간씩 전기를 공급하다가 올해 들어 공급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음. 중앙당의 한 간부를 인용해 “중국에 수출하던 석탄을 발전소에 돌리기로 하면서 한때 전력공급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대중 석탄 수출이 계속되면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당에서도 전력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 라고 말했다고 전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3.22

북, 작년 지하자원 수출 2배 급증

북한이 지난 한 해 18억달러 이상의 지하자원을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지하자원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최소 18억달러로 약 9억달러로 추정되는 전년의 2배로 증가했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 자료와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투자진흥기관(KOTRA)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북한이 벌어들인 지하자원 수출액의 대부분은 대중국 수출에서, 그 다음으로는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에서 각각 발생함. 유로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한이 유럽연합에 수출한 지하자원은 약 7천만유로(9천400만달러)임.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거의 대부분을 수입함. 한국무역협회의 2011년 북-중 수출 자료에서 주요 광물자원만 뽑아 집계한 결과 최소 17억5천만달러의 규모임. 이는 북-중 수출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으로 알려진 석탄과 철광석, 구리 등 주요 품목만 뽑아 계산 것으로 이 외 광물자원까지 합치면 이를 넘음. 한편 지난해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중국 수출의 경우 총 수출액(25억달러)의 70% 이상을,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에서는 총 수출액(1억6천만달러)의 약 60%를 차지함. 또 지난 해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서도 증가해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010년(8억6천만달러 이상)보다 배가 늘었고, 유럽연합국으로의 수출은 2010년(7천700만달러)에 비해 약 20% 증가함. **Radio Free Asia**, 3.29 **외 조선일보**, 3.31

북 시·도 당대표회 행사 마무리

북한 노동당이 자강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나선시 당대표회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김부위원장은 앞서 인민군과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황해북도, 남포시 등에서 당대표회에서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된 바 있음. 이로써 북한은 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당대표자회 대표 선출을 마쳤음. 노동당 규약에는 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차하급 당 조직의 대표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음.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3.30 및 4.1

북 강성국가 상징 자강도 희천발전소 완공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온 자강도 희천발전소(수력발전소)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조선중앙통신」은 희천1호발전소와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각각

진행됐다고 전함. 청천강 상류에 있는 이 발전소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3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유훈사업으로 간주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매진해왔음.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태종수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함.

DailyNK,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46

유엔 ‘북 인구, 2050년까지 8% 증가’

유엔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은 2050년에 북한의 인구가 약 2천6백만명(26,382,000)을 넘을 것으로 전망함. DESA은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북한 인구를 2천4백34만(24,346,000)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인구 규모가 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북한의 연간 인구 증가율이 2010년 0.41%에서 2020년 0.37%, 2030년 0.15%로 꾸준히 떨어져 2040년에는 -0.01%, 2050년에는 -0.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0년 북한 인구는 2천5백만, 2030년에는 2천6백만, 2040년에는 2천6백44만까지 늘고, 2050년에는 다소 준 2천6백38만으로 추정함. DESA은 북한의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2010년에 북한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천4백65만으로 전체 인구의 60.2%인데, 2050년에는 약 1천9백만으로 72%에 달할것으로 예상함. Voice of America, 49 외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410

김정은, 제1비서·당군사위원장·정치국상무위원 추대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됨. 북한은 지난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주석제를 폐지한 바 있어, 이런 전례에 따라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 부자를 ‘영원한 지도자’로 규정하고 ‘현재의 지도자’로 김정은 제1비서를 내세운 것으로 보임. 또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규약과 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셨음을 선포했다” 고 밝힘. 또한, 당대표자회 에서 당규약 개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며,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총비서’ 이고,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의 당’ 이며, 제1비서직을 신설하되 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한다고 전함.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규약 개정안은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고 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라는 데 대하여 새로 규제했다” 고 전하며, “노동당규약 개정안은 노동당 제1비서직을 새로 내오고 노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나간다는 데 대해 규제했다” 고 덧붙임.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4.11 외 4.12

안보리 북 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strongly condemn) 의장성명을 채택함.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임.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 (serious violation)임을 강조한다” 고 밝히며,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 (grave security concerns)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 (deplore)” 고 전함.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고 덧붙임. 성명에는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 위원회가 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됨. 안보리는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으며, 아울러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4.16

북, 개성-신의주 새 고속도로 건설계획

북한이 387.1km에 왕복6차선으로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고속도로와 함께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향산을 잇는 지선도로도 함께 건설될 예정이며 지선도로는 총길이 80km 이상에 왕복 4차선 도로임. 신설된 도로에는 연장 36.4km에 달하는 77개의 교량과 연장 26.3km의 터널 18개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 신설도로 구간에는 12곳의 휴게소와 19개의 톨게이트, 18개소의 인터체인지 외에 교차로 1개소도 포함되어 있음. 총 건설비는 65억달러이며, 미국의 설계용역 회사가 고속도로의 설계를 맡은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임. 그러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민간 건설 회사들에 도로 건설 투자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탓에 아직까지 선뜻 나서서 건설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함. **Radio Free Asia**, 4.16 **외 연합뉴스**, 4.17

농업 및 식량

북, 지난 해 4분기 곡물 수입 이례적 급증

북한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 석 달 간 중국으로부터 약 13만톤의 곡물을 수입했으며, 반면을 1월에는 중국에서의 식량 수입을 대폭 줄였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은 약 13만톤으로 종류별로는 각각 쌀 4만7천톤, 옥수수 4만6천톤, 밀가루 3만톤 등이었음.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전 분기 수입량(101,546톤)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북한이 한 분기 동안 이처럼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한 것은 드문 일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해 가을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수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함. 북한이 당시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은 약 6천만달러로, 작년 한 해 총 곡물 수입액의 약 40%를 차지함.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 수입량은 올해 1월 들어 크게 감소함.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북중교역현황에 따르면 1월 한 달 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7천5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임. 한편 1월 북-중 간 교역액은 총 4억2천만달러로 수입이 2억8천만달러, 수출 1억4천만달러로, 이 기간 북-중 간 최대 수입품목은 연료, 최대 수출품목은 무연탄임. **Radio Free Asia**, 3.20

미 대북지원 절반이상 식량, 약 8억달러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량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 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총 13억1천375만달러(약 1조4,870 억원)로 집계됨.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90만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로는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 (225만8천164톤)로 전체의 53.9%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이후에는 3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임. 또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90만달러가 각각 투입되었음. CRS는 그러면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 등 안보관련 협상과의 연계 ▲모니터링 개선 문제와의 연계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중국에 대한 대북식량지원 모니터링 개선 촉구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함. **Voice of America**, 41 **외 동아일보, 연합뉴스**, 42

북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

북한이 최근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기상청에 따르면 3월 북한의 평균기온은 0.9도로 평년의 1.4도보다 0.5도 낮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에 눈이 많이 내려 적설량이 16~24cm에 달함. 또한 “최근 조선의 전반적 지방에서 때아닌 눈이 내리고 센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며 “앞으로 저온현상이 지속되면 올해 농업생산에 후과가 미칠 것” 이라고 우려함. “이상기후 현상은 3월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봄철에 계속 될 것으로 본다” 며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 땅이 깊이 언 데다가 봄철에 저온현상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농업부문에서 밭갈이, 씨부림 등 영농작업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 고 덧붙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11년 식량 생산량을 466만톤으로 집계했으며,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식량수요를 약 540만톤으로 추산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74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48

폴란드, 북한에 설탕 166톤 지원

평양 주재 폴란드대사관은 폴란드가 기부한 자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이 구입한 설탕 166톤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힘. 폴란드는 지난 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WFP에 미화 15만6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중 일부가 설탕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이번에 지원된 설탕으로 북한 내 WFP공장에서 고열량 가공식품과 초콜렛 과자를 만들어 동북부 지역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49

대외경제

1월 미국 대북 수출 486만달러

미국 상무부는 무역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1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백86만4천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전체 미-북간 교역액 9백4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며,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임.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북한으로 수출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 상업적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대북 구호사업에 사용된 물품들로 예상된다. **Voice of America**, 312 **외 연합뉴스**, 313

중, 북에 1000억원대 무상원조

중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체제 조기 안정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무상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2월 하순 북한에 6억위안(약 1065억원) 상당의 물자를 무상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들어 원조를 시작했다고 전함.

“기존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던 방식은 주로 차관 또는 물물교환형 구상무역이었으나 이번엔 순수한 무상원조”라며 “중국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를 제외한 비정기적 무상지원 가운데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조는 현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품을 주는 방식이며, 북한은 우선 식량을 요구했으며 현재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 쌀과 옥수수가 육로와 철로로 북한에 운송되고 있음. 북한은 식량 외에도 비료와 건자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짐. 북한이 원하는 식량 규모는 원조 금액과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할 때 최대 20만톤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315

북한 지난 해 대EU 교역 최대 흑자

북한이 지난 해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8,120만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10년 3,100만유로보다 2.6배 이상 많은 새로운 최고 기록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대북한교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해 유럽연합에 수출한 금액은 1억2,180만유로로, 전년도인 2010년(9,900만유로)보다 23.3% 증가한 것임. 반면, 지난 해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입액은 전년도(6,800만유로)보다 40.3%나 감소한 4,060만유로임. 지난 해 전체 교역액은 1억6,240만유로로 전년도(1억6,600만유로)보다 3% 줄었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교역액은 7,500만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50%나 줄었지만, 4분기 교역액이 8,800만유로를 기록함.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품 가운데는 석유와 광물이 7,100만유로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이어 의류가 2,399만유로, 기계류와 수송장비가 1,000만유로로 뒤를 이음.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수송 장비로 1,4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이어 기타제조업 제품이 1,100만유로, 농산품이 700만유로 순임. 한편, 지난 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액은 684억유로로 북한-유럽연합 간 교역액 보다 400배이상 많음. **Voice of America**, 3.26 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3.27

북, 대중국 식용유 수입 전년대비 4배

북한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중국에서 1만2천톤이 넘는 식용유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됨.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1월에 7,400톤, 2월에 5,300톤 등 모두 12,700톤을 수입했음.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3,310톤)보다 3.8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며, 지난 해 전체 식용유 수입량(36,489톤)의 3분의 1이 넘는 양임. 북한이 중국에서 식용유를 수입하는데 지불한 금액도 지난 해에 비해 4배 늘어난 1,800만달러에 달함. 한편, 2월까지 북한과 중국 간 농축수산물 교역액은 지난 해보다 73% 늘어난 7,500만달러를 기록했음. 이 가운데 북한의 수입액은 6천만달러로, 지난 해(29,637,000달러)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반면 북한의 수출액은 지난 해보다 12% 늘어난 1,600만달러에 그치면서, 4,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Voice of America**, 3.28

북중교역 사상 최대, 전년 대비 62.4% 증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62.4% 증가한 56억2919만달

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07.4% 증가한 24억6,419만달러, 수입은 38.9% 증가한 31억6,501만달러에 달함. 반면 남북 교역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억1,386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한국의 대북한 반출은 8억19만달러로 7.8% 감소했고, 대북한 반입은 12.4% 줄어든 9억1366만달러에 그침. 한국의 대북한 반출·입은 개성공단 입주 120여개 한국 기업의 원부자재 반입이나 생산 완제품 반출이 대부분을 차지함. 무역협회는 북·중 무역 확대는 한국과의 교역중단으로 외화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이 중국에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음. 아울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의류 봉제 등의 수탁가공에 따른 수출을 확대하고, 원유 등 자체 수요물품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힘. 북한의 지난해 무연탄, 철광석 등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6.4% 증가한 16억474만달러에 달했고, 원유·휘발유·석탄 등의 수입액은 62.5% 증가한 7억9313만달러를 기록했음. 또 중국으로부터의 의류 봉제 수탁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섬유제품 수출이 4억2230만달러로 34.3% 증가함. **DailyNK**, 43

북러 상호 투자 증가, 경험은 성과 없어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투자가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극동 지역의 아무르를 중심으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은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집계한 데 따르면, 2011년(9월 기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총 1천500만달러로 2010년(870만달러)에 비해 약 80% 증가했음. 분야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엔진(62.5%), 광물(17.4%), 양조(10.3%), 제빵 도매업(10%) 등이 북한의 주요 대 러시아 투자 품목임.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도 2009년 590만달러에서 2010년 1천550만달러, 2011년(9월 기준) 2천680만달러로 계속 늘어남. 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2009년 18만 달러에서 2010년 200만달러, 2011년 9월 2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함. KOTRA는 러시아가 오는 10월 하산과 북한의 라진을 연결하는 북러 양국 간 국경 화물열차를 재개통할 예정인 데 이어, 11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부채도 탕감해 줄 계획이라며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의지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북러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고 분석함. **Radio Free Asia**, 43

중, 나진항 부두 건설 투자자 모집중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에 여객과 화물 수송을 위한 부두 건설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나진항무역여객부두사업' 제목의 이 투자 유치 제안서에 따르면 총 3천300억 위안(약 5천200만달러)이 투입돼 1만톤 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부대 시설이 나진항에 건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대 시설은 기존 1~3 항 맞은편 신항 부지 해안선 208미터를 따라 총 6만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여객선 접안을 위한 부두는 평균 수심 14미터, 총 점유 수면 면적 2만3천760제곱미터의 바다 위에 돌제부두형태로 건설됨. 지난 달 중순 중국 요녕성 산하의 한 지방 정부가 관내 기업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이 투자 제안서는 북한의 나선시 토지국으로부터 45년 간 부두 용지 사용권을 이미 획득했다고 밝혔다. 투자 유치 제안서가 중국의 다른 지방 정부를 통해서도 해당 지역의 기업들에게 배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내용의 투자 제안서가 2010년말 지린성 일대 기업들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나진항 개발이 1년 넘게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자 모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Radio Free Asia**, 46

남북경협

북 투자 위해 남북경협보험모델 도입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남북경협보험과 비슷한 투자손실 보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보험사가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전함. 또한,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국제보험에 간접 가입하기 때문에 북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투자손실 걱정을 덜 수 있다”며 “다만 실효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북한이 외국인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보험사를 설립해 국제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지난 해 말 신설되거나 개정된 경제법은 14개로 모두 ‘투자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거둬들일 경우 보상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며 “이런 조치들이 더욱 과감한 경제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대북소식통은 전망함. **연합뉴스**, 3.11

1·2월 남북교역, 전년대비 36%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남북교역액이 3억2천만달러로 집계됨.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235,376,000) 보다 36% 증가한 것임. 항목별로 보면, 2월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1억6천만달러로 전년도보다 48%나 늘어났으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입액도 전년도보다 25% 늘어난 1억6천만달러에 달함. 관세청은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모두 중단된 것을 고려하면, 2월까지 남북교역액은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인 것으로 풀이됨. 품목별로 보면, 반출의 경우 의류 원부자재 등 섬유제품이 5천2백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제품(\$49,785,000)과 기계(\$29,005,000)가 뒤를 이음. 반입에서도 역시 의류 완제품 등 섬유제품(\$66,396,000)과 전기전자 장비(\$50,378,000), 기계(\$9,015,000)순임. 지역별로는 서울의 남북교역 규모가 1억9천만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교통별로는 도라산 육로를 이용한 것이 3억2천만달러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함. **Voice of America**, 3.15

현대아산 금강산호텔 중국이 사용

중국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북한 금강산 관광이 4월 14일 시작하면서 현대아산이 개발한 코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지린성의 여행사 네 곳이 다음 달 14일부터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차이나데일리」 등이 보도했는데, 이 여행상품은 만물상, 해금강, 구룡연 등 현대아산이 독점하고 있는 관광코스과 금강산호텔 등 현대아산 소유의 시설을 이용함.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전함. 여행 코스는 창춘을 출발해 훈춘시를 거쳐 무비자로 북한에 입국한 뒤 나선특별시에서 유람선으로 금강산으로 향하며, 3박 4일 코스로 여행경비는 3000위안(약 53만 원) 안팎임.

동아일보, 322

귀환 국군포로 정착 위한 지원센터 출범

귀환 국군포로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가 출범함. 지원센터는 국방부의 귀환 국군포로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지원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사)북한인권정보 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초대 센터장에는 윤여상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장이 취임함. 센터는 향후 귀환 국군포로들의 가족관계 회복, 장기구금 및 감금 경험에 대한 치료, 사회적 관계망 회복 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서비스는 현재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해 있는 58명과 향후 귀환하게 될 국군포로들에게 제공됨. 이와 함께 센터는 ‘원스톱 콜센터’를 설치해 정착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또한 국군포로간 연례 모임 행사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국군포로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임. 더불어 센터의 사업은 귀환 국군포로들의 기초생활실태 점검과 기초적인 사회 적응교육 및 재교육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임. DailyNK, 323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